

인권정보자료실
R1.1.10

인권하루소식

합본10호
(98년 상반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 (1144호 F86) 포이출판

인권정보자료실
R1.1.10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 IMF 희생자 위령제 - "사회적 타살 중단하라"
- 2면 · '비리폭로' 공무원 해임 - 「너는 그렇게...」 저자 이용호 씨
- 주간인권호름(6월15-6월21일)

제1152호(98. 6. 24 수) / 296

- 1면 · 경찰에 맞서지 말라? - 경찰청 앞 시위 불허, 기자 브리핑 방해
- <현장스캐치> 외국인노동자 시위 "벌금 낼 돈 없어요"
- 2면 · <인터뷰> 엠네스티 방한단, "김대중 정권에 실망" - 경제위기, 인권침해 변명 안돼
- <새로나온 책> 「언론을 바로 세우는 사람들」 (한겨레신문전국독자주주모임 지음)

제1153호(98. 6. 25 목) / 298

- 1면 · 경찰청 집회금지 불복 - 인권운동사랑방, 행정소송 제기
- 다원건설(구 적준), 불법용역 드러나 - 경찰청, 의법조치 약속
- 2면 · 국가인권위 토론회 - 엠네스티 관계자, "국가인권위, 민간단체 참여 필수"
- 노숙 농성 잇따라 - 비용바다, 질병 고통 호소
- 양심수 군면제 요청 - 양군모 "이중수감" 주장

제1154호(98. 6. 26 금) / 300

- 1면 · 누굴 위한 '외자유치'인가 - 일본인 인수기업, 노동기본권 탄압
- 진보민청 중앙간부 전원연행 - '양심교백운동' 본격화 앞둔 시점
- 2면 · <인터뷰> 염규홍(국내 최초 인권출판사 설립) "비교하지 않는 사회를 희망한다"
- <'97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 요약> 북한 "심각한 식량부족, 자유권조약 탈퇴 선언"
- 3면 · <'97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 요약> 남한 "노동권, 양심수, 사형문제 여전"

제1155호(98. 6. 27 토) / 303

- 1면 · "재범 판단 근거 없다" -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승소
- <국제인권소식> 영국 - 신자유주의 정책, 의료권 후퇴
- 2면 · 일본은 책임방기, 고국은 수수방관 - 전쟁피해 재일한국인, 헌법소원 청구
- 경찰청 항의방문 도중, 유가족 12명 경찰 연행
- <만화사랑방> 경찰권력의 횡포
- 3면 ·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제1156호(98. 6. 30 화) / 306

- 1면 · "차별에 맞서 하나로" - 동성에 모임, 전국적 협의체 구성
- 연행됐던 유가족, 벌금형 선고
- 2면 · "자유로운 호흡을 갈망한다" - 결핵병원 민간위탁 대책위 구성
- 주간 인권호름(6월22일-6월28일)
- 3면 · <인권시평> 곤봉으로 때맞는 외국인노동자 - 박천웅(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장)

인권하루소식

98년 1월

(제1036호 - 제1052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월 6일(화)

제 103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미결수 무죄추정 원칙 지켜라”

서준식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미결수에게 수의(제소자용 의류)를 입고, 검찰조사 대기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는 행위 등이 헌법에 보장된 '무죄로 추정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다.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는 3일 대리인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이석태 등)를 통해 미결수 채우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 제 기지를 청구했다.

서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첫째 내용은 검찰조사 대기 과정에서의 수갑착용문제. 서 씨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27일까지 2-3일 간격으로 서부지청 소속 담당검사에게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서 씨는 검사 조사가 없을 때에는 내내 수갑을 찬 채로 대기감방에 구금되었으며, 대기감방에 구금된 상황에서 식사 때는 물론 감방내 변기를 사용할 때도 수갑을 차고 있었다. 이에 대해 청구대리인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는 "피고인으로서 구속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가 있다"며, "구속영장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권리는 일정한 수용시설에 구속함으로써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그쳐야 하고 그 이상 권리의 제한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청구인측은 "감방 내에서조차 수갑을 채운 처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신체 자유(제12조1항) 무죄로 추정될 권리(제27조 제4항)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 금지(제37조) 등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번째 헌법소원은 구치소 내의 신문 잡지 구독과 관련된 내용이다. 영등포구구치소측은 서 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권하루소식>의 구독을 금지하고, 서 씨가 구독을 신청한 한겨레신문 및 문화일보에 대해 서 씨와 관련된 기사를 수시로 삭제한 채 구독하게 했다. 청구인측은 "이러한 처분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알권리), 평등권, 무죄추정의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서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세번째 내용은 이미 93년 12월에도 청구되었다가 각하된 바 있는 미결수 수의착용 문제다. 청구인측은 "아직 유죄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미결수용자들의 경우, 그들의 신체를 구속하였다는 것외에는 모든 면에서 무죄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미결수, 공자들에게 강제로 수의를 입히는 것은 그의 유죄를 전제로 한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다름없이 보이기 때문에 그의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고 인격을 침해함으로써 결국은 무죄로 추정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라고 밝혔다. 우리 헌법은 세계인권선언(제11조)이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제14조)의 정신에 따라 무죄추정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훨씬 뒤쳐져왔다.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미결수 인권문제가 획기적인 조치가 내려지게 될지 주목된다.

출판인 국보법 구속 구 사노맹 관련자 4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출판인 4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8-10시경 구의동의 미래정보센터에서 발행하는 부정기간행물 '미래통신'에 실린 내용과 관련해 편집책임자 강공우(30), 백성기(35), 김치영(29), 정문일(30)씨 등 4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구속되었다. 주변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미래통신'내 정세시론란에 실린 백성기씨의 글을 문제삼고 있는데, 1-2호에 사회주의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미래통신'은 97년 초 1호를 발간한뒤 6월 16일자 5호 발간을 마지막으로 6호를 준비중에 있었으며, 전국연합에서 발간하는 주간통신, 컴퓨터 통신 공간에 올라오는 자료 등 기존 존재를 통해 이미 소개된 자료를 정지동향, 이론동향, 자료모음 등으로 나누어 재정리하고 편집하여 발간하는 비정기 간행 잡지이다. 한편, 구속된 4명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과 관련해 복역한 뒤 출소한 사람들로 지난해 9-10월 경부터 내사가 계속 진행중이었다고 한다.

서준식 대표 1차공판

Ⓣ: 1월 15일(목) 오전10시
곳: 서부지청(마포) 407호 법정

<인권하루소식> 편집인이 98년 1월부터 김수경 씨에서 박래군 씨로 바뀌었습니다. 새해에도 좀 더 열심히 인권현장을 뛰어 다니겠습니다.

◎세밀 인권소식◎

일본역류 후꾸꾸 노동자 귀국 명동농성 마무리... "지역투쟁으로"

일본 동경탑 점거시위를 벌이다 구속돼 현지에 억류돼 있던 한국후꾸꾸 노동자 대표단이 지난달 26일 귀국했다. 유동만 노조위원장 등 대표단 3인은 10여일에 걸친 구금 끝에 벌금 20만원 (2백80만원)씩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한편, 한국후꾸꾸 노동자들은 27일 1백65일간에 걸쳐 진행한 명동농성 농성을 마치고 농성해단식을 가졌다. 이들은 해단식에 즈음해 "지역과 현장으로 투쟁의 근거지를 옮겨 더 큰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천주교사제단 <레드헌트> 상영

천주교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은 지난해 12월 29일과 1월 4일 광양성당 등 도내 10여 개 성당에서 일제히 제주 4.3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를 상영했다. 사제단은 12월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50주년을 앞두고 4.3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튼으로써 4.3의 민주적 해결을 이루려는 데 상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4.3의 발상지 이고 피해자인 제주도에서 체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막는다면 4.3과제를 풀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제주대 학생들과 제주 인권영화제작이 <레드헌트>를 상영하려다 공안당국의 압력으로 취소한 이래, 도내에서 <레드헌트>가 공개상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관스님 원심대로 3년6월 확정

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형이 확정되었다. 지난해 12월 26일 대법원 3부(전경송 대법관)의 심리로 열린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진관스님은 고등법원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으로 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오늘의 공판

▶ 6일(화)

- 민경우/이천재/이종린/나창순(범민련, 국보법)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 배병화(한총련, 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신건

주간/인/권/호/름

(97년 12월 22일부터 98년 1월 4일까지)

◆12월22일(월) 전노 두 전직대통령등 사면/〈한겨레〉 보도, 15대 대선 이 끝난 직후부터 안기부가 국내 정치 또는 대선 관련 각종 기밀서류들을 조직적으로 파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임호 변호사, 전직 대통령 사면이 평등권과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12월24일(수) 송기숙, 박태순 등 소설가 50여명 충남 공주교도소 환경석영씨 면회 좌절된 약식집회/환경부와 경기도 발표, 성남쓰레기 소각장에서 다이옥신 파다검출로 지난 15일 가동중단/현재, 현재의 위험 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결정

◆12월26일(금) 대법원, 영장실질심사제 축소에 따라 형사소송규칙 개정/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상기 부장판사), 간첩혐의로 구속된 간수 교수에게 징역 12년 선고

◆12월29일(월) 통계청 발표, 실업자 한달새 12만명 이상 증가해 57만명 육박, 실업증가를 15년만에 최고/국민연금제도개선기확단,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현재 60살에서 2033년에는 65살로 정하고 가입기간중 평균소득의 70%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을 받도록 돼있는 40년 가입자의 경우 40%를 받도록하는 내용의 개선안 확정/서울지법 민사51단독(박시환 판사), 시민단체들을 친북세력등으로 매도해 사회단체들로부터 민·형사 소송에 피소된 <한국노동당> 발생인 이도형씨 재산 가입신청 받아들여

◆12월30일(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발표, 98년 3월말까지 출국을 원하는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 벌금 완전면제키로/〈레드헌트〉를 상영한 혐의로 구속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변호인단,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보석신청/법무부, 15년만에 최대규모인 23명 사형집행

◆1월1일(목) 보건복지부, 전국 시·도 16개 전화권역에 여성상담전화 1366번 개통

◆1월3일(토)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 법정관리중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진 삼미특수강에 근무하다 퇴사한 백아무개 씨 등 퇴직 직원 14명이 삼미특수강 보전관리인 김동윤 씨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퇴직금 지급 판결

◆1월4일(일) 공무원연금 10년 뒤인 2007년부터 연금재정 파산위기, 사립학교교원연금도 2019년 파산신고 받아, 또 공무원·사회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돈내는 기간 짧고 받는 액수는 3배에 달해/건설교통부 발표, 지난해 부도를 낸 건설업체는 1325곳으로 부도가 가장 많았던 지난 95년 912곳에 비해 45% 증가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월 7일(수)

제 103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전자주민카드 굳히기 안된다” 각계 인사, 김 당선자 약속이행 촉구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관심사로 떠오르는 인권 현안 가운데 하나는 전자주민카드제도다.

전자감시체제를 우려한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 시행에 반대해온 김대중 씨의 대통령 당선은 전자주민카드사업 추진에 있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새정치국민회의는 “전자주민카드가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정보통제 등 개인 종합정보의 악용 우려 △보안·안전 등 기술적 결함 △선전의 국에 없는 제도”라는 이유로 “전자주민카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지문채취제도 역시 폐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역시 지난해 12월 14일 TV 합동토론회에서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각계에서는 김대중 당선자가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중단시키는 가시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는 속에서도, 지금껏 제도를 추진해온 행정관료들이 제도 시행을 기정사실화할 것

이라는 데 우려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고 있다.

6일 행정쇄신위 내 구조조정심의위원회가 지방행정구조 축소방안을 논의하면서 “읍면동 폐지문제 등은 전자주민카드의 전면 도입과 때를 맞춰 해 나가겠다”고 의견을 모은 것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한세웅 신부, 김진균 교수 등 종교계 및 학·법조계 인사 6백88명은 “전자주민카드를 반대한다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선언에 참여한 인사들은 “전자주민카드를 담당하는 행정관료들이 아직까지도 제도 감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며 “김 당선자와 정권인수위는 제도 시행을 기정사실화하려는 행정관료들에 대해 다시한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발급이 시작되는 98년 12월부터 몇천여원대의 대규모 예산이 사용될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IMF시대의 건축재정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김 당선자가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을 철회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할 것 △주민등록제도개선위원회 설치 △프라이버시보호기본법의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는 9일 내무부

구속자, 수배자, 미복권자 명단 접수중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는 양심수 명단 파악을 위한 신고를 받습니다. 구속중인 양심수, 시국관련 수배자, 미복권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은 천주교 인권위원회로 연락주시시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명단을 파악하여 세로 출범하는 정권 담당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문의: 777-0643)

서준식대표 | 차공판

때: 1월 15일(목) 오전 10시
곳: 서부지원(마포) 407호 법정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 정권인수위원회에서 전자주민카드 사업이 어떻게 논의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인천구치소 가혹행위 시비

부민노청 미결수 주장

인천구치소(소장 이충대)에 수감중인 부민노청노동청년회(부민노청) 소속 미결수들이 지난 12월 29일 불법 징벌을 받은 상태에서 구타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민노청 구속금지 석방대책위’에 따르면, 같은 달 26일부터 ‘전노 사면철회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단식투쟁’을 전개하던 이들 중에 양승철 씨가 29일 오후 8시경 교도관들에 의해 수갑과 가죽수갑에 묶여 독방에 감금당한 뒤 무릎을 꿇린 채 배와 뒷목을 7-8차례에 걸쳐 구타를 당했다.

이후 양승철 씨는 공안담당 주임과의 특별면담에서 “앞으로 구타하지 않겠다”고 구두약속을 받기도 했지만, 이에 대해 구치소측은 구타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대책위는 31일 가족, 지역단체 회원 등 10여 명이 구치소측의 인권유린에 대해 항의하고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며 이에 구치소측에서는 양승철 씨에 대한 X-RAY사진촬영과 구타한 교도관이 구두로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인천구치소내에서는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한 채 미결수들을 불법 징벌하고 있으며, 수감자들의 집단행위 방지를 위한 정신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는 세계인권의 해 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업 줄이어

1948년 12월 10일, 국제사회는 만인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확인하면서 이를 성취하기 위한 공통 기준으로 세계인권선언(인권선언)을 채택했다. 올해는 인권선언 채택 50주년이 되는 해로써, 21세기를 눈앞에 둔 인류는 인권선언 50년의 성과와 문제점을 돌아보며 인권의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여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유엔총회 결의안을 비롯한 많은 결의안에서 그 중요성이 거듭 확인된 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업은 유엔과 정부, 민간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준비되고 있다. 다음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수집한 기념행사 계획들이다.

먼저, 정부기구 차원에서는 97년 9월 국제의원연맹(IPU) 결의안에서 기념사업의 행동사항을 정했다. 그 주요내용은 ▲국제인권조약의 비준과 유보조항의 철폐 ▲국제인권조약에 상응하는 입법화 내지 국내법의 조화 ▲개인제소절차를 비롯한 국제인권제도와 기구에 대한 협조 및 충분한 정보제공 ▲국민인권기구의 설립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보호 ▲인권증진을 위한, 특히 인권교육과 관련된 예산 규정을 늘 것 등이다. 또한 국가 차원의 인권선언 기념행사에 청소년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독려할 것을 권유하였다.

유엔에서는 3월 '인권침해에 대한 개인제소에 관한 패널토론', 5월 '경제성장, 소득분배와 인권에 관한 패널토론'을 비롯해 12월까지 매달 특별 회의가 기획되어 있다. 특히 3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54차 유엔인권위원회 기간 중 대대적인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고, 12월 10일에는 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는 유엔특별총회가 열린다.

민간 차원에서는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이후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비엔나 플러스 파이브(The Vienna Plus Five) 국제민간단체 포럼'이 가장 굵직한 행사다.

고문폐지재단의 '인권활동가에게 보내는 제안 수집 캠페인', '민간단체 활

동가 증언의 날 행사', 국제에스페란토연합의 '인권의 언어적 차원에 관한 심포지엄' 등 많은 단체가 다양한 캠페인과 심포지엄을 준비중에 있다. 한편 네덜란드 국제인권문헌센터의 '세계인권선언과 관련된 철학·과학·예술·사법 논문의 비교연구'를 비롯하여 많은 학술단체의 연구 프로젝트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적준, 또 고소당해 도원동 철거폭력사건

도원동 재개발지구 철거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박순호(31·여) 씨와 박혜영(25·여) 씨가 12월 24일 적준토건(주)과 용문파출소를 상대로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두사람은 그간 피고소인인 정숙중(적준토건 대표이사) 씨가 지난 12월 경 '세입자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쫓아내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도원동 현장소장 등이 16일 빈집(공기)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세입자들에게 복부와 허리,머리등에 대한 직접적인 구타,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10시 경 용문파출소장 한용희 씨는 파출소 직원 10여명과 함께 철거장면의 폭행장면을 목격하고

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17일 사당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박순호 씨는 '우견관절 및 요부에 다발성 염좌, 찰과상'등을 입고 14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박혜영 씨의 경우 23일 한양대학병원에서 좌우측두정부의 탈모증에 따른 최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나왔다(본지 12월 19일자 참조)

적준, 폭행사실 언급 회피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박순호, 박혜영 씨는 같은 날 27일 대질신문을 받았다. 하지만 적준토건측에선 직접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불참한 가운데 단순관련자들만 대질신문에 응했다. 적준측은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폭행가담자들은 일용직 고용인이며 현재 부재중인 관계로 사실 확인이 안되고 있다"면서 폭행사실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관공서 수수방관
도원동철거민대책위는 "철거장면 10여 명이 매일 상주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철거폭력과 재개발법에 명시된 가수용단지 설치에 대해서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측의 수수방관하는 태도에 대해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88년 설립된 적준토건(주)은 서울시내 주요 철거용역을 수주하고 있는 회사로서, 지난해 7월 25일 전농동 박순덕 씨 사망 사건 등, 수 차례에 걸친 철거폭력사건에 연루돼 고소, 고발을 당하는 등 물의를 빚어왔다.

.....주요 공판 안내

- ▶7일(수)
 - 최인기/이지음(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403호, 합의4부, 선고
 - 신광수 외1(국보법) 오전10시, 418호, 합의1부, 선고
- ▶8일(목)
 - 정영훈(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404호, 합의5부, 선고
 - 유신일(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311호, 합의21부, 선고
 - 송유진(국보법 간첩 등) 오전10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 ▶9일(금)
 - 장진섭(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403호, 합의4부, 선고
 - 김영필(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403호, 합의4부, 속행
 - 박관조(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2시, 403호, 합의4부, 속행
 - 권혁진(집시법 등) 오전10시, 302호, 합의2부, 선고
 - 신승우(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3시, 418호, 합의1부, 속행
 - 장정일(음란문서제조 등) 오후4시, 418호, 합의1부, 속행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월 8일(목)

제 103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재벌, 별장부터 내놔라” 경제위기 고통, 노동자 일방 부담

정리해고는 사실상 시작되었다. 최근 정부와 정·재계가 고통분담과 구조조정을 위해서 정리해고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현재 일부 사업장에서 사실상 정리해고가 실시되는 등 전국각지의 노동현장에서 해고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바르코가구에서는 최근 들어 가장 큰 규모의 해고사태가 발생했다. 바르코가구는 지난해 10월 자금유통의 어려움 끝에 흑자도산한 기업으로 지난해 27일 전사원(조합원 6백여 명)에게 사표를 제출한 직원 가운데 사무직과 생산직에서 1백50여 명의 직원이 사실상 정리해고됐다. 도산한 기업이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해고회피 노력마저도 없이 대량해고를 실시한 바르코가구의 경우는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타 기업에도 주요한 과장을 물고갈 가능성이 있다.

마산·창원지역에서는 현대정공이 이미 관리직 30명을 권고사직시키고, 앞으로도 사무직 인원의 30%선인 1백명가량을 감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한국기계에서는 지난달 27일 50대 주부노동자 9명을 무단해고했다가 노조원의 집단농성에 굴복해 일주일만에 복직시키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생산현장은 공포분위기”
그러나, 이러한 개별 사업장에서의 해고사태는 실업대란을 앞둔 서쪽에 불과하다. 마창지역노동조합협의회의 조태일 총무국장은 지역내 노동자들의 상황을

“엎드려라! 아니면 죽는다”는 자조적 표현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조 국장에 따르면, 각 사업장마다 구조조정의 현파를 틈타 조업단축과 휴직, 감원요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노조가 없는 미조직 사업장의 경우는 더 심각해, 휴직을 징검다리로 하는 해고 현상이 빈발하는 형편이다. 조 국장은 “마창지역은 공포분위기”라고 잘라말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의 박인숙 총무국장도 “상여금과 임금 체불은 다반사며, 회사측이 단체협약 이행마저 유보하라고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노동계, 파격적 제안 뒤따라야”
결국 현 경제위기의 고통을 힘없는 노동자들만 떠안게 됐다는 비판이 당

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속연맹 부산양산지부 정홍형 조직부장은 “정리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 최소한의 완충장치인 사회보장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정리해고는 ‘다 죽으라’는 이야기와 같다. 둘째,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한 재벌의 뼈를 깎는 노력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고통이 전가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이 별장을 비롯한 자신의 전 재산을 매각한다면 최소한의 자금은 마련할 수 있다”며 “재벌 재산부터 몰수하거나 자진 반납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장은 또 “언론 공세와 사회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노조마저 위축된 것이 현실이지만 민주노총 등이 구체적 전망과 방안을 제시한다면 이에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용안정기금 조성에 있어 일정액의 노조가 부담하는 방식 등 공세적이고 파격적인 제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정 부장은 덧붙였다.

만
화
시
랑
방
이동수



참여연대, "사회안전망 재구축하자" '김 당선자 사회보장정책 후퇴' 비판

저성장·고실업의 시대를 맞아 사회 보장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발표해 "법국민적인 사회보장개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성명서에서 "부실기업의 도산, 실업자의 대량 발생과 경기침체에 따른 생활상의 어려움 등이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대량실직과 저임금의 상황하에서 기존의 복지제도는 더 이상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 시기엔 공공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과 혁신, 그리고 기존 행정체계의 재편을 통해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복지전략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참여연대는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라는 총체적 틀에서 각종 사회 보장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고용보험, 퇴직금, 연금 등 각종 소득보장제도의 개편방향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의 통합 및 내실화 방안 △대 사회보험 행정체계의 통합 및 효율화 방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제도의 통합 등을 사회보장개혁위원회를 통해 다룰 것을 제안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당선 전 "경제우선 논리가 아닌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균형있는 분배를 실현하겠다"는 사회복지정책 신념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부실채권인수기금으로 전용하기로 하는 등 새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이 오히려 후퇴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서준식대표 | 차공판

때: 1월 15일(목) 오전10시
곳: 서부지원(미포) 407호 법정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선거기간내에 강조했던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사회복지 예산 확대'구호는 현재 국제적 경쟁력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예산 삭감으로 대체되어, 삶의 질 향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최연소 장기수 석방운동 나우누리 '강용주 인권방'

국내 최연소 장기수 강용주(36). 85년 전두환 정권 아래서 이른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13년째 수감중인 강 씨의 석방을 위해 작은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강 씨는 85년 당시 양동화 씨등 구미 유학생들과 함께 북한공작원에 포섭돼 간첩이 된 후 국내에 들어와 극렬학생에게 공작금을 주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러나, 강 씨는 "안기부에서 두달 가까이 있는 동안 폭력과 고문에 못 이겨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사건이 조작된 것임을 항변했지만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전향을 거부한 채 장

기복역중이다.

이러한 강 씨의 석방을 위해 애쓰고 있는 모임은 지난해 8월 25일 컴퓨터 통신 나우누리에 개설된 '강용주 인권방'이다. '강용주 인권방'은 통신서명 운동을 비롯해 강용주 씨 문제와 관련한 토론방을 제안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강 씨의 석방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강용주 인권방'은 "대통령 선거 후 어떤 형태로든 있을 사면에 대해 정치권력의 시혜에 의존하기 보다는 양심세력들의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뒷받침할 때만 양적·질적으로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석방운동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강용주인권방'은 오는 10일 강용주 씨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강용주 씨 석방을 촉구하는 모임을 갖기로 했다. 석방촉구모임: 10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양재동 정주집 (574-1140).

박지동 교수 1차공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광주 대 박지동 교수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오는 9일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 교수는 자신이 쓴 대학교재 『진실인식과 논술방법』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행사와 동정

- 늦봄 문이환목사님 4주기 추모행사
 - 늦봄 문이환 추모 통일 심포지움,
 - 때: 1월 16일(금) 오후 5시 · 곳: 성공회 대성당 교육관(시청앞)
 - '우리사랑 문이환님' 4주기 추모 문화공연,
 - 때: 1월 17일(토) 오후 5시, · 곳: 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
 - 마석모란공원 묘소참배
 - 때: 1월 18일(일)
 - 주최: 전국연합(921-4090), 통일맞이 철천만 겨레모임(☎762-8201)
- 전국노점상연합 양심수 후원의 밤
 - 때: 1월 20일(화) 오후 1시-10시 · 곳: 세종대학교 율곡관
 - 주최: 전국노점상연합회(725-5025)
- (가칭) [21세기 여성포럼] 창립총회
 - 때: 1월 15일(목) 오후 5시 · 곳: 프레스센터 20층
 - 주최: 여성단체연합(☎273-9535)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월 9일(금)

제 1039 호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IMF시대 외국인노동자 시련 체불임금 못받고, 해고때도 영순위

이른바 'IMF시대'로 들어선 이 겨울, 외국인노동자들은 어느때보다도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도산한 회사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해고때는 1순위로 '선정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어느정도 돈을 모은 외국인노동자들은 서둘러 한국을 떠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빚도 지고 일자리도 얻지 못한 외국인노동자들은 오갈데 없는 신세로 전락했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소장 김해성)은 이미 20여 명의 외국인노동자들로 포화상태가 되어 버렸다. 일부 산재피해자들도 있지만, 오갈데 없는 실직노동자가 대다수다. 또한 연일 실직과 체불임금 문제에 대한 상담이 폭주하고 있으며, 평소 하루에 한두건이던 출국 문의 전화도 20-30건까지 늘어났다고 한다.

일자리 못 구해 빚진 채 귀국길 지난해 1월 한국에 온 다우드 알리(35·방글라데시) 씨는 오는 12일 눈물을 머금고 귀국길에 오르기로 했다. 처음 일자리에선 3개월간 일하고도 월급 한 푼 받지 못했고, 그후 4개월 가량 근무했던 직장은 부도로 문을 닫아 버렸다. 알리 씨는 일자리며 구하기 어려워지자 귀국을 결심했다고 한다.

그가 한국에 오기 위해 고용브로커에게 지불한 돈은 5백만원, 하지만 한국에 와서 번 돈은 2백여 만원. 곧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의 어깨엔 3백만원 가까이되는 빚만 걸쳐 있을 뿐이다.

귀국이 가능한 알리 씨의 사정은 그나마 낫다. 아까쉬(28·방글라데시) 씨는 "집에 갈 돈도 밥 먹을 돈도 없

다"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한국의 경제위기를 미처 알지 못한 채 지난해 11월 한국에 온 아까쉬 씨와 동료 2명은 경기도 광주의 영세공장에 일자리를 얻었다. 그러나 그들은 불과 20일만에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직장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아까쉬 씨는 "어쨌든 빨리 일자리를 구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환율폭등으로 인해 사실상 임금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도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고통스런 문제다. 중국동포 엄승욱(38) 씨는 지난해 10월 남편의 산재 사망 보상금으로 8천만원을 받았지만, 은행직원이 며칠 기다리라고 하는 사이에 환율이 두 배로 올라 풀지에 4천만원을 잃게 됐고, 이 때문에 귀국도 못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외국인노동자들도 고국에 송금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한다.

외국인노동자 '토사구팽'

국내 노동자들도 이미 해고와 실업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 특별히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서만 대책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라고 해서 더 차별받고 버림받아서 안된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

구속자, 수배자, 미복권자 명단 접수중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는 양심수 명단 파악을 위한 신고를 받습니다. 구속 중인 양심수, 시국관련 수배자, 미복권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은 천주교 인권위원회로 연락주시요.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명단을 파악하여 세로 출범하는 정권 담당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문의: 777-0643)

구미 외국인노동자상담소의 김현 간사는 "회사가 부도났을 때 한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는데 외국인노동자들은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해성 목사(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소장)는 "여성노동자를 감원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부당하듯, 외국인이라고 해서 고통을 더 주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3D업종에서 부러먹을 대로 부러먹은 뒤, 필요없으면 버리고 마는 정부의 비뚤어진 정책이 오늘의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는 당장의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소탐대실'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양해우 사무국장도 "외국인노동자의 집단자살 사태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새로 고용을 창출하기는 어렵지만, 체불임금과 산업재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선 적절한 보상을 한 뒤 돌려보내는 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국민이기주의 버려야

나라가 어려워지면서 '내 뉘부터 챙겨야 된다'는 이기적 풍조가 일부에서 퍼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국내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해 외국인노동자의 희생은 어쩔수 없다는 국가이기주의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동반자이면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외국인노동자들을 이제 와서 사지로 내몰 때, 다시한번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사지 않을까 우려된다.

KNCC 인권위, 재소자 겨울나기 후원 서울지역 1백명 재소자에 온정

감옥에서 고통스럽게 겨울을 보내고 있는 재소자들을 후원하기 위한 모금 운동이 기독교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위원장 이명남, KNCC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일곱번째 재소자 겨울나기 후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양심수를 포함, 전국 40여 개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중인 6만여 재소자들의 월동대책 마련을 위해 후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KNCC 인권위원회는 7일 현재 전국적으로 1천5백19만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오는 15일까지 계속될 재소자 겨울나기 사업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개 지역위원회와 함께 전개되고 있다. 인권위원회가 중간집계한 이 금액은 지난해 최종집계한 8백여 만원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이다. 이 중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북음교회가 30만원을 모금한 것을 비롯해 목회자, 신도들이 약 9백만원 가량을 모았다.

이 후원금은 민가협과 교정 교역자들을 통해 추천받은 재소자들에게 설날 이전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지역에서 수감 중인 양심수를 비롯한 약 1백명의 재소자들에게 따스한 온정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원회 김용현 목사는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늘어 흐뭇하다"며 모금액수가 많은 점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다. 후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전화: 02) 764-0203로 문의하면 된다.

성모병원노조 명동농성 돌입 노동법 총파업 이유 해고 항의

대전성모병원 노동조합(위원장 이대연)이 7일부터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노조측은 "병원(병원장 윤주병 신부)측이 지난해 노동법 총파업을 이유로 노조를 탄압하고 부당징계를 내렸다"며 "이에 대해 카톨릭교구의 노동부 등이 해결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8일 병원노조 관계자는 "병원측이 노동법 파업으로 어떠한 징계나 고소고발, 불이익을 주지않겠다고 노조와 합의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포함해 3명을 해고하고 1명을 강제휴직시키는가 하면 노조간부 8명을 무더기 징계(1호봉씩 감봉)했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측은 병원간부를 통해 노조원의 노조탈퇴를 강요했으며, "간부·대의원의 징계는 사전에 조합원의 협의하에 진행한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채 노조원을 징계했다"고 노조측은 밝혔다. 이와 관련 병원장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지만, 검찰은 병원장이 신부이면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전성모병원은 지난해 10월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악질 노조탄압사업장으로 분류되어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지적받은 바 있으며, 11월 15일 서울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노조활동을 보장하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다.

현재 대전성모병원 노조는 해고무효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았으며, 명동성당 앞에서 매일 오후 5시에 시민들을 상대로 병원측의 부당한 해고·징계등을 알리며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매주 일요일 12시엔 의료봉사활동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병원노련)관계자는 "지난해 노동법 총파업 참가와 관련해 50여 개 병원 노조 조합원들이 해고를 당했지만 곧 복직됐다. 이에 비해, 성모병원측은 아직도 유일하게 해고자의 복직 및 징계를 풀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병원노련 차원에서 투쟁을 조직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두환·노태우 부정재산 완전몰수 및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집회◇

▶때: 오늘 낮 12시-1시

▶곳: 전두환 씨 자택부근

(연희2동 놀이터)

서준식 사건, 국제 관심 지속

독일 정부 "재판참관 고려중"

독일정부가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 구속사건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나섰다. 8일 재독양심수후원회에 따르면, 독일 외무부 장관 킨켈 씨는 "주한독일대사관을 통해 서준식 씨 사건을 확인했으며, 오는 15일 서 씨의 재판에 유럽연맹 대표자와 함께 참관인으로 참석할 것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만인권추진회는 8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앞으로 편지를 보내 서준식 씨의 석방을 거듭 촉구했다. 대만인권추진회는 "민주주의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한국정부가 여전히 서준식 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한국정부가 모든 정치범을 사면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시카고와 뉴욕, 세인트루이스의 지역방송인 노동자TV쇼 제작자 래리 던컨 씨도 7일 김 당선자 앞으로 편지를 보내 "전세계의 인권감시자들이 서준식 씨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며 "서준식 씨의 고된 시련의 과정을 방송으로 내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월 10일(토)

제 104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70세 장기수 암투병중

대전교도소 신인영 씨 골수암

교도소에서 암과 투병하며 혹독한 겨울나기를 하고 있는 재소자가 있다.

대전교도소에서 수감중인 신인영(70세, 31년제 복역) 씨는 현재 골수암 판정을 받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0.75평의 독방에서 험겨운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신 씨는 지난해말 쇄골관절부위의 부기와 통증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증세가 악화됐으며, 대전성모병원에서 종합검진을 한 결과 골수암 진단을 받았다. 병원측은 "골수암은 전이가 무척 빨라 전문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곧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신 씨는 매일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교도소측도 법무부에 형집행정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민가협)는 9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법무부 앞으로 편지를 보내 "인도적인 차원에서 신 씨를 석방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민가협은 "90세 고령인 신 씨의 어머니가 죽기전에 한번 만이라도 아들을 보고 싶다는 소원 하나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며 "골수암의 증환자인 일흔의 아들이 하루빨리 어머니와 가족의 보살핌 속에 치료를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권력형 비리사범들이 구속되지 않아 잇따라 병원으로 직행

하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도 신 씨의 석방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에 한보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홍인길, 권노갑 씨 등이 잇따라 형집행정지로 석방돼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만기석방된 은수미(92년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 씨의 경우와 같이 양심수나 일반 재소자들은 의료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은 씨는 "허리와 가슴등의 통증 때문에 여러차례 교도소측에 외부진료를 요구했으나 교도소측의 반대로 정밀진단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차

일피일 시간을 보내다가 결핵이 악화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본지 97년 7월 18, 19일 참조).

1929년 전북 무안에서 3남 5녀의 맏아들로 태어난 신인영 씨는 한국전쟁 중에 인민군을 따라 북한으로 갔으며, 67년 남파공작원으로 내려왔다가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복역해 왔다.

박종철열사 11주기

- ▶ 마석모란공원 열사모지 참배
11일 낮12시(오전 9시 동대문운동장에서 차량 출발)
- ▶ 박종철열사 11주기 추모식
14일 오후3시 서울대 열사기념비 앞

푸른영상 김동원 감독 연행

<레드헌트> 관련 국보법 위반 혐의

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이며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 집행위원장이자 김동원 감독(푸른영상 대표)이 9일 경찰에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

김동원 감독은 이날 오전 9시50분경 인천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인천대생을 만나 자신이 제작한 비디오 다큐멘터리 <봉춘, 야기>를 건네준 직후, 뒤쫓아온 경찰들에 의해 연행됐다. 당시 경찰은 "김 감독이 불법으로 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한 현행범이며, 판매한 테이프 음란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를 인근 파출소로 연행했다. 이후 인천동부경찰서로 김 감독을 이송한 경찰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비디오를 제작·판매한(음란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김 감독을 다시 인천 중부경찰서로 이송한 뒤, 그에게 <레드헌트> 상영 여부를 추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김 감독을 '현행범'으로 연행했으나, 사실상 인권영화제 및 <레드헌트>상영과 관련한 혐의로 김 감독을 미행·수사하던 중 빌미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김동원 감독은 지난해 6월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을 위반(불법 제작·판매)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으며, 1심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한편,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는 9일 회의를 갖고 "만일 김동원 감독이 구속된다면 모든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거세게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준식대표 | 차공판

때: 1월 15일(목) 오전10시

곳: 서부지원(마포) 407호 법정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포기 안해” ‘근거법률 제정·예산 집행’ 이유

내무부가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국회가 이미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의결했고, 지금까지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자된 이상 사업을 중단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추진과정을 살펴볼 때 이같은 내무부의 주장은 ‘억지’라는 것이 시민사회계의 지적이다.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공동대표 김진균 교수, 공대위)는 “전자주민카드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거나 적어도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정부가 미리 사업을 벌이면서 예산을 마구 집행했다”고 비판해 왔다.

내무부도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주민카드 발급비용이 아니라 주민등록전산망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다가, 국회에서 관련법률이 통과되자 “이제와서 제도 시행을 포기하면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된다”고 말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9일 내무부 주민과의 담당 관료는 “주민카드 발급과 관련된 비용은 법률이 통과된 이후에 집행됐다”고 거듭 말했지만, 실제 법안이 제출되기도 전인 97년 1, 2월에 IC카드제조장비와 발급장비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대금까지 미리 지불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한편, 국회에서의 검토가 있기전부터 사업을 감행해 왔던 내무부가 이제와서 오히려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씁쓸음을 자아내게 한다.

내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끝까지 마무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IMF시대를 맞아 긴급재정이 필요하다해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사업을 유보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심지어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반대해온 국민회의측 관계자도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된 사항인데 이미 정리된 문제가 아니냐”며 사업을 중단시킬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공대위는 “근거법률도 없이 예산을 무단 사용한 행정부서의 책임부터 묻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자주민카드사업을 포기한다는 정책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전자주민카드사업과 관련해 집행된 예산은 4백75억원이며, 올해엔 31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전·노 재산 몰수하라

참여연대 연희동 시위

9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운동본부」는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 부근에서 집회를 갖고 “전두환·노태우 씨의 부정재산을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20여 명의 참석자들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근절하지 않는 이상 경제 위기의 극복은 불가능하다”며 “부정을 단죄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들이 착복한 전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기획부장은 “부정재산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전·노 사면은 화해와 용서가 아니라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고 납세자를 조롱하는 결과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시민 심병호(사법제자리놀이 시민모임 회장) 씨도 “수많은 양심수가 아직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전·노 사면은 애초부터 타당하지 않은 조치였다”며 국민의 힘으로 이들의 재산을 환수하자고 역설했다.

현재 검찰은 전두환 씨에게 선고된 2천2백55억원의 추징금 중 3백12억8천만 원만을 환수했을 뿐이며, 무기명 산업금융채권 등을 통해 은닉된 전 씨의 재산은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박지동 교수 공판 연기

9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박지동 광주대 교수의 1차공판이 연기됐다. 이는 재판부가 합의부에서 단독부 로 바뀐 데 따른 것이다.

새책... 『철아, 이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이』 (개마서원/205쪽/6천원)

죽은 아들의 자리에 늦깎이 투사로 선 아버지

고문으로 죽은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 보내고 속으로 그 아픔을 삭여야 했던 아버지가 10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정리한 회고록이 나왔다. 11년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박종철 열사의 죽음, 그 죽음을 계기로 33년 공무원 생활을 청산하고, 자식을 대신해 민주화 투쟁을 전개해온 박정기(70) 전 유가협 회장의 글이 책으로 묶인 것이다.

급작스럽게 다가온 아들의 죽음, 그 앞에서 망연자실한 가장, 그리고 아들의 죽음을 승화시켜 민주화투쟁에 투신하기까지의 내면적인 고통과 인내가 돋보이게 정리되어 읽는 이로 하여금 숙연하게 한다.

‘91년 여름, 영등포구치소에서’ 살았던 99일간의 감옥살이 경험을 통해 비로소 아들을 동지로 인식하게 된 과정, 평범했던 가장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가족들의 인위를 먼저 걱정할 수밖에 없던 사연, 유가족들의 한많은 설움을 담았고, 마지막 장에는 각계 인사들의 인간평을 곁들였다. 이 책은 개인적인 삶의 반추이기보다는 최근의 역사를 개인의 역정을 통해 되살려 봄으로써 과거청산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박정기 씨의 구술에 맞춰 함께 유가협에서 동고동락했던 박래군 씨(현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가 정리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월 13일(화)
제 104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김동원 감독 석방

영장실질심사 거쳐 12일 자정경 결정

지난 9일 경찰에 연행된 김동원 감독(푸른영상 대표,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2일 석방됐다(관련기사 본지 1월 10일자).

12일 인천지방법원 106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경구 영장전담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음란및비디오에관한법률(음비법) 위반 혐의로 김 감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그를 석방했다.

이날 심사에서 김기중 변호사는 음비법의 해당규정과 동일한 규정이었다면 구 영화법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으며, 서울지방법원이 96년 11월 음비법의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제청결정을 한 사실을 들어 김 감독에 대한 구속이 부당함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김대중 당선자와 국민회의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사전심의 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미 97년에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둔 상태”라며 “위헌결정이 곧 내려지거나 새로운 정부에 의해 폐지될 것이 예상되는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처벌 또는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

(바로 잡습니다.)

지난 9일 '서준식 사건, 국제 관심 지속' 기사 가운데 “독일 외무부 장관 킨켈 씨는...”을 “독일 외무부에서...”로 바로잡습니다. 또한 서준식 씨의 재판 참석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 역시 킨켈 장관이 직접 참석하는 것은 아님을 다시 확인합니다.

해, 「레드헌트」는 부산국제영화제 출품을 위하여 공영유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수많은 관객들에게 선보였던 작품이고, 베를린영화제의 초청을 받은

재벌체제 개혁 없는 정리해고 반대

민주노총, 정리해고 철회 않을 때 강력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지무 대행 배석범,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정리해고제 도입방침 즉각 철회와 재벌체제 개혁, 경제주권 수호’를 위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생필품 가격, 공공요금 등 물가가 폭등한 지금 노동자와 서민 대중의 생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재벌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경제파탄의 책임자를 규명,엄중처벌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는 것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금융기관 정리해고제 도입방침을 철회할 경우 정부의 교섭을 통해 IMF 합의사항 전면공개 및 독소조항 제협상 △국민대통합을 위한 선례조치인 경제파탄 책임규명과 처벌, 재벌총수 재산공개와 부채상환 △재벌체제 개혁 등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제도 개선 △노동기본권 등 민주적 노사관계의 확립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창출과 실업자 생계보장·직업훈련 △노사관계 안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낮 12시 민주노총은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당사앞에서 5백여

작품”이라며 “48년 제주도 4·3의 진실을 미군정보고서와 같은 객관적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구성한 이 작품을 직접 보지도 않은 채 어떠한 판단도 내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9일 인천 시내에서 김 감독을 불법비디오 판매 혐의로 연행한 뒤, 인권영화제에서 「레드헌트」를 상영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기관 정리해고제 반대 및 경제파탄 책임자 처벌 규탄대회’를 열었으며 같은날 오후 8시부터 각 지역·산별연맹, 단위노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노총 5층 강당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더불어 민주노총은 정치권이 금융권의 정리해고제 도입을 강행하려 한다면 15일에 모든 단위노조 총회투쟁을 포함해 오후 2시 국회앞 집회, 17일 전국동시다발적인 대규모집회 등 총력투쟁을 전개시켜나갈 방침이며 13일 민주노총 지도부가 IMF 캄드쉬 총재와 면담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민승리21도 “김대중당선자가 근본적인 재벌체제 개혁을 방지한 채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제라는 멍에를 씌우기 위한 의도로 ‘노·사·정 협의회’를 구성하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작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준식 대표 첫 재판

1월 15일(목) 오전 10시
서부지원 407호 법정

제주 4.3 진상규명 탄압 중지 요구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위원회

지난해 11월 제주 4.3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 상영과 관련 국가보안법 등으로 구속된 서준식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 대만, 한국 등 동아시아 3국의 역사, 법학, 인권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위원회'(한국측 대표 강민길 교수)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서준식 씨의 석방과 제주 4.3 진상규명작업에 대한 탄압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제주 4.3 사건의 진상규명을 지향한 영상표현물이 이적표현물로 되어 버린 사태는 한국에서 아직도 냉전상황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동아시아 냉전체제 확립 과정에서 일어난 4.3을 두번 다시 망각의 늪에 묻어버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명은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의 확립을 위해서는 냉전체제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며 "학살현장의 하나였던 다랑쉬굴을 봉쇄한 것처럼 역사의 어둠 속에 묻힌 살아있는 사람들의 역사를 봉쇄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대만 2.28 사건 50주년을 기념하여 '동아시아 냉전과 국가테러리즘'이란 국제심포지엄을 대만에서 열고 비슷한 경험을 지닌 3국의 인사들이 참가하여 결성하였다. 한국위원회는 지난해 9월 결성되었으며, 제주 4.3 사건 50주년을 맞아 올해 4월에는 제주도에서 학술심포지엄을 갖는다.

.....주요 공판 안내

- ▶ 13일 (화) 민경우, 이천재, 이종린, 나창순(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권오혁(국보법, 한총련)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김민수(특공치상, 한총련)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신건 유병서(국보법)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신건 양용모(국보법) 오후2시 합의3부 303호 신건
- ▶ 14일 (수) 함운경(국보법) 오후4시 합의7부 423호 속행 이원진(특공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부 302호 신건 양경숙(국보법)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김태완(국보법)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 ▶ 15일 (목) 서준식(국보법등) 오전 10시 서부지원 합의부 407호 신건 조양진의 3(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10시 3단독 317호 속행 윤부식의 1(폭력행위, 한총련사건) 오후2시 합의5부 404호 신건
- ▶ 16일 (금) 교영복(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신건 조재수의 1(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 오후2시 합의1부 418호 속행 김태윤(국보법) 오전10시 합의2부 302호 선고 박중대(국보법) 오후2시 합의4부 403호 신건 안종수의 9(국보법) 오후4시 합의4부 403호 속행

주간/인권/호/름

(98년 1월 5일부터 1월 11일까지)

- ◆ 5일(월) 비전향 장기수 신인영(70·31년제 복역, 대전교도소) 씨 골수암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투병중/프랑스, 독일에 이어 최근 민간인 4백여명을 학살한 알제리 테러범죄를 개탄하고, 알제리 정부에 국민 권리보호 촉구
- ◆ 6일(화) 구속중인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미결수에게 수의를 입게 하고 수갑을 채우는 것과, 구치소 내에서 <인권하루소식> 구독금지 및 신문 기사 삭제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대통령 당선자, 정리해고제의 조속한 도입방향을 재확인하는 한편 노사정 협의추진 전담준비팀 구성/정부, 일본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 여성기금의 활동내용과 위도금 수령절차를 홍보하는 광고를 일부 국내 일간지에 실은 것에 대해 강력 항의
- ◆ 7일(수) 한국노총, 금융산업부터 정리해고가 법제화되면 노사정 협의기구에 불참하겠다고 선언/서울지법 노동사건 전담판사들로 구성된 노동실무연구위원회, 구제금융 상황을 감안하되 구체적이고 엄격한 해고요건을 마련할 방침/대전성모병원 노조, 부당한 해고에 항의하며 명동성당서 천막농성/참여연대등 시민단체와 노조, 4대 연금통합과 기금의 합리적 운용 촉구/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조기 귀국 방침 8월 이후로 연기/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사건과 관련, 미국에서 피소된 손배소송의 변호사 수임료로 16만달러를 송금한 사실 뒤늦게 확인
- ◆ 8일(목) 민주노총, 1월중 조기 임시국회를 통해 예정대로 금융기관 정리해고가 입법화될 경우 총파업투쟁 나설 것이라고 공식 결의
- ◆ 9일(금) 대통령직인수위, 내무부가 진행중인 전자주민카드 발급사업 예산절감·인권보호 차원에서 중단 요구/인천동부경찰서, 푸른영상 대표 김동원(43) 감독 음비법 위반혐의로 연행조사/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운동본부, 전·노 씨 부정재산 환수 촉구집회/대통령직인수위, 안기부 측이 안기부 관련 법규정 내세워 조직·예산등에 대한 보고를 거부해 인수업무 중단/한국에이즈퇴치연맹, '한국동성애자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조사' 보고서 결과, 우리나라 남자동성애자 10만명 가량으로 추정
- ◆ 10일(토) 빌 클린턴 대통령, 97년 6월부터 계류중인 인간복제실험금지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최소한 앞으로 5년동안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
- ◆ 11일(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제도의 전면 개선작업 시행/노동부 집계, 5일부터 9일까지 실업급여 신청자 모두 5천2백19명으로 하루 평균 1천40명여명 신청

인권 시평

분노와 사랑의 슬픔

차병직(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변호사)

인젠가 아이들에게 김민기가 만든 '백구'를 들려준 적이 있다. 그 노래는 어른 양희은이 아닌, 어린 이지유이 7분 5초에 걸쳐 느리게 부른 것이었다. 의자에 기대어 듣고 있던 광민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길을 건너던 백구가 커다란 트럭에 치어 죽고, 그 백구를 안고 뒷동산을 헤매다 빨강게 핀 맨드라미 옆에 묻는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인 것 같았다. 눈물은 어린 가슴에 일어난 슬픔의 결과다. 그 슬픔은 직접적으로는 가족처럼 지내던 개의 죽음, 즉 한 존재의 상실로 인한 아픔 때문이다. 그러나 더 깊게 보면, 그 이면에는 비정한 트럭운전사의 배신적 행위가 자리잡고 있다. 부주의한 트럭운전사는 차에 치인 개의 친구인 아이에게 다칠 슬픔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굳이 예령이나 마이호퍼의 이론을 빌릴 것도 없이, 트럭운전사가 침해한 것은 아이의 개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아이 자신의 '인격'이란 말이다.

처리하고자 할 때의 슬픔이란 분노에 가까운 것이 되고만다. 며칠후부터 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공소장을 읽다보면 처음부터 걸린다. 검사는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쓰고 있다. "인권운동을 한답시고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재야인사들과 접촉하는 등 '현행국법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자인 바'...". 그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치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지금은 인권운동에 전념하여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물론 법과 질서를 존중하면서. 그가 부분적으로 맞서 싸우는 대상은 적어도 위헌

우리는 지난주 이란 영화 <체리향기>를 보고 나오면서 얻은 작은 기쁨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기쁨은 진지한 삶의 문제를 평범한 어휘로 다룬 대사의 아름다움이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그 아름다움이란 작가의 상상력에 의한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여긴다. 영화나 소설이니까 가능하지 현실은 어디 그러하냐고 생각한다.

슬픔은 사랑 없이도 가능하지만, 사랑은 슬픔 없이 는 생겨날 수 없는 것이다.

이라고 판단되는 잘못된 규범에 대해서 뿐이다. 그러한 그에게 '현행국법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자'라는 표현은 너무나 비법률적이기에 이전에 모욕적이다. 특히 그것이 그야말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검사에 의해 표현된 것이어서 슬픔은 커진다. 비법률적이기에 이전에 모욕적인 그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당한 언어적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3년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그는 재일동포로서 소년시절부터 민족적 차별감정에 의한 반항적 기질을 길러 오다가..."라고 썼다. 이것은 안중근이나 유관순에 대한 일제 판사의 판결문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에게는 나를 심판할 권한이 없다'고 선언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착해진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가 않다. 내 주변의 구체적인 현실은 그따위 훌륭한 편의 영화보다 훨씬 아름답다. 감옥의 인권운동가가 어린 두 딸에게 보낸 편지를 보자. "사랑하는 보슬아, 혜수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싶다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는 착해진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착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는 예뻐진다. 우리의 얼굴에는 우리가 가진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스스로 착해지는 것을 느낀다. 자꾸만 스스로 예뻐지고 있다고 느낀다. 아버지는 반드시 나갈 것이다.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준 것인데, 검사는 그것을 모르고 나쁜 짓이라 생각해서 아버지를 잡아들였다." 편지 속에도 그의 슬픔이 묻어 있다. 그의 편지는 내가 본 어떤 영화나 내가 읽은 어떤 글보다도 아름다웠음에도 기쁨보다는 슬픔을 먼저 전해주었다. 그러나 그 슬픔은 앞에서 말한 것과는 다른 것이다. 어떠한 행복도 내포하지 못한 깊고 부드러운, 그윽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슬픔은 사랑 없이도 가능하지만, 사랑은 슬픔 없이 는 생겨날 수 없는 것이다. 서준식의 슬픔은 승리할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월 14일(수)

제 104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기부금법 · 국보법 위헌”

서준식씨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게 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제출됐다.

13일 김진국, 전해철 변호사 등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변호인단은 두 법률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준식 씨는 인권영화를 개최하면 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후원회원을 모집했다는 이유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았는데, 이와 관련 전해철 변호사는 “이 법률은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공동선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90년대들어 우리 사회 민주화의 주축이 되고 있는 시민운동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률은 합리적

이고 타당한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 행사 및 계약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개정(95년)되기 전의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이미 96년 2월 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 씨 사건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바 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와 관련, 김진국 변호사는 “서준식 씨에게 적용된 제7조 5항, 1항의 조항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기존 질서의 이념과 가치를 부정하거나 이와 상반되는 사상·의견을 표명한다는 것이 기존질서측에서 볼 때 매우 불쾌한 공격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폐지·전복을 유도·선동하는 행위, 즉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구체적

이고 가능한 위협이 있는 표현행위가 아닌 한, 위와 같은 사상·의견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존재이유”라며 “국가보안법 제7조는 기존의 체제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상의 표현행위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의 다양성을 사전에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따라서 “레드헌트”를 상영하고 시집 ‘참된시작’을 소지한 행위를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하는 행위’로 보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5항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준식 씨에게 적용된 범조항 가운데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음비법)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될 예정이다.

서준식 대표 재판 연기

15일 오전 10시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이는 서 씨의 재판부가 합의부에서 1 단독(최정열 판사)으로 바뀐 데 따른 것이며, 재판 날짜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다.

5·18 영화제작 후원회원 모집

5·18광주민주화쟁을 소재로 한 영화가 제작된다.

5·18 영화제작 범국민위원회는 45여 명의 제작비를 들여 5·18영화 ‘하모니카’를 제작하기로 하고 후원회원 모집에 나섰다.

문의: (02) 517-4601~2

〈법을 용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판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이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위헌법률심판제청이라 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물론,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긴급명령 및 긴급제정·경제명령도 해당된다.

이와 비교해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여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의 구체적처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가 가능하다.

“정권교체에도 학원사찰 여전”

고려대, ‘프락치 도난사건·미행·잠복 수사’ 주장

최근 고려대학교에서 공안기관의 학원사찰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원사찰증지, 조직사건 조작음모 분쇄를 위한 민족고대 비상대책위원회」(비상대책위)는 13일 “3주전부터 고려대 내에서 온갖 수상쩍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작태들이 공안기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학원사찰의 근거로 우선, 학생회실과 동아리방 등에서 학생회 간부들의 가방이 분실되고 학생회 문건이 도난당한 사실을 제시했다.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을 전후해 학생회 간부가 두차례 가방을 분실했으며 그 가방엔 학생회 관련 문건과 약속장소, 시간 등이 적힌 수첩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수첩에 적힌 약속장소에서 사복형사 두명이 사찰활동을 벌였고, 학생회 간부의 자취집 주변에선 두명의 사복형사가 잠복근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또 “도난당한 물품이 값나가는 것이 아니라, 디스켓·문서·수첩 등인 것에 비춰볼 때, 의식적으로 이를 노린 학원프락치의 소행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학생회 활동을 정리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소재와 근황을 묻는 전화가 빈번히 걸려온 사실 △학내외에서 벌어지는 학생회 간부에 대한 미행과 감시 △몇몇 학생회 간부의 자취방에 사복형사들이 잠복·상주하는 사실 등이 학원사찰의 근거로 제시됐다.

비상대책위는 “지난해 ‘구국선봉대 청년’ 사건과 같이 대규모의 조직사건이 조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며 “이는 정권의 교체로 자신의 입지가 축소

될 것을 염려한 공안기관이 다시 학생들을 제물로 자신의 존재근거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최근 고려대학교에서 공안기관의 학원사찰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준식 홈페이지 개설

공대위 소식, 서 씨 칼럼 등 게재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서준식은 무죄다’는 타이틀 아래 구성된 홈페이지는 서준식 씨의 공소내용과 구속 이후의 소식, 「나의 주장」 및 각종 인권칼럼 등 서준식 씨의 글을 싣고 있다. 또한 「레드헌트」의 동영상 및 스크립트, 「레드헌트」에 대한 영화계·학계 의견서 등도 실었다.

〈취재수첩〉 ‘국민회의 열린정치포럼’을 보고

‘인권’없는 개혁논의

13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 개혁성향의 의원들이 주최하는 ‘열린정치포럼’이 열렸다.

정권교체 이후 ‘새정부의 개혁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린 이날 포럼은 그야말로 새정부 출범전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토론 결과를 대통령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에 전달한다는데 큰 의미를 가지는 자리였다.

고려대 최정집 교수와 한국경제연구원원의 좌승희 원장의 기초발제로 시작된 포럼은 5명의 토론자들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좌 원장은 새정부 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현재의 IMF 금융체제에 부응하여 대기업의 투명성 제고, 회계제도의 선진화등을 통해 국제기준에 맞는 기업경쟁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부도 이를 강제력이 아닌 시장압력을 통해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 가운데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앞으로의 개혁을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 또하나의 화두는 참여민주주의 정착”이라며 “정부가 교육에서는 전교조를, 검찰개혁에서는 민변을 파트너로 설정해 개혁을 추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끝시받아온 시민사회단체와의 유대와 의견수렴을 강조한 지적이다.

하지만 포럼은 주로 새 정부의 정치개혁 과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실업으로 인한 생존권의 위기가 전국민을 짓누르고, 국가보안법 등을 통한 사상·표현의 자유 침체가 후진적인 인권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토론 속에서 새정부의 ‘인권정책’과 관련한 제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권교체와 더불어 또다시 개혁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권’이 들어설 자리는 비좁은 것 같다.

양심수·수배자·미복권자
신고받습니다.

천주교 인권위: 777-0643

천국연합: 921-4090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월 15일(목)

제 104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유력(有力)석방, 무력(無力)구속

홍인길씨 풀어주고...암투병 장기수 가둬두고

제소자에 대한 처우와 형집행이 원칙도 없이 형평에도 어긋나게 이뤄지고 있다.

14일 보도에 따르면, 한보비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 받은 홍인길(전 신한국당 의원), 권노갑(전 국민회의 의원) 씨 등이 곧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의원이 수감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악화됐다는 의료진의 소견과 검사의 임상결과가 나왔다"며 "빠르면 이번 주말쯤 이들을 형집행정지로 석방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한다. 홍 씨는 협심증과 신경허약증세로 지난 3일 까지 외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증세가 호전돼 다시 수감되었으며, 권 씨는 당뇨증세가 심하다는 이유로 외부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되지 않고 있다.

무원칙, 불평등한 형형 처분

이처럼 상반된 결정은 무엇보다도 지금의 형제제도가 납득할만한 기준 아래 운영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국의 관계자는 "제소자가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경우, 형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말해 제도운영의 기준이 애매함을 드러냈다. 또 96년 정부가 70여 일간 병원에 입원했던 전두환 씨의 병원비 7백여 만원을 전액 국비로 부담한 반면, 일반 제소자들의 치료비용에 대해선 자비부담케 한 것 역시 원칙없는 처우라는 비난과

형평성 시비를 불러온 바 있다. 결국 이번 사례에서도 정부는 "권력형 비리사범들에겐 관대하고, 양심수나 일반제소자들에겐 가혹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김 당선자, '양심수 석방' 거론 "취임 후 사면·복권 실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 후 최초로 '양심수 석방' 의견을 밝혔다.

김 당선자는 14일 김수환 추기경, 강원룡 목사,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양심수 석방'을 요청받고, "취임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추기경 등은 서경원, 박노해, 황석영 씨와 진관 스님 등을 거명하며 "양심수 석방을 새 정부 제1의 과제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만화사랑방



이동수

서준식 대표 재판 연기
재판부가 바뀐에 따라 오늘 열릴 예정이던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재판일정은 추후 공고하겠습니다.

법 제정 불구, 성폭력 안 줄어

성폭력상담소, 97년 성폭력 피해 통계 발표

우리사회에서 성폭력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는 '97년도 성폭력피해 상담현황'을 발표하며 "96년 2천1백38건에 비해 97년엔 총 2천2백95건의 성폭력피해사례가 접수되었고, 이중 71.8%의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96년과 비교해 오히려 6.9% 증가한 수치이다.

구체적인 피해상담은 1천6백47건으로 접수되었는데 이중 강간 8백83건(53.6%), 강간미수 65건(3.9%), 성추행 6백99건(42.5%)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람에게 의한 성폭력이 1천1백61건(71.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93년 12월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난해 7월31일 법이 다시 보완된 것에 비해 다소 의아한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상담소측은 "성폭력특별법이 여전히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본인이 직접 피해상황을 고소고발할때만 처벌가능) 규정을 두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개정된 법률은 친고죄 제외대상을 13세미만의 미성년자로만 한정하고 있다. 더불어 상담소측은 "현재 '정조를 어지럽힌 죄'로 정의된 성폭력의 의미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죄'로 재규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또다시 인권침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한 지적이다.

또한 상담소측은 성폭력이 계속 증가하는 원인으로 "그동안 뿌리깊이 존재해온 남성우월주의적 사고방식"을 지적하며,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의식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91년 4월 개소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93년 12월부터 위기센터를 운영하며 24시간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지난해 6월부터는 컴퓨터를 통한 상담도 받고 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하여 개별·집단상담 등에 참여하게 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게 하기 위한 '열린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5명이 '열린터'에 입소해있다.

시민사회계, "정리하고 강행 반대"

IMF재협상·재벌개혁 촉구

김중배(참여연대 공동대표) 씨 등 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자들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합의과정 없는 정리해고제의 강행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표자들은 정리해고의 입법화에 앞서 재벌경제체제의 개혁과 정경유착·부패구조의 청산을 경제난국 극복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IMF와의 기존 합의사항 가운데 우리 경제실정과 맞지 않는 사항들이 포함된 것도 사실"이라며 "김대중 당선자는 IMF와의 합의사항을 모든 국민에 공개해, 그중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사항들에 대해 즉각적인 추가·보완협상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엔 건강사회보건의료대표자회의, 민변, 실천불교승가회, 환경운동단체연합 등 10여 개 사회·종교단체가 참여했다.

김진균 교수, 안기부 상대 소송 '고첩사건' 관련 명예훼손 이유

김진균 서울대 교수(사회학과)는 지난해 안기부가 '울산부부간첩 및 고정간첩사건'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거명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4일 고성진 안기부 대공수사실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안기부는 고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정간첩의 포섭대상자가 김 교수라고 공개했으며,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는 김 교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바 있다.

철거폭력 편파수사 시비 재연

용산구 중림동 재개발지구

철거민과 용역회사 직원들이 서로 충돌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그러나, 경찰이 용역회사 직원들만 비호하는 듯한 수사를 벌여 경찰과 용역회사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세입자실태조사차 용산구 중림동 재개발지구에 갔던 전국철거민연합(대표 김인수, 전철연) 간부들은 용역회사인 (주)입산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폭행을 당했다는 간부는 고천만(42) 전철연 명성농성단 단장, 김범성(35) 서울철거민연합 부국장 등 6명이다.

고천만 씨는 "13일 오후 3시 30분경 6명의 간부들이 용산구 중림동에 현황 파악차 갔을 때, 갑자기 입산용역직원 10여 명이 몰려와서 '뭐하는 것들이야!'라며 먹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해댔다"고 주장했다. 김범성 씨도 "주민들로부터 '용역직원들이 오물을 뿌린다'는 등의 어려움을 듣고 있었다. ...내 '입산'이라는 용역단체복을 입은 10여 명이 몰려와 이를 피해 가려 했으나 그들이 길을 막고 무차별 구타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철연 간부들은 "당시 주민들의 신고로 중립파출소 소속 형사들이 출동해 관련자들이 파출소로 갔지만 전철연 간부들만 남아 조사를 받고 10명의 폭행범들은 모두 풀려났다"며 경찰의 편파수사를 비난했다.

고 씨는 "연행에 항의하며 20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항의농성을 벌이자 오후 8시가 되어서야 용역직원이 나타났는데, 그는 오히려 자신이 폭행피해자라며 전치3주의 진단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에게 대질조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고, 사건은 쌍방상해사건으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재개발지구에서의 철거폭력과 경찰·용역 간의 유착 의혹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월 16일(금)
제 104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국민인권기구 청사진 보여라

대통령 공약사항...설치 여부는 불확실

새 정부에서 '국민(국가)인권기구'가 설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이미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를 갖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뜻을 선거공약으로 밝혔으며, 지난 12일 법무부는 법조계·학계·언론계 인사 3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검찰개혁위원회를 이달 중으로 구성해 '인권위원회'의 설치 문제 등을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그동안 민간인권단체 등에서만 간헐적으로 주장해온 국민인권기구 설치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공식 논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인권기구 또는 국민인권위원회에 대한 밑그림은 공개된 것이 없다. 지난 96년 국정감사 당시 법무부장관이 '97년말까지 '인권위원회'가 설치되도록 연구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지만, 법무부는 지금도 "연구검토중"이라고만 밝힐 뿐이다. 집권당이 된 새정치국민회의 역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를 기존의 국가기구와는 독립된 별도기구로 설치하는 방안과 법무부 인권과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회의원의 천정배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부가 아닌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하며, 그 기능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선 각 지역위원회 등 방대한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부조직이 축소되는 시점에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현재 법무부측에선 법무부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해 인권정책에 대한 실질적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 강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 의원은 "별도의 국가기구든 법무부 인권과의 확대든 국가인권정책을 총괄할 기구를 설치하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국민인권기구는 기존의 국가기구에서 감당하지 못한 △인권 관련 제도, 정책 연구 △인권 개선안 제안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권의식 고취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유엔인권위가 세계각국에 권고하고 있는 인권과제다.

(2면에 국민인권기구 특집)

<현장스케치> 민가협 목요집회

암투병 장기수 어머니의 눈물겨운 편지

15일 오후 2시 탑골공원. 이날도 어김없이 암투병 어머니들의 목요집회가 열렸다. 2백13회째를 맞는 이날 목요집회의 참석자들은 특히 대전교도소에서 암투병중인 신인영(70) 씨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랫동안 소식을 몰라 안타까워했던 큰아들이 어미와 아버지를 찾아왔던 일이 그렇게도 큰 죄란 말이더냐? 그러나 이제 나도 너무 늙어 다시한번 너를 만나러 갈 수 있을지...살아생전 너에게 따뜻한 밥 한그릇 해먹이고 싶어 90살이 다되도록 버텼다...사랑하는 내아들, 인영아. 죽기전에 너를 한번이라도 안아볼 수 있기를 두손모아 간절히 기도하겠다.' 신 씨의 여동생이 남독한 어머니 고통의(90) 씨의 편지는 듣는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신인영 씨의 어머니는 지금 노환으로 앓아 누워있다. 가족들은 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질까봐 자식이 압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못했다고 한다. 권오현(민가협 암투병 후원회 회장) 씨는 "어떤 이념도 어떤 형벌도 생명의 존귀함 앞에 우선할 수 없다"며 "철순의 아들과 구순 어머니에게 30년간의 이별은 그 어떤 고통보다 지독한 것"이라고 말했다.

죽기전에 아들에게 밥 한그릇 지어 먹이고 싶어하는 어머니와 이 추운 겨울 차가운 감방에서 암투병중인 아들. 참석자들은 이 두 모자의 상봉을 두손 모아 기원했다.

행사와 동정

■ 한국사회의 사상/표현의 자유에 관한 워크샵

· 때: 1월 17일(토) 오후 3시

· 곳: 기장총회교육원 강당

■ EBS 파업기금마련을 위한 주점

· 때: 1월 17일(토) 오후 2시

· 곳: 양재역 스포츠호프

■ 고 황인철변호사 5주기 묘소참배

· 때: 1월 20일(화)

· 곳: 경기도 안성 천주교공원묘지

· 출발: 명동성당 앞 오전 10시 30분

■ [동티모르연대모임] 정기총회 준비 모임

· 때: 1월 22일(목) 저녁 7시

· 곳: 민변 회의실(522-7284)

<특집 국민인권기구①> 호주의 경험과 한국의 전망

보편적 인권규범 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

곽노현(운영위원, 방송대 법학과 교수)

편집자주: 국민(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논의가 언론에 간헐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간 국민인권기구에 대해 기획있을 때마다 소개해온 본지에서는 보다 전체적인 상을 제시하기 위하여 곽교수의 국민인권기구 칼럼을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참고로 곽 교수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 호주에 머물면서 호주 인권및기회균등위원회의 활동상에 대해 조사, 연구한 바 있다. 아직 국민인권기구의 구체적인 상을 정부도 민간단체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 연재는 매우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독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당부한다.

운영되고 있는 바, 특히 대규모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현재 민주화 이행기에 있는 나라들에서 인기가 높다. 필리핀과 남아공의 경우 과거청산의 차원에서 아예 국민인권기구를 새로운 헌법기구로 격상시켰을 정도다. 앞으로 국민인권기구는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꾸준히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의 인권단체들이 이를 요구할 뿐 아니라 정부로서도 국내외에서 생색내기에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전망 역시 밝다. 정부가 몇해 전부터 국제사회에서 거듭 약속해온 데다 새 대통령의 집권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인권기구는 애초부터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규범을 적극적으로 국내에서 집행하는 수단으로 강구된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국민인권기구는 인권관련 법제,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연구, 인권외교, 법제, 정책, 관행 등에 대한 대정부 자문과 조언, 인권교육과 훈련 및 홍보 등의 다양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또한 국민인권기구는 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기능도 갖고 있는 바, 이는 인권피해자에게 법정소송보다 신속, 간이한 구제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소한 인권침해, 예컨대 직장에서의 성희롱이나 성, 인종, 지역, 혹은 장애 차별적 인사 등에 대해서는 법원의 복잡하고 지리한 절차 때문이라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이다. 국민인권기구의 신속, 간이한 구제기능은 주로 이러한 경우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원래 인권을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국민'인권기구라는 용어보다는 국제기구가 아니라는 뜻의 '국가'인권기구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하지만 어감이 별로 좋지 않은 관계로 국민인권기구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유일한 목적으로 설립된 인권전담 국가기구를 일컫는 용어다. 국민인권기구는 대개 위원회 형식으로 조직된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역할을 인권분야에서 수행하는 위원회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민인권기구는 인권위원회나 인권 및 반차별위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다.

국민인권기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바람직한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하에서는 세계 각국의 국민인권기구중 가장 먼저 설치되었을 뿐 아니라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호주의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성과와 한계에 대해 소개하겠다.

81년 설치된 인권위원회가 호시

위원회는 1986년 인권의 날(12월 10일)에 설치되어 오늘에 이른다. 그러나 호주국민인권기구의 효시는 그 전신으로서, 1981년 인권의 날에 설치되어 86년까지 존속한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다. 인권위원회는 호주정부가 1977년에 비준한(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79년에 입법되었으나 81년에 비로소 설치되었다고 한다.

민주화 이행기의 나라들에 인기 국민인권기구는 현재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필리핀, 남아공, 에스토니아, 몰도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스리랑카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러시아와 태국에서도 근거법령이 통과하여 설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다. 이 명단에서 엿볼 수 있듯이 국민인권기구는 매우 다양한 나라들에서

탄생 배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

신속, 간이한 인권침해 구제수단 결론적으로 국민인권기구는 인권침해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구제 제공, 국내 인권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수행, 국제인권규범에 바탕한 대정부 조언과 자문 제공, 인권교육과 훈련 실시등 매우 종합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구로서 국제인권시대의 국가내 인권과수꾼으로 고안된 국가기구라 할 수 있다.

필리핀과 남아공의 경우 과거청산의 차원에서 아예 국민인권기구를 새로운 헌법기구로 격상시켰을 정도다. 앞으로도 국민인권기구는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꾸준히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월 17일(토)
제 104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국보법 폐지운동 재검토

오늘, 「사상·표현의 자유에 관한 워크샾」

한국사회에서 사상·표현의 자유는 실현 가능한가?

민변, 민가협, 민교협 등 주요 인권·사회단체들은 오늘 오후 3시부터 기장총회교육관에서 「한국사회의 사상·표현의 자유에 관한 워크샾」을 갖는다. 워크샾의 중심주제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다.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우리사회에서 사상·표현의 자유 실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로 여겨졌으며,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민주화·인권운동의 핵심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실로 못거둔 국보법 폐지운동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사상·표현의 자유 쟁취운동은 각종 캠페인, 대책위원회 구성, 토론회와 심포지움 개최, 헌법재판소 위헌제청 신청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실패했고, 이는 오랜 군사독재에 종지부를 찍고 등장한 김영삼 정부 아래에서도 국가보안법이 계속 기승을 부리는 결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늘 열리는 워크샾은 기존의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한계를 되짚어 보고, 사상·표현의 자유 쟁취운동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의 운동방식이 소수 운동권 중심으로 진행된 점과 법 폐지 주장에만 매달려 온 점을 비판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도 적극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제캠페인 대상국으로 선정

한편 지난해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홍콩에서 열렸던 '국가보안법 캠페인'에 관한 워크샾에선 앞으로 2년동안 아시아지역 국가보안법 캠페인을 벌이기로 하고, 한국,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을 그 대상국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따라서, 국제사회와의 연대문제도 이날 워크샾의 주요 논의

사항이 될 예정이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는 올해는 세계 인권선언제정 50주년인 동시에,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인권선언과 국가보안법이 공존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오늘의 워크샾을 주의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늦봄 문익환 목사 4주기

▶ 추도식 및 문화공연

때: 1월 17일(토) 오후 5시
곳: 기독교백주년기념관 대강당
사회: 임종석, 임수경
출연: 김영남, 류금신, 서기상, 원창연, 꽃다지, 새하늘세망, 조국과 청춘, 가극단 금강

▶ 문익환 목사 묘소참배

때: 1월 18일(일) 오후 3시
곳: 모란공원묘지

전세계에 공개되는 '이적표현물'

<레드헌트>, 베를린영화제 공식 초청

한국의 '이적표현물'이 전세계에 공개된다. 지난해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규정된 제주 4·3 다큐멘터리 <레드헌트> (하늬영상, 감독 조성봉)는 이달초 베를린영화제로부터 정식 초청을 받았다.

베를린영화제 영포럼 집행위원장인 울리히 그레고리 씨는 최근 <레드헌트>를 비롯해 <명성, 6일의 기록> (푸른영상, 감독 김동원), <변방에서 중심으로> (서울영상집단, 감독 홍형숙) 등 독립영화 세 작품을 영포럼 부문에 초청한다고 밝혔다. 베를린영화제는 작품과 더불어 제작자들도 초청하기로 했다.

베를린영화제는 베니스영화제, 칸영화제와 함께 세계3대 영화제의 하나이며, 오는 2월 11일부터 열흘간 진행된다.

양심수·수배자·미복권자 신고받습니다.

접수된 명단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접수> 민가협: 763-2606
천주교 인권위: 777-0643
정국연합: 921-4090

▶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⑩ - 박응용 (한국타이어 해고노동자)

수배의 고통 속에서도...

97년 여름 노동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터졌다. 충남 신탄진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공장 앞에서 해고자들의 단식농성이 시작된 것이다. 강제근로와 감시, 노동운동가들에 대한 폭력테러 등 믿기지 않는 사실들이 폭로되었고, 민주노총 등 노동·사회단체의 지원을 받아가며 싸움은 두달여 간 치열히 전개되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했던 이 싸움 속엔 장기간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해고노동자 박응용(35)씨의 피와 땀이 서려 있었다.

가시밭길 노동운동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한 그는 탄광노동자로서 사회에 첫발을 디뎠다. 3년간의 탄광생활을 정리한 뒤 한 전자회사에 들어갔고, 거기서부터 그의 가시밭길 노동운동은 시작되었다. 민주노조건설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해고된 것이 88년, 그로부터 6년간의 해고생활 끝에 그는 한국타이어를 찾아갔다.

"입사하기 전부터 한국타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타이어에 다니던 한 친구는 술자리에서 '지옥'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94년 3월 직업훈련원을 거쳐 입사한 한국타이어는 과연 들던 그대로였다. 회사 철문엔 '신탄진교도소'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여길 왜 왔냐, 3개월을 버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선배들의 첫 마디였다.

'일요일 출근 안하기'부터

하지만 박 씨는 서서히 노동운동의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다. 동기 모임을 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동료 노동자들의 가장 절박한 소망은 "일요일엔 제발 좀 쉬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동료와 내기를 했어요. 일요일에 쉬고도 시말서를 쓰는지 안 쓰는지..." 그는 할머니가 입원중이라는 핑계를

대고 내기에서 이겼고, 그것이 곧 한국타이어 노동운동의 시작이었다. 그 후 동료들은 돌아가면서 일요일 근무에 빠지는 법을 배웠으며, 이렇게 모여든 동지들을 중심으로 결성한 것이 바로 '축구회'였다.

"한국타이어에선 90년대식 노동운동이 안 통합니다. 70년대식으로 직접 부딪히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축구회 결성식이 있던 날, 밀물처럼 작업장을 빠져나가는 동료들의 모습이 박 씨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다.

희망과 환희의 순간들

그후 18명의 동지들이 모여 노조민주회추진위원회(노민주)를 구성했고, 해를 넘겨 95년 1월엔 본격적으로 노조 선거를 준비하는 등 일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에 회사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과거의 해고경력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5년 2월 해고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미 지퍼진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4월5일 식목일, '빨간 날'에 쉬고 싶은 노동자들은 '나무 심으러 가지'는 슬로건 아래 출근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공장이 멈춰서기도 했다.

그리고 5월, 노조 대의원 선거에서 드디어 민주파 대의원이 20명이나 당선되는 기쁨을 맛봤다. 이어 6월 노조사무실 농성을 통해 '강제근로 중단·노조사무실 24시간 개방·산재 처리 보장·폭행 제발방지' 등을 약속받는 순간엔 한국타이어 노동운동의 절정이었다.

기나긴 수배생활의 시작

그런데, 농성이 끝난 뒤 농성가담자들이 하나둘씩 다른 도시의 대리점으로 전보됐고, 노민주 내부의 분열마저 겪으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12월, 가장 가깝던 동료 두명이 구속된 뒤, 박 씨에게도 검찰의 소환장이 날라왔고 이때부터 기나긴 수배생활은 시작됐다.

"몰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수배생활은 고통스러웠다. 오갈데 없는 처지다 보니 길에서 밤샘하는 일이 잦았고, 병원 영안실 신세도 많이 졌다. 영안실에 있을 땐 죽은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편해 보였다고 한다. 먹는 문제도 힘들었다. "구결생활과 다름없었다. 안 주면 뱃고 싶었고, 흠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박 씨의 수배생활 중 가장 치열했던 순간은 96년 5월 김민주(가명) 씨가 의문의 성폭행을 당할 때였다. 한국타이어에 입사하기 전부터 든든한 후원인이자 동지 역할을 했던 김 씨가 박 씨를 쫓는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 "그날 민주에게 걸려온 전화 첫마디는 '빨리 피하라'는 것이었다.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고 말하는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지금도 민주 씨가 사준 신발과 옷을 입고 다닌다. 잊지 않기 위해서다.

전국을 뛰어다니며

힘든 수배생활이었지만 박 씨에게 해아할 일이 있었다. 그는 전국의 사회단체와 학교, 노동현장을 다치는 대로 찾아다녔다. 풍뎉는 자료집을 들이밀며, 한국타이어의 현실을 고발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노력은 97년 여름 농성투쟁 당시 각계 노동·사회단체로부터 지원을 끌어낸 밑거름이었다.

베낭 깊숙이 넣어둔 옷

박 씨는 수배생활 중 세번재 맞는 울겨울이 유난히 춥게 느껴진다고 한다. 주변에선 '자수하라'는 이야기도 많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수배의 고통을 받아들일 작정이다. "동지들의 피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씨는 수배생활에 들어가던 날 입었던 옷을 베낭 깊숙이 넣고 다닌다. 수배가 해제된 날, 다시 그 옷을 입고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다.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싶다"는 그의 말 속엔 시들지 않는 결연함이 배어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전.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월 20일(화)

제 104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한총련수배자 주변인도 고통

친인척 물론, 어머니 동창생까지 시달려

수배중인 대학생의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이 경찰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경찰이 수배자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 도청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배중인 안광호(27·경기도 공대 학생회장) 씨의 가족은 19일 경찰의 잦은 방문과 전화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안 씨의 어머니 박 아무개(53·의정부) 씨는 "지난해 9월 이후 수원·의정부경찰서 등에서 열차례 가까이 집으로 찾아왔으며, 전화도 수시로 걸려왔다"고 말했다. 박 씨는 또 "직장에서 자주 경찰의 방문을 받은 큰 아들은 상사에게 꾸중을 받기도 했으며, 목포·장흥 등 각지에 살고 있는 친척들도 경찰로부터 시달림을 받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안 씨의 여자친구 주변 사람들도 찾아다녔으며 그 과정에서 도청 의혹도 받고 있다.

애인 장성욱 씨에 따르면, 경찰은 장 씨의 부모를 만나 안 씨가 수배중인 사실과 그 집안의 내력까지 이야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장 씨는 "경찰이 집으로 걸려온 전화를 추적해 광호 씨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내 친구의 애인을 찾아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안 씨의 어머니 역시 "경찰이 옛날 동창의 집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동창의 집까지 찾아가 아들의 소재를 물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경찰에게 '도청도 하지않고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냐'고 따졌는데, 경찰은 '전화국의 통화내역을 통해

번호를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안 씨의 애인 장성욱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피해와 관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재벌개혁 공대위' 구성키로

민교협, 민변 등 11개 사회단체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11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19일 민주노동회의실에서 집행책임자회의를 열고 '재벌개혁·경제주권·고용안정 실현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 구성에 대해 합의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자와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양심세력을 결집하여 범국민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IMF, 미국등 투기자본이 한국에 초긴축정책을 강요하고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외국 민간투자가들 또한 금융기관 및 기업에 정리

해고제 도입등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채 오히려 정리해고제 조기도입과 재벌체제의 유지·강화에만 힘을 쏟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민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주축로 정책워크숍을 20일 개최하고 설날 이전에 공대위 준비위를 발족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17일 민주노동(위원장지무대행 배석범)은 종로공원에서 노동자, 학생, 시민등 1천5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리해고제 결사반대 및 재벌개혁, 경제주권 수호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동은 "정부가 금융산업 정리해고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노사정위원회 불참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사업주의 즉각 처벌·시정조치, IMF와의 즉각 재협상 추진, 김대중 당선자의 임시국회 강행에 대한 반대입장 발표요구"등을 거듭 요구했다.

이후 민주노동측은 명동성당까지도 보행진을 벌였으며 '재벌을 해체하고 국민생존권 쟁취하자' '재벌총수 재산 환수하여 국가부도 막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친후 명동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 선전활동과 정리집회를 가졌다.

인권유린 고발 기자, 법정에서

한국타이어 보도관련 명예훼손 혐의

한국타이어의 인권유린 행위를 고발했던 기자가 법정에서 서게 됐다.

지난해 7월 월간 <말>지를 통해 한국타이어 신탄진 공장에서 벌어진 강제노동·부당해고·폭력테러 사실을 폭로하는 기사를 쓴 김동진(대전 국도일보) 기자는 오는 2월 5일 대전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1심 첫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한국타이어측은 지난해 8월 김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대전지검(담당검사 이동기)은 12월 10일 김 기자를 기소했다.

전교조문제 국제사회에 호소

이동진 씨, 호주 교원노조대회 참가

교원단결권 확보를 위한 국제연대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교조 이동진(46) 부위원장 서리는 세계교원노조총연맹(EI) 등과 IMF체제와 ILO 조사단방한에 대처할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5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 서리는 16일부터 19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호주 교원노조 연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한국의 교사와 노동자의 지위"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노사정 위원회 구성,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 등 IMF 체제하의 한국 노동자의 상황과 전교조의 투쟁 등을 밝힐 예정이다. 그리고 호주교원노조와 전교조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2월 9일 방한하는 ILO 조사단은 사무차장과 스웨덴(노측 대표), 호주(사측 대표), 인도(정부측 대표)의 대표로 구성된다. ILO는 96년 6월 집행이사회 결정을 통해 "전교조 결성은 교사들의 정당한 단결권 행사이므로, 사립 및 공립 학교의 교사들이 단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한국은 케냐와 함께 유일하게 교원단결권을 허용하지 않아 ILO에 제소되어 있다. 지난해 2월에는 EI와 국제공공노동조합총연맹(PSI)의 주요 간부들이 국제수준에 맞는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내한한데 이어, 같은해 5월 EI는 전교조 김귀식 위원장등의 징계에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정부에 보내기도 했다.

..... 주요 공판 안내

- ▶ 20일(화) 송유진(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배병희(국보법 찬양·고무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김남식(국보법 찬양·고무등, 한총련)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유덕상 외5(업무방해) 오후2시30분, 3단독, 423호, 속행
- ▶ 21일(수) 신광수 외 1(국보법) 오전10시, 합의1부, 418호, 선고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 오후2시, 합의3부, 421호, 신건 강병식(국보법 등) 오전10시, 합의5부, 425호, 선고
- ▶ 22일(목) 민경우/나창순/이종린/이천재(국보법, 범민련)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조응주(국보법등) 오후4시, 3단독, 317호, 속행
- ▶ 23일(금) 김은교(국보법 찬양·고무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심정웅 외2(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신건 신승우(국보법 등) 오후3시, 합의1부, 418호, 속행 윤석진(국보법 등) 오후4시, 합의5부, 425호, 속행

주간/인/권/호/름

(98년 1월 12일부터 1월 18일까지)

◆ 12일(월) 법무부, 검찰중립화 방안 및 인권위원회 신설등 대선공약사항 다룰 검찰제도개혁위원회 발족 예정/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등, 정리해고제 반대 성명/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9일 경찰에 연행된 김동원 감독 구속영장실질심사 거쳐 석방/유럽회의(EC) 인간복제금지지정서 서명

◆ 13일(화) 대통령직인수위, 국민연금과 의료·산재·고용보험 등 4대 공적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기구 일원화 추진/정보통신부, 수사기관이 급박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법원 영장없이 전화 감청 협조를 요청할 때는 시급성을 인정하는 검사의 지휘서를 제출해야하며 감청은 경위급 이상 간부만 할 수 있도록하는 전화감청 남용방지 마련 계획/전국철거민연합 간부 6명, 용산구 중립동 재개발지구에 갔다가 (주)입산 직원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와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페루 정부, 96년 빈곤층 여성 10만명을 상대로 집단 불임수술 시행

◆ 14일(수) 서울대 김진균 교수 안기부가 지난해 11월 '북한 직파간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거론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국가와 고성진 안기부 대공수사실장을 상대로 1억원 손해소송 제기/암부병중인 비전향장기수 신인영(70·31년 복역) 씨에 대한 대전교도소측의 형집행정지 신청 기각/정부, 근로자과제제 도입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 임시국회 제출예정

◆ 15일(목) 민예총, 제1차 문화정책 포럼 열고 '관료중심의 문화정책 근절' 등을 골간으로한 문화부 조직개편 기본방향 발표/서울대 국내 대학 내 처음으로 논문표절, 성희롱, 과도한 정치활동, 입시관련 개인지도 등을 규제하는 윤리위원회 설치하고 윤리규범 제정키로/프랑스 실업자 시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시위를 정당한 것으로 생각

◆ 16일(금) 대통령직인수위, 노령연금이 ILO기준(53%) 이상은 돼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노령연금 급여율이 가입기간 월평균보수월액의 55~60% 선에서 결정될 예정/서울지검(안강민 검사장), 전·노 비자금 추적반 두고, 전·노 씨의 은닉 비자금 정밀추적키로

◆ 17일(토) 민변, 민가협, 민교협등 한국사회의 사상·표현의 자유에 관한 워크숍 가져/프랑스 수만명의 실업자 전국 20여개 주요도시에서 일제히 시위

◆ 18일(일) 경기도 수원 성남 등 30개 시·군 대형건물 4백47개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1백57개 건물이 2백74건의 지적 받아/한국노총, 불법부당 감원 및 정리해고 고발센터 운영

특별
기고

당면 경제위기의 의미와 대안

김상조(한성대 경상학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이사)

현 경제위기는 결국 인권의 위기로 직결될 것이다. <인권하루소식>은 당면 경제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글을 실는다(편집자주).

현재 한국 경제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기가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걸은 이래로 경제위기가 아니었던 시기가 별로 없었고, 동시에 그 경제위기의 순간마다 자본축적의 새로운 조건이 형성되었던 것이 우리의 한결같은 경험이다. 물론 국가부도상태로 일컬어지는 현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위기의 심도가 감렬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자본주의가 붕괴될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 시기의 문제는 지배블록(보수정치권과 독점제벌)이 위기극복을 통해 재편하려고 하는 축적구조의 방향이 무엇이며, 이에 저항하는 노동대중의 전략적 대안이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는가이다.

위기는 남은 질서로부터

먼저, 현 경제위기의 근본배경부터 살펴보자. 그것은, 지난 60년대 이래의 축적구조, 즉 국가주도적·재벌중심적·노동배제적·대외의존적 축적구조가 이미 낡은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그것의 주도세력이 자본이든 노동이든 간에)는 형성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최근 10년간의 한국 자본주의 역사는 이미 생명력이 고갈된 남은 질서를 억지로 끌고 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재벌은 독점자본으로서의 경제권력을 확립하였지만, 취약한 축적기반으로 인해 천민자본으로서의 속성을 탈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화할 뿐이었다. 국가는 자본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축적조건을 정비하는 총자본으로

서의 기능과 관련하여서도 재벌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었다. 이러한 지배블록 내부의 균열은 결국 노동대중에 대한 해계모니 상실로까지 이어졌고, 사회통합력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한편 노동대중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한국 사회의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였지만, 객관적 조건의 악화와 주체적 역량의 미성숙으로 인해 대안세력으로 결집되지는 못하였다.

소수기득권층의 자유만 확대할 뿐

결국 현재의 위기는 경제위기일 뿐만 아니라 정치위기이기도 하다. 그 대표

노동대중의 대안은 명확하다. '소유권에 기초하지 않은 권리' (사회적 자유)라는 개념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적인 증거가 바로 노동관계법 날치기 전후의 상황전개이다.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을 표방하였던 국가권력(YS정권)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확신했던 독점제벌도, '노동약법의 개혁'을 요구하였던 노동운동세력도 모두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지 못하였고, 모든 계층계급이 정치적 패배자가 되고 말았다.

어떠한 계층계급도 사회통합의 주체로 기능할 수 없을 정도로 남아버린 기존 질서에 대해 이제 IMF라는 외적 강제가 부과됨으로써 한국 자본주의는 새롭게 재편되게 되었다. 물론 재편의 기본방향은 IMF가 대변하는 미국의 경제질서, 즉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자유

는 결코 '만인의 자유'가 아니다. 미국의 신자유주의는 사적 소유권의 신성불가침성을 전제로 하면서, 다만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사적 소유권을 가진 자, 그중에서도 아주 많이 가진 '소수 기득권층의 자유'만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 때의 소수 기득권층은 초국적 독점자본과(이에 대해 새로운 종속적 파트너 관계를 구축할) 국내 독점제벌을 의미한다.

고용안정·재벌해체투쟁으로

재편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선, 재벌에 대한 IMF의 요구는 경영투명성 제고(상호 지급보증 해소, 결합제무제표 작성 등)일 뿐 재벌해체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과정에서 살아남는 재벌은 보다 집중되고 근대화된 독점자본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 노동대중에 대한 IMF의 요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본의 소유권 행사에 방해가 되는 노동의 권리, 즉 소유권에 기초하지 않은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노동대중에게는 굶어죽을 자유만이 남았다.

그렇다면, 노동대중의 대안은 명확한 것이다. '소유권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권리(신자유주의적 자유)'라는 개념을 극복함으로써 '소유권에 기초하지 않은 권리(사회적 자유)'라는 개념을 확산시키고 제도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구체적 상황에서 이것은 다음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노동대중의 생존권 확보 투쟁, 특히 정리해고제 도입 반대를 통한 고용확보 투쟁으로 제시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소수 기득권층, 특히 재벌총수의 소유권 제한을 통한 재벌해체 투쟁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구체적 실천과정을 통해 노동대중은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주도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월 21일(수)

제 104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IMF시대 인권, 총체적 위기

시민·사회·종교단체 '개혁과제' 논의

IMF제재 아래 국민인권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무더기실업사태로 대표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위기 뿐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문제, 여성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 등 사회 전반의 인권수준이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IMF 위기제해의 개혁과제' 정책워크숍은 이러한 IMF시대의 각 부분별 위기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과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우선,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남인순 사무국장은 "보수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아래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적 해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는 여성의 노동권을 공공연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량실업사태는 가정내 불화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여성에 대한 폭력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의 정리해고와 임금체불 사태도 알려진 것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의 정성희 대외협력국장은 "현재 70-80%의 사업장에서 임금체불과 해고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특자기업마저도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탈법적 인원감축과 임

금체불·동결·삭감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서민 '인생부도' 직면

도시서민들의 처지는 더 비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연합의 김영준 사무총장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선 전·월세값이 폭등하고 전세금을 못받아 고동받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또 재개발지역에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세입자용 기아주단지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철거용역회사의 횡포는 더욱 잔인해지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주요 생계터전인 재래시장과 임시고용직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데다, 7부까지 치솟은 사채이자로 인해 서민들은 '인생부도' 직전에 몰려있다고 한다.

이밖에도 박천응 목사(안산외국인상담소 소장)는 "외국인노동자들은 '몽둥이로 개 내몰듯' 쫓겨나고 있다"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사회운동진영 공동대응 시급

한편, 이같이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진보개혁적인 대안의 제시와 사회운동 진영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기조발제에 나선 조희연 교수(성공회대 사회학)는 "각 부분별 과제 외에도 사회운동 진영이 대응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가 있다"며 △불완전한 민주주의 △천민적 자본주의 △분단반공냉전 사회 △왜곡된 보수적 시민사회 등을 바로잡기 위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 "부분별 개혁과제를 국민적 개혁과제로 만들기 위한 연대들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제3세계 국가들과의 국제적 연대활동이 시급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워크숍엔 54개 단체에서 1백여 명의 회원들이 참가해 개혁과 진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미결수 처우, 현재 심판 회부

현재, 서준식씨 헌법소원 받아들여 미결수 처우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심판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영등포구치소 수감)씨가 △검찰조사 대기과정에서의 수감 사용 문제 △미결수 수의착용 문제 △일간지 구독금지 처분 등과 관련해 제기한 세 건의 헌법소원을 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했다(본지 1월 6일자 참조).

한편, 영등포구치소는 지난 5일 서준식씨가 △사복 착용 △인권하루소식 구독 및 신문기사 삭제금지를 요청한 데 대해 "관계규정상 불가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그러나 구치소측은 "관계규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으며, "인권하루소식 구독불허 및 신문 기사 삭제 근거를 알려달라"는 서 씨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유럽의회, 한국 사형집행 규탄

한국의 사형집행을 규탄하는 결의문이 15일 유럽의회에서 통과됐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12월 30일 한국에서 23명의 사형수에게 사형이 집행된 사실과 현재 50명의 수감자들이 사형선고를 받고 있는 사실을 규탄하며 한국정부가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포할 것을 요구했다.

한미행협 개정과 방위비 분담금 축소 촉구대회

때: 오늘 오전 11시, 곳: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②

호주 인권및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곽노현(운영위원, 방송대 법학과 교수)

호주 인권및기회균등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목적은 인권과 기회균등에 대한 이해, 승인 및 실천을 증진시키며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인권법상의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사회를 촉진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가. 인권관련진정사건의 처리

위원회는 국제인권규약B(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국제노동기구 제111호 조약(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금지조약), 어린이권리조약, 어린이권리선언, 장애인권리선언, 정신지체자권리선언, 모든 형태의 불관용 및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한 차별철폐선언등의 국제인권법과 성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원주민토지권리법, 프라이버시 보호법 등의 국내법 위반사안을 조사,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여기서 알수 있듯이 위원회는 국제인권규약A, 공경제, 사회, 문화적 인권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진정처리권한도 갖지 못한다. 이 점은 현행 위원회가 갖는 가장 큰 한계의 하나로 지적된다.

진정이 제기되면 위원회는 일단 양당 사자를 불러 사안을 들어본 후 일단 조정 (conciliation)을 시도한다. 국제인권법과 관련된 진정사건의 경우 위원회는 조정권한만을 갖는다. 즉,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로서는 더 이상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 반면 국내법 위반사건의 경우 조정이 성공하지 못하면 위원회 내부의 반차별심판부 (Anti-discrimination Tribunal)에 사건을 회부한다. 이런 경우는 총 진정건수의 약 5%선을 넘지 않는다. 당사자주의로 진행되는 법정소송과 달리 위원회의 심판절차는 직권주의로 진행된다. 따라서 변호인이 없어도 된다.

위원회의 결정에는 하지만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한때 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이 주어진 적이 있었지만 이는 대법원의 93년도 Brandy 판결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정부기관의 하나인 위원회에 사법부만이 가질 수 있는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진정인들은 여전히 위원회의 결정(공개사과, 원죄복귀, 손해배상등)을 순순히 따른다고 한다.

나. 인권관련소송에의 참가

위원회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어떤 인권관련 소송에도 해당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참가할 수 있다. 고르고 골라 1년에 서너건 정도 참가하지만 법원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크다. 위원회의 개입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인권사건 재판부가 아무래도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 인권관련쟁점에 대한 공개조사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는 관행에 대해 위원회는 대규모 공개조사를 벌일 수 있다. 보통 1년 이상씩 계속되며 결과는 두툼한 보고서로 나온다. 피해자나 관련단체, 인권전문가 기타 이해관계인들은 청문회에 출석, 발언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신지체인의 인권에 관한 조사, 집없이 떠도는 이 들(homeless)에 대한 조사, 원주민들의 구금중 사망에 대한 조사, 원주민 신생아를 백인가정에 강제입양시켜온 관행에 대한 조사등이 유명하다.

라. 인권관련 연구 및 교육, 훈련, 홍보 인권교육과 훈련도 매우 활발하다. 이를 위해 포스터, 안내서, 해설서, 비디오등을 제작하며 끊임없이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예

컨대 성희롱의 경우 두툼한 교육자료가 사기업 관리직용, 공공부문용, 대학용등으로 별도로 나와있을 정도다. 또한 위원장과 위원은 물론 직원들도 매우 왕성한 강연 및 기고 활동을 수행한다.

바. 인권관련 국가 법령, 정책, 관행과 관련한 대정부 조언 및 자문

예컨대 위원회는 법령과 관련하여 외국인수감자국제인도법, 나이차별금지법 등을 새로 제정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으며 정책과 관련해서는 보트 피플(곧 선상난민들)에 대한 호주정부의 무조건적 구금관행을 난민 권리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정부의 정기보고서 작성이나 국제인권회의에 파견되는 정부대표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사. 인권상 수여

매년 인권의 날, 곧 12월 10일에 수여한다. 인권메달과 인권상 두가지가 있다. 인권메달은 호주 최고의 인권상이다. 인권상은 단체상, 영화상, 문학상, 르포기사상등 8개부분으로 시상된다. 인권상의 관련화를 막기 위해 수상자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위원회의 목적은 인권과 기회균등에 대한 이해, 승인 및 실천을 증진시키며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인권법상의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사회를 촉진하는데 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월 22일(목)

제 104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주한미군, 국민 허리 조른다

을 한해 방위비분담금 4억달러 달해

한국경제의 국가적 부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위비분담금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 탄약이나 유류관리, 무기 및 전투부대 배치,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군사건설비 지원 등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해 정부가 분담하는 비용으로, 95년 이후 연간 3억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었으며, 올해 한 국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3억9천9백만달러에 달한다.

이와관련, 21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앞에서는 주한미군법죄근절운동본부(삼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 주최로 '한미행정협정 개정과 방위비 분담금 축소 촉구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김창수(통일맞이 자료실장) 씨는 "수억달러가 넘는 방위비 분담금이 우리를 더욱 궁핍하게 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삭감하여 IMF를 극복하자"고 주장했다.

정부측도 21일 방한한 코인 미 국방장관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지불문제를 주요의제로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정부가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는 무기사업과 관련해 김 실장은 "환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97년도 군 무기구매 사업 등에서 국방예산의 환차손이 2천5백여억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며 환차손을 줄이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무기구입을 줄일 것을 주장했다. 97년 국방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무기

구매계약 실적은 94년 10억1천2백26만 달러, 95년 10억8백7만달러, 96년 15억4천3백26만달러 등으로 무기수입 세계 4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함세환 씨 집행유예 선고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함세환(67·전쟁포로) 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 전주해판사는 "함 씨가 각종 집회에 참석해 자신의 북한승환을 호소한 것은 전쟁 포로로서 북한에 가고 싶어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왔다고 인정되지만, 보안관찰대상자로서 실정법을 어긴 이상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함세환 씨는 한국전쟁 때 전쟁포로로 잡혀 36년간 수감생활을 한 끝에 89년 출소했으나, 보안관찰대상자로 지정돼 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왔다. 검찰은 함 씨가 집회에 참석하고 다른 보안관찰대상자와 회합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동 교수 병보석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광주대 박지동 교수가 21일 병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준식 대표 첫 공판

재판부 변경으로 연기됐던 서준식 대표 첫공판 날짜가 결정됐습니다.

▶ 때: 1월 30일(금) 오후 2시 ▶ 곳: 서부지원 304호 법정 (지하철 5호선 공덕역에서 5분거리)

만화사랑방



이동수

<내용 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숍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20일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등 20여 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공동정책워크숍을 갖고 각 부문별 또는 국가적 개혁과제들을 다양하게 논의했다. IMF시대와 새 정권출범을 맞아 요청되는 주요 개혁과제들을 발제와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편집자주>.

▶ 조희연 교수 기초발제

1. IMF에 의해 강요된 개혁을 주체적인 진보적 개혁으로 추동하는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2. 민주 대 반민주 구도의 실질적인 해체과정에 따른 사회운동의 변화도 요청된다.
-김대중 정권과 IMF체제 하의 사회운동 과제
(1) 시민사회운동의 이념적 지평 확장
(2) 시민사회운동 내부의 진보개혁적 파트너쉽에 기초한 공동행동의 실험과 강화
(3) 수구보수적, 극우적 세력 약화 추동, 관련단체 해체문제
(4) 주요개혁운동 영역: 재벌개혁, 사회보장 혁신, 반민주제도 개혁, 진보적 공약 실현 추동, 반부패의 제도화 및 입법, 남북관계 개선 및 탈냉전적 인내부개혁, 인적 청산, 언론개혁(및 국민방송국 설립운동), 조세개혁 등. 핵심과제는 재벌개혁과 언론개혁

▶ 노동운동 과제

1. 경제과탄 책임자의 규명 및 처벌, 재벌체제의 근본적 개혁, IMF(미국)의 부당한 개입·간섭 저지를 통한 경제주권 수호
2. ILO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교사·공무원 노동3권 등) 쟁취, 산별노동조합 건설의 토대 구축
3. 재벌체제 개혁, 세제·재정 개혁, 사회복지제도 개선 등

▶ 환경운동 과제

1. 고비용저효율의 공급위주정책 폐기
2. 대통령직속 국가환경위원회 설치:

환경에 영향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및 금지권한 부여

3. 자연생태보존 행정의 통합: 내무부, 문체부, 산림청 등으로 산재해 있는 기능을 환경부 자연생태보전국으로 통합

4. 수질·수량 등 물관리 업무의 환경부 통합

▶ 여성운동 과제

1. 공공부문 고용할당제 도입
2. 비정규직과 시간제 노동자까지 실업급여 지급대상 확대

▶ 인권운동 과제

1. 과거 인권유린의 완전한 청산: 정치범 석방, 5·18진상규명 및 피해자 배상, 진실규명위원회 설치
2. 국제인권수준에 맞는 법·제도 정비: 유엔 원칙에 따른 국민인권기구 설치, 각종 인권조약 유보조항의 철회, ILO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151호(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 결정절차에 관한 조약) 비준,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인권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등
3. 사회권의 전면적 보장 및 확대: 정부예산의 10%이상 사회복지 예산으로 확보, 외국인노동자·여성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집단에 대한 인권보호 증진, 주거권·교육권·건강권 보장
4. 인권교육 및 계몽: 제도교육 안에 인권과목 신설, 인권교과서 제정, 수사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5. 사법절차의 민주적 개혁: 영장실질심사제 복원, 특별검사제 도입 통한 공권력 남용 방지
6. 시민사회의 민주적 기반 조성: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전자주민카드 사업 전면 폐지, 지뢰금지조약 가입, 국가폭력의 예방 등

▶ 전국연합 주요 사회운동과제

1. 양심수 석방, 수배자 해제, 과거청산 및 민주화운동 희생자·열사 명예회복운동
2.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폐지운동
3. 재벌개혁, 고용안정, 경제주권 수호운동
4. 민생현안 지지·지원운동: 전교조 합법화, 농가부채탕감, 농민생계보장, 식량자급 등 농업보호 및 농업개혁, 도시빈민 주거권 및 생존권 확보운동
5. 민족자주권 운동: 미군기지 되찾기, 방위비 삭감운동, 한미행협 개정운동 등
6. 평화정착과 민족화해, 통일환경조성을 위한 통일운동
7. 지방자치 확대와 지자체 선거운동

▶ 언론개혁 과제

1. 공보처 폐지
2. 방송위원회 독립 및 공영방송사장 선임제도 개선
3. 언론사 소유구조 개선
4. 편집·편성권 독립
5. 방송광고영업 독점해소와 공익자금 운영 개선
6. 국가보안법과 특수자료 취급지침 폐지, 개정
7. 미디어교육 실시
8. 시민언론운동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
9. 강제해지 언론인의 명예회복

행사와 동정

- 차기정부의 보건의료사회복지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 때: 1월 22일 (목) 오후 1시 - 4시
 - 곳: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정세토론회 '김대중정권의 출범과 노동자 민중운동의 진로'
 - 때: 1월 23일 (금) 오후 3시
 - 곳: 종로성당 3층강당 (종묘공원)
 - 주최: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월 23일(금)

제 1049 호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비디오 사전심의 위헌”, 위헌제청신청 서준식씨 변호인, 공진협도 검열기관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 씨의 구속과 관련하여 위헌제청신청이 다시 제기되었다. 22일 서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중 변호사 등은 서울 서부지원담당 재판부(단독1부, 재판장 최정열)에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음비법) 제17조, 제25조의 일부 조항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신청서에서 김변호사들은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면서 “비디오는 영화와 마찬가지로 사상, 양심 및 지식, 경험 등을 표현하는 수단인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공영윤리위원회(공윤)가 비디오 제작, 판매에 앞서 사전검열을 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여 개정된 공영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11일 이전에 공윤에 의한 상영금지조치를 포함한 사전심의는 위헌이라고 제기했다. 이는 이미 96년 11월 서울지법이 같은 취지로 위헌제청을 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11일부터 활동을 개시한 공진협도 그 본질적 성격은 변하지 않았으면서 위원이 민간인으로 바뀌었을 뿐 운영이 공윤과 같으므로 위헌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 변호인들의 주장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서 씨가 지난해 공윤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인권영화제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상영하여 음비법을 위반하였다며 기소했다. 이로써 서 씨의 구속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등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에 이어 세번째 위헌제청신청이 접수되게 되어 한 사건에서 가장 많은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졌다. 또, 미결수의 처우 등에 관해 3건의 헌법소원이 이미 현재에 접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서 씨의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간의 법률논쟁이 뜨겁게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변호인단은 23일 미결수인 서 씨가 재판정에 나올 때 사복을 입고 나오도록 재판부에 청구할 예정이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 적용 범민련 민경우씨에 3년6월 선고

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던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씨 등 범민련 관계자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2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본지 12월 20, 24일자 참조).

재판부는 “민 씨가 북한동포돕기운동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및 통일회합, 국가기밀 누설 등에 대한 사실인정이 충분히 정역 3년 6월,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씨가 일본의 범민련 공동사무국으로 편의제공을 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뒤집고 예비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변경하여 적용했다.

이와 관련, 김병주 변호사는 “법원이 민 처장의 동포돕기 성공 전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이 법 적용을 해석한 것은 절차상 과정을 이긴 채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유야만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민 처장이 일본 조총련 간

부와 통화한 혐의에 대해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죄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검찰이 민 처장의 구체적인 통화내용을 범법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단지 안기부가 민 처장에게 한국통신의 통화사용내역서를 근거로 추궁하여 자백받은 것을 검찰이 제출, 법원이 증거자료로 채택한 것은 보강증거내용으로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 등을 적용받은 이종린, 나창순 씨는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인도받았다.

남북교류협력법이란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을 배제한 채 정부주도에 의한 통일문제 및 남북창구를 일원화한 법으로 일반인이 북한 주민을 접촉하거나 통신·회합을 하고자하는 경우 반드시 통일원장관의 확인이 필요한 법이다.

코언 미국방 발언 강력 비난 KCBL, 남북 지뢰조약 가입 촉구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공동대표 문정현 신부등, KCBL)는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반도에서 대인지뢰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한 코언 미 국방장관과 미국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KCBL은 정부에게 오는 3월 열리는 4자회담 2차 본회담에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인지뢰금지조약에 가입하는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을 주장했다.

한편, KCBL은 2월초 방한하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조디 윌리엄스 씨의 방한과 관련하여 23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서준식 대표 첫 공판

- ▶ 때: 1월 30일(금) 오후 2시
- ▶ 곳: 서부지법 304호 법정
(지하철 5호선 공덕역에서 5분거리)

의료구조 전환 시급

의료지출 IMF형 사회불안 요인

한국경제가 '저성장 고실업' 시대로 접어들어 따라,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권에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발상 전환과 정책의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창엽 교수(서울대 의대)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부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심포지움'에서 "지금까지의 보건의료는 정부의 목표부재와 책임회피, 역량이달로 인해 심각한 왜곡과 비효율성을 낳았다"며 이러한 보건의료정책의 결과, 국민들이 '각자 알아서 부담해야하는' 개인부담형 의료구조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했다. 김교수에 따르면, 85년부터 94년 사이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출 증 가세가 부담한 몫은 매년 55%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 경제위기를 빌미로 그나마 기업이 부담하고 있던 비용과 의료비 원가 상승 요인도 고스란히 개인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개인부담형 의료구조와 더불어 의료공급의 무정부적 팽창구조가 한국 보건의료의 위기를 가져온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당장 시급한 과제로서 △의료보험 통합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고액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개인은 가계에 파탄이 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의료지출'이 'IMF형 사회불안'의 가장 중요한 원인

방양균 씨 징역 1년6월 구형 보안관찰법 위반 2월19일 선고

보안관찰법으로 불구속 기소된 방양균(서경원 방북사건) 씨의 결심공판이 22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국상중)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방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방 씨는 "역지로 공산주의자를 만드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다"며 자신에게 지워진 '사생활신고 의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통합 △일정액 이상의 고액 부담금을 이밖에 의료비 부담에서 가계와 개인 의료보험에서 부담하는 방법 △예방접종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직종이나 산전진찰의 의료보험 적용 등 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달의 인권영화: 매카시 선봉

누군들 역사의 증언을 막으랴

- <비공개> : 감독 어윈 왕글러 주연 - 로버트 드 니로, 아네트 베닝
- <프론트> : 감독 - 마틴 리트 주연 - 우디 알렌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에는 '매카시'라는 괴물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각종 대중쇼 무대를 주름잡고 다녔었다. '많은 겸손한 보수주의자와 일부 겁에 질린 자유주의자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그는 사회 구석구석에 무소불능의 힘자랑을 했는데, 영화계 역시 그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이른바 할리우드에서의 공산주의 영향 가능성을 조사할 목적으로 '의회 반미활동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들은 일단 자술로서 공산주의자임을 시인하고, 자신과 함께 불온한 사상을 교류한 적이 있는 '동료들의 이름을 불러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들의 요구를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른바 '블랙 리스트'에 올랐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채 비참하고 굴욕적인 이직매를 당해야 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절의 이야기가 20여 년이 지난 후 후배 감독들과 배우들에 의해 영상 기록으로 재현되었다. 그 중의 두 편이 바로 '비공개'와 '프론트'다.

91년에 만들어진 '비공개'는 사실성에 입각해 기본에 충실한 어법을 구사한다. 위원회의 강요에 못 이겨 배우인 아내의 이름까지 리스트에 올려 살아남은 감독, 공산주의자는 아이를 울바로 키울 수 없다는 논리에 의해 아들을 빼앗기고 출연섭외마저 중단되자 자살하는 여배우, '독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정 모독이야. 말해 어서!' 확신에 찬 어조로 취조하는 위원, '나는 영화밖에 몰라. 계속 일을 하려면 위원회에 누군가의 이름을 대야 해. 네 이름을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줘, 제발'이라고 애원하는 시나리오 작가, '블랙 리스트에 올랐다고? 내 집에서 나가 줘 당장! 겁에 질려 친구를 내모는 뮤지컬 스타, 그 시대를 살았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날카롭게 고발한다.

이보다 15년 앞선 76년에 제작된 '프론트'는 접근 방식이 좀 다르다. 비공개가 사실적이고 치열하게 당시를 고발하고 있는 데 반해, '프론트'는 해학과 풍자 그리고 체플린(실제 그는 사상범으로 찍혀 미국입국을 거부당했다)식 비애가 배어난다. 스펙트럼 프론트에서 일하는 소시민 하워드는 방송작가인 고등학교 동창의 절박하고도 은밀한 요청을 받는다. 블랙 리스트에 올라 정상적으로 작품을 발표할 수 없었던 그 동창생은, 누군가 이름을 빌려줄 실존 인물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에게 이름을 빌려주고 일약 주목받는 인기 작가가 된 소시민 하워드. 그러나 수만 개의 끈적거리는 더듬이를 가진 '매카시 위원회'가 스타 작가 하워드를 '손보지 않고' 지나칠 리 만무하다. 정치나 사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원고료 10퍼센트와 스타 의식을 즐기는 게 전부였던 하워드는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았고, '누군가의 이름을 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몰린다. 하지만 소시민 하워드는 '순전히 자기식'으로 위원회 위원들과 관객의 뉘퐁수를 치며 그 자리를 교묘히 빠져나간다.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경범죄를 짓고 제발로 유치장에 들어가는 전범이라고나 할까. 지독한 초조와 연민 그리고 치밀한 고평격 카메라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 이미 다 아는 역사의 진실을 필름으로 공개했다 해서, 사상과 신체의 자유를 사냥 당하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고스란히 영상에 담아 상영할 수 있는 그 날을 고대하는 심정으로 말이다. (김경실 :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월 24일(토)

제 105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미결수 수의착용 부당

서준식씨, '법정에서 평상복 착용' 신청

우리나라 재판사상 최초로 구속중인 피고인이 사복을 입고 법정에서 공경을 볼 수 있을까?

국가보안법 위반등으로 구속·수감중인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는 오는 30일 열리게 될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담당판사 최정열)에 '평상복 착용'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 씨의 변호인단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개정하는 공판기일과 이후의 공판기일에 피고인 서준식 씨가 평상복을 입고 재판에 임하도록 해달라"는 신청서를 24일 중으로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현행 형법에는 물론 다른 어느 법령에도 구속피고인이 법정에서 수의를 착용한 채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근거규정은 없다. 따라서 "미결수용자가 수의를 착용하는 것은 수용기관측에서 피고인의 법정 호송 또는 계호에 편리하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따라 시행한 관행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제출할 신청서에서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라, 미결수용자는 당국의 수사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죄증인멸 및 도주의 방지를 위해서 구금되었을 뿐이므로 그 구금의 목적상 신체적 자유가 제한되는 외에는 일반사회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 △미결수용자의 무죄 추정 원칙은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원리라는 점 등에 비추어 미결수용자의 수의착용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우리 사법관행에 획기적 변화가

오게 될지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성차별적 여성해고 규탄

여연 총회에서 결의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지은희, 여연)은 22일 여성개발원에서 제12차 정기총회를 갖고 여성 우선 정리해고에 반대한다며 "노동부는 성차별적인 해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법원과 노동위원회도 성차별적인 해고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여연은 총회 결의문에서 "감원의 1차대상이 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심리가 극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열심히 일한 댓가가 결국은 해고대상의 0순위가 된다는 비참한 현실에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업도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불가피한 정리해고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노벨평화상 조디 윌리엄스 방한

대인지뢰 여론형성 계기 될듯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 공동대표 문정현 신부등)와 '97 노벨평화상 수상자 조디 윌리엄스 초청위원회(공동대표 김문규등)는 23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디 윌리엄스 씨 방한에 따른 대

인지뢰금지 한국 캠페인 일정을 밝혔다.

2월 2일 방한하는 조디 윌리엄스 씨는 2월 3일 '국제대인지뢰 금지운동과 한반도' 워크샵 참가를 시작으로, 2월 4일 '군비축소와 평화통일' 간담회 참석 및 비무장지대 방문, 2월 5일 '21세기 세계평화를 위한 NGO와 입법기관의 역할' 간담회 참석 등의 일정을 갖는다.

코언 미국방장관 발언 규탄

전주 정의평화정보센터 논평

23일 전주 정의평화정보센터(대표 문규현 신부)는 논평을 통해 22일 코언 미국방장관의 '한국 국방예산 삭감 반대' 발언을 강력히 규탄했다.

정의평화정보센터는 "코언 미장관의 발언은 무기장사를 위해 위기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골적인 위협"이라고 비난하며, 코언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다른 중진국들과 비교해 군사비의 비중은 2-3배로 많은 반면, 사회보장예산은 2-3배로 적은 것이 현실"이라며 "2002년까지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현재의 반으로 줄여간다면 30조원의 잉여액이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언 미장관은 22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이 한국경제가 어렵다는 점에 유혹돼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며 "국방예산의 삭감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서준식 대표 첫 공판

- ▶ 때: 1월 30일(금) 오후 2시
- ▶ 곳: 서부지원 304호 법정 (지하철 5호선 공덕역에서 5분거리)

<판결문> 불법 계호용구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재소자 징벌, 수감·포승 채우면 위법"

·사건: 96나1892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박 아무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
표자 법무부장관 김종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6. 3.
29 선고, 95나72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형법(1995. 1. 5. 법률
제 4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
조는 수형자의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포승, 수감 등 계구를 사용할 수 있음
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는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고
있는바, 계구의 사용은 사용목적과 필
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
해 정도,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
의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
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서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
고는 1993. 7. 22. 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죄로 구속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집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형소하여 영
등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1994. 1. 19. 13:45경 인사를 공손히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교도소장인
소의 송선홍으로부터 훈계를 받자 그
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이어 출입문
을 발로 2, 3회 걷어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교도소 직원인 소외 이영
준이 같은 날 14:00경 원고를 불러내
어 이러한 소란행위를 조사하기 위하
여 수감을 채우려 하지 원고는 이를
거부하며 성명미상의 직원과 면담을
잡고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결
국 교도소 직원인 소외 김관부 등에
의하여 수감이 채워지고 포승으로 묶
인채 독거실인 10사 19호실로 수용되
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과정에서 끌려
나가면서 휴게실 출입문을 발로 차 손
괴한 사실, 원고는 독거실에 수용된
후에도 계속하여 수감이 채워지고 양

손목과 양팔 및 상체가 포승으로 묶인
상태로 지내오다가 같은 달 22. 개회
된 징벌위원회에서 소란행위 및 시설
물 손괴를 이유로 금지 1월의 징벌처
분을 받고 종전과 같이 수감이 채워지
고 포승으로 묶인 상태로 독거실인 10
사 20호실로 수용되었으며, 독거실에
수용된 같은 달 19. 부터 징벌처분을
받은 같은 달 22. 까지 교도소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단식을 계속하여
온 사실, 교도소 측은 원고에게 수감
을 채우고 포승으로 묶은지 9일이 지
난 같은 달 27. 수감과 포승을 풀어
주었는데, 원고는 그동안 위와같이 수
감이 채워지고 포승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취침시 조그려 앉거나 옆으로
누워 잠을 잘 수밖에 없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수용생활에 있
어 상당한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
나, 교도소장이 교도관의 면담을 잡
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수감과 포승 등 계구를 사용한
조치는 적법하나, 원고가 소란행위를
종료하고 독거실에 수용된 이후 별다
른 소란행위없이 단식하고 있는 상태
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더이상 계구를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9일 동안이나
계속하여 계구를 사용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기록과 앞서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
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
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 20.
재판장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최종영
대법관 이임수
주심 대법관 서성

새해 첫 시국기도회

천주교 사제단 "양심수 석방" 촉구

새해 들어 처음으로 양심수 석방을
위한 시국기도회가 열렸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대
표 김진화 신부)은 23일 전주 평화동
성당에서 시국기도회를 갖고 양심수들
의 조건없는 석방을 촉구했다.

사제단은 이날 시국성명서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진 지금은 구시대
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역사의 새로
운 장을 구상하는 시기"라며 "김대중
당선자는 양심의 발로와 행동으로 인
해 투옥된 학생, 노동자, 시민들을 무
조건 석방하고 과거 불의한 정권에 의
해 유지됐던 제반 악법과 제도를 청산
하라"고 요구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따르면,
1월 17일 현재 전국의 구치소·교도
소·경찰서 유치장 등에 수감중인 양
심수는 모두 5백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전두환·노태
우 정권 시절 구속된 양심수는 47명이
며, 40년 이상 복역한 우용각, 윤용기
씨를 포함, 20년 이상 구금중인 초장
기수만도 27명에 이른다.

국제법률가협회, 국제펜클럽

서준식 씨 석방 촉구

국제펜클럽 구속문인위원회는 22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최정열 판사 앞으
로 서한을 보내 "오는 30일 열린 서준
식 씨의 재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서준식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했다.

국제법률가협회(IBA,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의 데스몬드 페르난
도 회장도 20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평화로운 인권활동을
펼친 서준식 씨의 구속은 표현의 자유
를 보장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
한 국제조약] 19조에 위배된다"며 서
씨의 석방과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요
구했다. IBA에는 세계 1백73개국 법
률가협회가 가입해 있으며, 2백50만명
이상의 법률가들이 소속되어 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월 27일(화)

제 105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택시노조 위원장 분신 중태

회사측, 노조가입방해·완전월급제 파기

지난 24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이천
지역택시노동조합 권오영(37세, 삼화
운수소속) 위원장이 단식농성을 벌이
던 중 삼화운수(사장 김학현)측의 폭
력에 맞서 분신했다.

권 위원장은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
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전신 55% 3도
화상을 입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다.

이천지역택시노조는 회사측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회사측의 부
당노동행위에 항의해 23일부터 삼화운
수 차고지 안에서 '회사측의 노조가입
방해·탈퇴강요, 단체교섭 거부 등 부
당노동행위의 즉각 중단 및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해왔다. 권 위
원장은 회사측이 24일 오전 10시경 농성
장에 난입해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휘
두르면서 강제로 자신의 손에 묶은 쇠
사슬을 잘라내고 풀어내던 중 회사측
의 폭력에 맞서 온몸에 신나를 붓는
순간 화염에 휩싸였다.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승
규) 관계자는 "택시노동자들이 최소한
의 생활임금보장이 되지않는 것이 사
실"이라며 "권 위원장 분신의 원인은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97년 9월 시
행하기로 합의했던 완전월급제를 정부
와 회사측이 수수방관하고 의도적으로
파기한 것에 있다"고 말했다.

서준식 첫 공판

▶때: 1월 30일(금) 오후 2시

▶곳: 서부지원 304호 법정

(지하철 5호선 공덕역에서 5분거리)

불, 1일 평균 1만5천원의 LPG가스 비
용을 전액 택시노동자가 부담해야 하
는 상태에서 50만원 정도의 월급을 지
급해왔다.

노동조합측은 ▲권 위원장 치료비 및
일체수습비용 전액 회사 부담 ▲단체
협약등 노조측요구 전면수용과 체결
▲삼화운수 사장과 상무 즉각 구속·
수사 ▲관내 택시업체 특별근로감독
실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및 야
간근로수당 즉각 지급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7일 광주에서 최
도근 씨가 '택시완전월급제 시행'을 요
구하며 분신하는 등 84년 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한 택시노동자대투쟁 이후
무려 13명의 택시노동자들이 분신으로
목숨을 잃었다(본지 97년 10월 8일자
참조).

현재 삼화운수에서는 노조원들이 민
주노총, 한국노총의 지원아래 천막 철
야농성을 진행중에 있다. 이천지역은
삼화운수, 신일운수, 이성운수등의 택
시회사들이 있으며 대부분의 회사가
상조회를 구성해 상조회 회원에게만
우대와 지원을 하고 노동조합원들에
게는 사납금미납, 차량입출고 등에 대
해 시달서를 받고 징계하는 사례가 다반
사로 진행되어왔다. 또한 입사시 노조
가입을 하지않는다는 각서를 받아 입
사시키고 차량입출고시간을 통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가해왔다고 한다.

삼화운수는 차량 27대를 보유한 회사
로 2일 근무, 1일 휴무로 48시간 장시
간 근무와 1일 8만3천원의 사납금 지

설날 관계로 인권하루소식은
사흘간 쉬고 31일자 발행합니다

출소한 양심수, 대다수 미복권

전국연합 집계, 미복권자 1천6백여명

새정부 출범과 함께 얼마나 많은 양심수가 석방되고 수배해제와 사면복권
의 기쁨을 누리게 될지 그 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천주교
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이 구
속자, 수배자, 미복권자의 신고를 받아왔는데, 지난 24일 마무리된 전국연
합의 집계만으로도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는 2백11명, 수배자 67명, 미복권
자가 1,613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양심수로 복역한 뒤 출소한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시
민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가운데는 전두환·노
태우 씨의 처벌을 주장하다 구속된 사람도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신고자 가운데 조병태(30) 씨는 95년 명지대에서 5·18 학살자처벌과
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를 받던중, 자진출두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아직도 사면복권되지 않고 있다. 천
주교인권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미복권자들은 현재 각종 국가자격시
험을 치를 자격이 박탈되고 직장에서도 복역사실을 숨기고 생활하다가 밝혀
지면 해고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한편, 전국연합은 접수된 명단을 24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김대중 정권, 서민에게 희망일 수 없다”

민교협·지식인연대, 23일 정세토론회 가져

지난 23일 오후 3시 종로성당 3층 강당에서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유초하 등)와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대표 김진균) 공동주최로 '김대중 정권의 출범과 노동자-민주운동의 진로'에 대한 정세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한 김세균 교수(서울대 정치학)는 현 IMF 체제를 풀이하는 김대중 씨의 해법에 대해 "철저한 신자유주의적 위기탈출책"이라며 "한국경제의 천민적 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본질은 자본운동의 자유를 전제계적 수준으로 극대화하고 위기부담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시키는 반노동자·반민주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현 시기 한국 민중운동세력들은 △생활임금의 확보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확보를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생활임금이 미지급된 부분만큼이라도 소유권을 이전 시키도록 요구해야 할 것 △노동조합소유분의 확대 등을 통해 대기업을 공기업 내지 노동조합소유기업으로 전환시키는 형태로 제벌체제를 해체시켜야 할 것 △노동3권의 보장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악법의 철폐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 △기업별노조체제를 신속히 산별노조체제로 전환시킬 것 △의회로의 진출이 아닌 노동자대중투쟁의 발전에 복무하는 노동자 정치조직의 건설을 위해 투쟁할 것 등을 주장했다.

민주노총(위원장 대리 배석범)을 대표한 김태현 기획국장은 "현재 노동현장에서는 노동자와 합의 없이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동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설한 기업조차도 IMF 체제를 빌미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2월 10일을 전후해 이러한 사태가 계속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도형 변호사와 최규업 전국연합 정책위원장은 모두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국보법의 개정, 폐지는 회의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김대중 정권에서는 적어도 국보법 남용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최 위원장은 "물리적 탄압은 줄어드는 대신 진보진영에게는 운동의 체제내화라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인권기구 TV 방영

“인권의 시대를 연다”

-호주 인권및기회균등위원회를 찾아서-

PD:이재규/ 대담:곽노현(방송대) 교수(시간 60분)

▶ 28일(수) 오전 9시15분, 오후 1시5분, 오후 3시30분, 오후 10시50분 (이상 케이블TV 채널 47: 4회 반복 방송)

▶ 2월 1일(일) 오전 7시30분 (EBS)

주간/인/권/호/름

(98년 1월 19일부터 1월 25일까지)

◆ 19일(월)

보건복지부·노동부 발표, 4대 사회보험 관리기구를 통합할 경우 연간 8천억~9천억원의 관리인건비가 감소해/96년 8·15 행사를 참여하려 방북했던 한총련 소속 유세홍, 도종화 씨 독일에서 정치망명 허가/한국 청소년 개발원 조사결과 중 우리나라 청소년 90.1%가 사회가 불만족스럽다고 대답, 주로 '사회의 빈부차기 크다'(86.2%)고 불만 표시

◆ 20일(화)

대통령직인수위, 전자주민카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법적인 정부예산을 사용하고 안기부와 경찰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감사원이 특별감사에서 집중적으로 규명해줄 것 요청/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 국내 경제동향과 관련한 전문집지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해 간첩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유진 씨에게 "대중매체가 아닌 전문지라도 일반인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면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간첩혐의 부분에 무죄선고/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보도, 독일 사민당 고용창출 위한 노사정 3자 연대 추진 공약화/리오넬 조스팽 프랑스 총리, 5주째 시위중인 실업자들의 요구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

◆ 21일(수)

이기호 노동부 장관, 무분별한 해고등 각종 탈법적 행위에 대해 엄단기조/민주노총, 종로성당에서 2차 중앙위원회 열고 일방적 국회소집이나 정리해고 법제화를 강행하면 총파업 방침 재확인/방한중인 윌리엄 코언 미국 국방장관 "한국내 대인지뢰 불가피" 발언/광주지법 형사1단독 임숙경 판사,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대 박지동 교수의 병보석 신청 받아들여 석방/안기부·육군 정보부대, 성남시 지원받아 68년 김신조 등 31명의 무장공비점투사건을 상기하자며 주민 2천여명 동원한 대규모 안보교육하기로 해 반축사

◆ 22일(목)

인천지방노동청 발표, 올해 20일까지 인천지역 실업급여 신청자 4천8백71명, 하루 평균 2백44명에 이르러 지난해 하루평균 32.3명 보다 8배이상 증가

◆ 23일(금)

의정부경찰서, 미군전용업소 여종업원을 때려 숨지게 한 뒤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해 주검에 불을 저지르는 등 흉악한 범행을 저지른 미군 제473야전시설 지원중대소속 헨릭스 티머시 제롬 병장 불잡아 미군 헌병대에 인수

◆ 24일(토)

쿠바를 방문중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산티아고 미사에서 쿠바 내 정치범들의 석방 촉구

◆ 25일(일)

노사정위원회, 공공요금 인상시 양대 노총과 소비자 대표참여 의무화 결정/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들 '체불임금 관리공단'(가칭) 설립 요구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월 31일(토)

제 105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서준식 씨 1차 공판 >

누가 양심을 단죄한단 말인가

악법·검찰 상대, 치열한 법정 투쟁

"양심의 자유를 포기한다면, 나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30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304호 법정.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준식(50·인권운동사랑방 대표) 피고인의 첫 공판이 열렸다.

"보안관찰법은 '내심'을 처벌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나는 인권운동가로서 양심의 자유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이 법률에 불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 대가로 나는 항상 체포가 가능한 인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삶은 계속될 것이다."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계속된다. "나는 가슴에 인권이라는 가치를 안고 산다. 그런데 실정법이 인권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부정할 때 인권운동가로서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실정법이 아닌 인권의 헌법적 요청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인권운동가가 악법철폐를 주장하면서 악법을 꼬박꼬박 지키는 것은 자기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의 '내심'

1백50여 방청객의 주목 속에 모두진술이 끝나고 검찰신문이 이어졌다. 신문에서 김용호 검사는 피고인의 과거 행적을 들추기 시작했다. 특히 서 피고인의 해외활동과 관련된 신문이 집중됐다.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참석 경우, 97년 5월 독일 방문시 초청자가 누구인지, 같은 해 7월 일본을 방문해 형제들을 만났는지, 형제들이 조총련 소속이 아닌지 등.

변호인측의 "본 사건과 관련없는 질문"이라는 이의제기에 검사는 '내심'을

털어냈다. "서준식 씨의 '이적' 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신문"이라는 것. 즉, 그의 해외활동이 북한과 연계가 있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싶었던 것이다.

검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피고인의 전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식, 행적, 문건 내용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은 사회주의 지향을 가지고 북한에 동조하고 있다. 따라서 <레드헌트>를 상영한 것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인 것이 분명하지 않냐고. 그러나, 이에 대한 서 피고인의 답변은 간단했다. "나는 인권운동을 했을 뿐이다. 나의 인권운동에 대해 검사가 어떻게 해석하든 그것은 자유다."

"법치주의 부정하는 건 검찰"

이날 모두진술에서 서 피고인은 '현행 국법집행을 전면 부정하는 자'라는 검찰측 주장과 관련, "오히려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것은 검찰"이라며

"법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제멋대로 집행하는 검찰이 국가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 피고인은 "법 적용은 평등해야 한다"는 주장 아래, 검찰에 여섯가지 내용에 대한 석명을 요구하기도 했다(아래 상자 참조).

재판부 '사복착용' 신청 기각

한편, 재판이 시작되기에 앞서 변호인단은 "미결수인 서준식 씨가 사복을 입고 재판을 받도록 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최정열 판사는 "수익작용은 일반적 관행이고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특별대우를 할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변호인측은 다시 "특혜가 아니라 법률상 미결수의 권리에 따라 대우해 달라"는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최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1월 24일자>

지난해 11월 4일 서준식 씨가 체포된 이래 세 달만에 열린 이날 재판은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설 연휴 다음 날임에도 불구하고 1백50여 방청객이 법정과 복도를 가득 메웠고, 고영구 변호사, 최영도 변호사(민변 회장) 등 11명의 변호사가 대거 법정에 참석했다. 다음 공판은 2월 20일 오후 2시.

<검찰 석명 요구사항>

1. 인권영화제 보다 한달 앞서 열린 부천 국제판타스틱 영화제에서 국내의 독립영화들이 무더기로 심의를 받지 않고 상영됐다. 왜 부천시장은 구속하지 않았는가.
2.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레드헌트>를 상영했다. <레드헌트>가 이적표현물이라면 왜 부산시장을 구속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는가.
3. 부산영화제에서 <레드헌트>가 심의를 통과했다. 이적표현물을 심의통과시킨 사람에게 어떤 문책이 있었는가.
4. 항상 보안관찰법을 위반해 왔는데, 왜 하필 97년 11월에 구속했는가.
5. [참된 시작] 을 쓴 시인과 출판사인 창작과비평사, 책을 유통시킨 대형서점 관계자는 왜 조사하지 않는가.
6. 다른 모금운동에 대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적용하지 않고 왜 인권영화제만 문제삼는가.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불구속재판 원칙을 회복시켜달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구속으로 생기는 커다란 고통은 고려하지 않는다. 구속에 따른 가족의 고통은 만만치 않다. 내 딸은 초등학교 1, 2학년이다. 어린 자식들이 느끼는 고통도 고려하는지 궁금하다. 신체를 쉽게 구속하는 사회는 가족과 어린이의 소중함에 무딘 사회다. 구치소에 미결수들이 넘쳐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내가 구속되던 11월 4일은 김현철이 석방되던 날이다. 불구속재판 원칙이라는 아름다운 말과 함께 그는 석방되었다. 내가 김현철보다 더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죽을 죄를 지었는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는 헌법적 권리다. 이 권리를 회복시켜 달라.

보안관찰법에 대하여

24살 때부터 41살 때까지 17년간 감옥살이를 했다. 내가 법원에서 받은 형기는 7년이었지만, 사상전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판도 없이 10년을 더 살았다. 양심의 자유는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다. 그러나, 사회안전법은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바꾸라고(사상전향을) 강요한다. 87년 6월항쟁 이후, 사회안전법이 보안관찰법으로 대체됐다. 그러나 그 치명적 인권침해 요소는 고스란히 남아 있다.

즉, 보안관찰법은 '내심'을 이유로 해서 불이익을 가하는 법률이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에도 위배된다. 이것이 보안관찰법에 대해 비폭력불복종 자세를 견지하는 첫 번째 이유다.

인권운동가로서 내게 닥친 인권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다. 매일매일 경찰이 전화를 걸어와 '집회에 가지 말라. 누구를 만나지 말라'고 한다. 10년동안 고통받아 왔다. 보안관찰법을 따른다면 인권운동을 할 수는 없다. 이것이 비폭력불복종의 두 번째 이유다.

보안관찰법의 취지는 해당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처분자의 일상생활을 낯낱이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

나 보안관찰법으로 구속할 때, 일상생활을 파악 못해서 또는 어마어마한 재범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보안관찰법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사회활동을 규제하는 데 있다. 양심의 자유를 포기한다면 나는 이미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20년을 더 산다면, 양심의 자유를 지킨 대가로 몇 번 더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반공이 아니면 국민이 아니라는 사고방식은 파소적 사고방식이다. 나는 소수자, 희생자로서 살아감으로써 우리사회의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말이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몸으로 드러내겠다.

레드헌트 이적규정과 관련해

검찰이 <레드헌트>에 이적 규정을 내린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인권영화제의 도덕성을 훼손시키려는 의도이다. 검찰이 인권영화제의 '사전심의 거부'만을 문제삼아 기소하는 것과 작품의 이적성을 시비삼아 기소하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인권영화제의 순수성이 받는 상처가 큰 것이다.

둘째, 서준식을 국가보안법으로 치기 위해서다. 지난해 썼던 여러 칼럼들을 검찰이 못마땅해 한 것을 알고 있다. 좌익수 출신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은 굉장히 큰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 집 욕실의 천장까지 뒤진 끝에 압수해 간 것이 박노해 시집 '참된 시작'이었다.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관련해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의 대상물은 '이적표현물(레드헌트) 제하의 비디오 테이프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피의사건 증거의 일체'로 되어 있다. 이러한 개괄적·탐색적 압수는 헌법에 위배되는 표적수사의 도구일 뿐이다. 실제로 수사관은 인권영화제의 회계장부나 회의 기록 등을 전혀 가져가지 않았다. "왜 관계없는 물품을 가져갔나"고 물으니 수사관들은 "모래 속에 진주가 있다"고 대답했다. 압수물품 중 '참된

시작' 하나가 문제가 됐다. 박노해는 곧 사면된다는데, 서준식은 유죄판결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불법압수 수색으로 확보된 물품을 증거물에서 빼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다.

비폭력불복종운동과 법치주의 공소장에서 나는 '현행 국법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다. 검찰은 내가 쓴 세 편의 칼럼을 인용했는데, 모두 비폭력불복종을 주장한 것들이다. 우선 '도덕적 우위만이 우리의 희망이다'라는 칼럼에서 나는 대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말고 불복종운동을 벌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불법적인 검문을 보고 쓴 '우리 모두 감옥에 가자'는 칼럼에선 공권력의 불법을 해결하기 위해 감옥에 가자는 내용을 썼다. 세 번째는 '한총련 탈퇴가 의미하는 것'이다. 한총련 탈퇴를 강요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할 것이 아닌 비열한 짓이다. 필화사건까지 각오하면서 쓴 이 칼럼을 통해 '굴복하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라'고 했다. 나의 구속은 이러한 칼럼들에 대한 보복이다. 헌법정신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비폭력불복종할 수밖에 없다. 실정법이 인권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부정할 때 인권운동가는 실정법이 아닌 인권의 헌법적 요청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인권운동가에게는 '준법'보다 인권이 소중하다. 헌법 즉, 국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실정법을 거부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7조, 음미법의 사전심의조항, 보안관찰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등 모두 헌법적 논란이 있거나 헌법을 무시하는 법이다.

김 목사는 "우리가 악법을 위반하면서 잡혀가고, 이로인해 감옥이 넘쳐날 때 악법의 씨는 마른다"고 말했다. 인권운동가가 악법철폐를 주장하면서 악법을 표박표박 지키는 것은 자기기만이다.

오히려 법치주의를 뿌리채 흔드는 세력은 법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제멋대로 집행하는 검찰이다. 검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이 국가를 병들게 한다. 법 적용의 평등이 이뤄지는 사회가 법치국가인 것이다.

검찰의 조사를 일체 거부했다. 표적수사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다. 법 적용의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하루소식> 98년 1월분 총목차 (1036-1052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036	1/6	1	"미결수 무죄추정 원칙 지켜라" 서준식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구 사노맹 관련자 4명, 통신물 관련 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
		2	일본어류 후포꾸 노동자 귀국/ 제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레드헌트> 상영/ 진관스님 상고심, 원심대로 3년6월 확정/ 주간인권흐름(97년 12월 22일- 98년 1월 4일)
1037	1/7	1	"전자주민카드 굳히기 안된다" 각계인사, 김대중 당선자 약속이행 촉구/ 부민노청 구속자, 인천 구치소 가혹행위 주장
		2	인권선언 제정 50주년, 전세계 기념행사 줄이어/ 도원동 철거폭력사건, 저준 개발 또 고소당해
1038	1/8	1	"제벌, 별장부터 내버려" 경제위기 고통, 노동자 일방 부담/ <사랑방만평> 고통분담
		2	참여연대, 사회보장개혁위 구성 제안, 김 당선자 사회보장시책 후퇴 비판/ 나무누리 '강용주 인권방', 최연소 장기수 석방운동 전개/ 박지동 교수 1차공판 예정
1039	1/9	1	IMF 시대 외국인노동자 시련, 체불임금 못받고 해고해도 영순위
		2	KNCC 인권위, 재소자 겨울나기 후원- 서울지역 1백명 재소자에 온정/ 대전성모병원 노조, 명동성당 농성 돌입- 노동법총과업 이유 해고 항의/ 서준식 사건, 국제 관심 지속- 독일정부 '재판참관 고려중'
1040	1/10	1	70세 장기수 압부병중- 대전교도소 신인영 씨/ 푸른영상 김동원 감독 연행, <레드헌트> 관련 국보법 위반 혐의
		2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포기 안해"- '근거법률 제정, 예산 집행' 이유/ 참여연대 연희동 시위, '전·노 재산 몰수' 주장/ 박지동 교수 공판 연기/ <세책 소개> '철아, 이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이' (개미서원)- 죽은 아들의 자리에 늦깎이 투사로 선 아버지
1041	1/13	1	김동원 감독 영장실질심사 거쳐 석방/ 제벌체제 개혁 없는 정리해고 반대- 민주노총, 정리해고 철회 않을 때 강력투쟁키로
		2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위원회, 제주 4·3 진상규명 탄압 중지 요구/ 주간인권흐름(1월 5일- 11일)
		3	<인권시평> 분노와 사랑의 슬픔(차병지 변호사)
1042	1/14	1	서준식 씨 변호인단, 기부금품모집규제법·국가보안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서준식 대표 재판 연기/ 5·18 영화제작 후원회원 모집
		2	고려대 학생회, "학원사찰 여전" 주장/ <취재수첩> '인권'없는 개혁논의(국민회의 열린정치포럼에 다녀와서)/ 서준식 홈페이지 개설
1043	1/15	1	유력(有力) 석방, 무력(無力) 구속, 흥인길 씨 풀어주고 압부병 장기수는 가둬두고/ 김대중 당선자, '취임후 사면·복권 실시, 사랑방 만평' 불평등 행형- 풀려나는 권력자, 갇힌 일반수
		2	성폭력상담소, 97년 성폭력피해 통계발표- 법 제정 불구, 성폭력 안줄어/ 시민사회계, "정리해고 강행 반대- IMF제협상- 제벌개혁 촉구"/ 김진균 교수, 안기부 상대 '병에 훼손' 소송/ 철거폭력 편파수사 시비 제언- 용산구 중립동 재개발지구
1044	1/16	1	국민인권기구 청사진 보여라- 대통령 공약사항...설치여부는 불확실/ <현장스케치> 민가협 목요집회- 압부병 장기수 어머니의 눈물겨운 편지
		2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경험과 한국의 전망 ① 보편적 인권규범 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곽노현 방송대 교수)

<인권하루소식> 98년 1월분 총목차 (1036-1052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045	1/17	1	국보법 폐지운동 재검토, 「사상·표현의 자유에 관한 워크샵」 / 전세계에 공개되는 이적표현물-〈레드헌트〉, 베를린영화제 공식 초청/ 늦봄 문이환 목사 4주기 추도식
		2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 박응용 (한국타이어 해고노동자)
1046	1/20	1	한총련 수배자 주변인도 고통- 친인척 물론, 어머니 동창생까지 시달려/ 민교협·민변 등 11개단체, 재벌개혁 공대위 구성키로/ 인권유린 고발 기사, 법정- 한국타이어 보도관련 명예훼손 혐의
		2	전교조 문제 국제사회에 호소- 이동진 전교조 부위원장 서리, 호주 교원노조대회 참가/ 주간인권 흐름 (1월 12일- 1월 18일)
		3	<특별기고> 당면경제위기의 의미와 대안 (김상조 한성대 교수)
1047	1/21	1	IMF시대 인권, 총체적 위기-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 워크샵/ 미결수 처우, 현재 심판 회부- 서준식 씨 헌법소원 받아들여/ 유럽의회, 한국 사형집행 규탄
		2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경험과 한국의 전망 ㉡ 호주 인권및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곽노현 방송대 교수)
1048	1/22	1	주한미군, 국민 허리 조른다- 올 한해 방위비분담금 4억달러 달해/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함세환 씨, 집행유예 선고/ 박지동 교수 병보석/ <사람방만평> 양심수와 수배자
		2	<내용 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1049	1/23	1	"비디오 사전심의 위헌", 서준식 씨 변호인 위헌제청 신청/ 범민련 민경우 씨 등,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 적용/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코언 미국방 발언 강력 비난
		2	의료구조 전환 시급- 의료지출, IMF형 사회불안 요인/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방양균 씨, 징역 1년 6월 구형/ <이달의 인권영화> 매카시 선풍- 「비공개」 「프론트」
1050	1/24	1	미결수 수의착용 부당, 서준식 씨 '법정에서 평상복 착용' 신청/ 여성단체연합 총회, 성차별적 여성해고 규탄/ 노벨평화상 조디 윌리엄스 방한, 대인지뢰금지 여론형성 계기될 듯/ 정의평화정보센터, 코언 미국방장관 발언 규탄
		2	<판결문> 불법 계호용구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재소자 징벌, 수감·포승 채우면 위법"/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세해 첫 시국기도회, "양심수 석방" 촉구/ 국제법률가협회·국제펜클럽, 서준식 씨 석방 촉구
1051	1/27	1	택시노조 위원장 분신 중태, 노조탄압·완전월급제 파기에 항의/ 출소한 양심수, 대다수 미복권- 전국연합 집계, 미복권자 1천6백여 명
		2	"김대중 정권, 서민에게 희망일 수 없다", 민교협·자식인연대 정세토론회 가져/ 주간인권 흐름 (1월 19일-1월 25일)
1052	1/31	1	서준식 씨 1차 공판- "양심의 자유 포기하는 순간, 나는 살아 있는게 아니다"/ 서준식 피고인, 검찰 석명 요구사항
		2	<주요내용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3-4	98년 1월분 월총목차 (1036-1052호)

국민인권기구 관련, 국내 첫 TV 방송
'인권의 시대를 연다' - 호주 인권및기회균등위원회를 찾아서
 2월 1일 오전 7시30분 EBS(PD:이재규, 대담: 곽노현)

인권하루소식

98년 2월

(제1053호 - 제1072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2월 3일(화)

제 105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인권’을 국정지표로

인권협 대표단, 김 당선자 면담

2일 오전 11시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 상임대표 김승훈 신부)의 대표단은 김대중 차기 대통령을 만나, 차기정권에서 ‘인권’을 주요 국정지표로 선언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김승훈 신부는 김수환 추기경의 친서를 전달했는데, 김 추기경은 “양심수들이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권교체의 의미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한총련 관련자와 장기수 등 양심수 전원을 석방할 것을 청원했다. 이에 김 차기 대통령은 “취임이후에 양심수 석방문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대표단은 △가능한 넓은 범위의 정치범을 사면, 복권, 수배해제할 것 △과거 인권침해로 비난받은 인권관련 기구들을 개혁할 것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대통령직속의 인권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청했으며, 공약으로 제시된 국가인권기구도 조속히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인권침해로 비난을 받은 안기부·검찰·경찰·법원·헌법재판소등을 개혁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안기부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등에 과거 인권유린이나 부정부패 혐의자를 배제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을 지명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 인권관련 법률 국제인권조약에 맞게 바꾸어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특히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는 발미가 된 국보법의 고무찬양죄, 불고지죄등의 독소조항은 시급히 고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차기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승고한 가치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면담에는 김 신부 외에 최영도 변호사(민변 회장), 이명남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표) 청화스님(불교 인권위원회) 등이 함께 했고 김 차기 대통령은 배석자없이 참석했다.

경찰폭력 반대 국제캠페인

COBP, 3월 둘째주 공동행사 제안

캐나다 민간단체인 COBP(경찰폭력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찰폭력에 반대하는 국제연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Police Brutality, IDAPB) 행사를 3월 둘째주에 갖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97년 이 행사는 스위스의 Black Flag의 주도 아래 캐나다, 미국 등 서구선진국과 페네수엘라, 콜롬비아 등 남미 국가 등 모두 14개국에서 50개 단체가 참가했다. 이들은 시위, 워크숍, 회의, 문화행사 등 각 단체들에 맞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COBP은 경찰이 특권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구타와 폭력을 일삼으며 사유재산과 자본의 감시인일 뿐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경찰의 폭력성을 비난하는 것이 절박하다고 주장했다. 이 행사에 참가하기를 원한다면 가능한 빨리 답장을 아래 주소로 보내면 된다.

COBP은 경찰폭력의 희생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소수민족, 소단위정치그룹, 무주택자, 매춘부, 동성애자들 경찰권위에 쉽게 대항하지 못하는 개인·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주소: COBP/ 2209 rue Joliette / Montreal, Quebec/Canada H1W 3G5

*E-mail: seahorse@odyssee.net

.....주요 공판 안내

- ▶ 3일(화)
 - 강병연/류용범(국보법 간첩)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신건
 - 유병서/손예라(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신건
 - 이영두(국보법 위반등) 오전10시 단독 526호 선고
 - ▶ 4일(수)
 - 양은영/심명갑(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2시 합의2부 302호 신건
 - 장전섭(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 박종태(국보법 간첩등) 오전11시 합의4부 403호 속행
 - ▶ 5일(목)
 - 배예리(국보법 위반등)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선고
 - 김태규/정석인(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선고
 - 김홍도/김은희(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신건
 - ▶ 6일(금)
 - 허은(국보법 위반등) 오전10시 합의2부 302호 선고
 - 함운경(국보법 위반등) 오전10시 합의7부 423호 선고
 - 최한욱/정재영(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신건
- 이상 서울지방법(교등)법원 형사국

에바다 사태 4백32일 경과

재단측 버티기, 평택시 유착 시비

평택 에바다농아원 사태가 2일로 4백 32일째를 맞았다. 96년 11월 27일 농 아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비리재단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이래 햇수로 3년째 사태가 이어져온 것이다.

에바다농아원생들의 농성은 최성창 전 이사장등 재단을 장악한 최 씨 일가의 비리, 그 속에서 농아 학생들이 겪는 비인간적 처우에서 비롯됐으며, 이는 이미 수 차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이로인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이성재 의원(국민회의)의 추궁에 따라, 김선기 평택시장이 "11월말까지 현 에바다재단 이사를 전월 승인취소하고, 덕망있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까지 농아원생 20여명과 교사 10여명이 연 일 평택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2일엔 「에바다 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소속 회원과 각 대학 특수교육과 학생 2백여 명이 국회의 의사 앞에서 '에바다 비리재단 퇴진 및 장애인 인권 수호 결의대회'를 갖는 등 사태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친인척, 여전혀 실권 장악

특히 감시·감독권을 쥐고 있는 평택시청이 오히려 재단측을 편들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현재 평택시청은 '에바다 재단 비리'에 대한 법적 조치사항은 모두 완료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평택시는 지난해 12월 19일 평택시 사회환경국장을 관선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이사진을 교체함으로써 형식상의 조치는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권을 쥐는 상임이사 자리에 최성창 전 이사장의 동생인 최성호 씨를 임명함으로써 재단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이 여전히 재단을 장악·운영하는 길을 터주게 되었고, 이는 재단과

시청 간의 유착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농아원생과 공대위측은 특별감사를 통해 재단·시청 간의 유착 의혹을 밝히고, 최 씨 일가를 전면 퇴진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다.

4백만 장애인 인권의 밑거름

아직까지 사태해결의 전망은 낙관적이지 못하다. 지난해말 임명된 이사진을 다시 교체할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에바다 사태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오랜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이나 지난해 충남 수심원 사태에서 보듯, 반쪽 여론의 관심을 끌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비리재단이 다시 복권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재 의원실의 서동명 비서관은 "해결책은 재단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는 것이다. 그래야 '잘못하면 재단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시설운영자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장 4백여 일이 넘는 투쟁 속에서도 에바다농아원생들의 결의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번 싸움이 4백만 장애인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주간/인권/호/름

(98년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

◆1월27일(화)

합천교려병원 정신병동에서 환자 15명 집단탈출, 경찰측 이번 사건이 가혹 행위 등에 못이겨 일어났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조사착수

◆1월30일(금)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데 계속 사용되고 있다"며 "97년도에도 국보법 개혁을 위한 진전없었고, 3백명 이상을 국보법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지적/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3일 방한하는 조디 윌리엄스(대인지 퇴금자 국제캠페인 대표) 씨의 면담요청 거절/통계청 '97년 12월 산업활동 동향' 발표, 12월 실업률은 3.1%로 4년6개월 만의 최고치 기록/건설교통부, 내린전담 건설계획 백지화 발표

◆1월31일(토)

녹색교통운동, 경실련, 민변등 9개 시민·사회단체, 택시업계의 부당노동 행위 근절과 택시노동자 안전원금제 실시 촉구

◆2월1일(일)

의료보험 약값 평균 3.6% 인상/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측, 3일까지 노사정 위원회 차원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정리해고 관련 법안을 노사정위 논의와 무관하게 임시국회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대통령직 인수위, 99년말까지 국가 및 지방공무원 50여만명 중 10% 수준인 5만여명 감축 방침/한국노총, (주)엘지-EDS시스템 육영어린이재단 등 23개 회사 및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1차 고발/노동부, 지난 1월중 실업급여 신청자 모두 2만5891명으로 지난해 연간 신청자 5만1017명의 50.7% 달해/한국고용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 대통령직인수위와 정부가 교원정년을 65살에서 61살로 단축할 경우 강력대응 방침/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3차 보상에 824명 신청/법무부, 97년 12월27일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벌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내린 뒤 하루 평균 350여명이 출국해 1월말 현재 1만1천여명에 이른다고 밝혀/일본 교토 지방재판소, 교토부 우지사 우도로마을에 사는 재일동포 두 세대에 대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소유자 서일본식 산에 넘기도록 판결

인권 시평

긴 호흡의 인권운동

장호순(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난 1월 21일 저녁, 서울 충정로의 어느 찾기 힘든 교회식당에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고민하고, 애써오던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모인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지금까지의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지지부진했다는 전제하에 모임은 진행되었다. 그래서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 지 의견을 모았다. 별로 유쾌하지 않은 자책과 반성의 시간이었다.

두번째 방법은 인권을 유린하고 무시 함으로써 파급되는 엄청난 사회적 부작용을 실감한 후에야 인권을 보장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서구시민사회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까지 얼마나 오랜 역사를 보내야 했는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마치 IMF위기를 맞은 후에야 비로소 정경유착의 결과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실감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인권문제로 마찬가지이다. 계속되는 인권탄압으로 인해 국가적, 사회적 병폐가 축적되어 파국상황을 맞은 다음에야 우

가 인권운동을 잘못해서라고 자책할 필요는 없다.

거듭 말하지만 인권보호란 우리 식성에 맞지 않는 음식과 같다. 우리가 길 들여진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풍토에는 잘 적응하기 힘든 개념이다. 우선 인권이란 악육감식, 적자생존, 무한경쟁의 논리에 반하는 것이다. 약한 자도 강한 자 만큼 대우를 받아야 하고, 경쟁에서 진 사람들도 이긴 사람들과 동등하게 취급해야한다는 논리다. 성인 군자들이나 갖고 있을 관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인권의 논리는 또한 인간이 선과 악, 진리와 오류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도 거부한다. 확신과 편견으로 가득차 있는 우리들에게는 잘못지 않는 못이다. 지금 우리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권논리는 생소할 뿐이다. 그들은 치열한 적자생존의 논리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일제치하에서, 6·25를 겪으며, 60-70년대의 개발독재의 그늘 속에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 남을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이다. 지금의 신세대들도 인권 의식에 있어서는 구세대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비록 그들의 전세대 만큼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오지는 않았지만, 역시 인권에 대해서 생소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자라왔다.



다들 열심히 일하는 인권운동가인데, 그야말로 우리사회의 빛과 소금일진대, 왜 그렇게 풀이죽어야 하고, 좌절해야하는지 안타까웠다.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고 있는 것이 과연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잘못인가? 물론 아니다.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기발한 방법을 동원했다면 조금이라도 달라졌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인권의 신장이란 것이 인권운동의 전략과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권신장이란 사회구성원 다수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졌을 때에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리는 아차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되고 인권을 보장해야겠다는 사회적 의지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인권탄압의 피해자로 희생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인간사회에 인권신장을 가져오는 길은 크게 세 가지였다. 그러나 세 가지 방법 모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첫번째는 노력에 비해 효과가 별볼일 없는 것이었고, 두번째는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것이었으며, 마지막 방법은 매우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이었다.

세번째 방법은 다음세대를 염두에 두고 인권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인권은 교육받은, 사고할 줄 아는 인간의 행동양식이다. 인간사회에서는 인권보호의 논리보다는 인권탄압이 보편적인 원리이다. 우리가 타고난 천성은 인권탄압이지 인권보호가 아니다. 더욱이 우리 한국인이 살아온 사회, 우리가 길들여진 삶의 방식 속에서는 인권보호를 주장하기란 매우 어렵다. 결국 인권운동이란 매우 힘들고, 목표를 달성하는 보람을 맛보기 힘든 작업이다. 따라서 좌절하지 않으려면 숨을 길게 잡고 느긋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지, 우리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부족한 것도 우리가 인권운동을 잘못해서라기 보다는 우리의 정치사회적 환경 때문이다. 이러한 열악한 인권환경이 바뀌지 않고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룻밤에 20여명을 사형에 처해도 눈곱만큼도 않는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은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소리일 뿐이다. 주변의 인간을 수단과 도구로, 경쟁에서 놀려야할 상대로 생각하도록 강요해온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발견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오히려 감명받아야 한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2월 4일(수)

제 105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대인지뢰금지 캠페인 돌입

조디 윌리엄스 방한...국내 여론 형성 관심

9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조디 윌리엄스(국제지뢰금지운동 대표, 미국) 씨 방한과 더불어 한반도 내 대인지뢰 금지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의 초청으로 내한한 조디 윌리엄스 씨는 3일 외무부와 국방부 차관을 면담하고,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대인지뢰금지 한국캠페인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2시 '국제대인지뢰 금지운동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조디 윌리엄스 씨는 "한반도 역시 대인지뢰금지 예외지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윌리엄스 씨는 "미국과 한국정부가 한반도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예외조치를 촉구하고 있으나, 대인지뢰는 평시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불법무기로서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윌리엄스 씨와 함께 내한한 스티븐 구스(국제지뢰금지운동 집행위원) 씨는 "대인지뢰문제를 4자회담의 의제로 상정한 뒤, 남북 정부가 공동으로 지뢰의 생산과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제거하겠다고 선언한다면, 한반도 평화 진척의 증대할

게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발언 요지 2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초석

현재 한반도 내 대인지뢰금지에 대해 한국정부와 미국측은 첫째, 북한의 침략을 지연시키고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대인지뢰가 필요하며 둘째, 한반도의 대인지뢰가 DMZ에만 매설되어 있는데, DMZ엔 민간인 출입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어 민간인 피해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KCBL측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환경조성 및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을 위해선 대인지뢰금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동시에 대인지뢰금지가 남북 공동의 실천사항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창수(KCBL 정책홍보담당) 씨는 "남한만 일방적으로 대인지뢰를 제거하지는 것이 아니다"며 "남한이 먼저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한다 해도 가입 후 10년의 과정을 거쳐 지뢰를 제거하는 것이고, 필요한 경우 10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간동안 북한을 협약에 가입시킬 수 있고 대체무기의 개발도 가능할 것"이라

며, "앞으로 진행될 4자회담에서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을 의제로 설정해, 조속한 시일 안에 남북한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후방지역도 지뢰위험 지역

KCBL측은 또 정부측 주장과 달리 대인지뢰에 따른 민간인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후방지역에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수 씨는 "경남 양산 원효산, 부산 중리산, 포항 봉화산 등과 같은 후방지역에서도 대인지뢰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국방부가 지난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2년부터 97년까지 지뢰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는 3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포 참조).

게다가 지뢰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기도 파주군 금파리 주민 6명은 20년전 당한 지뢰피해를 아직 보상받지 못하고 있으며, 육군 중사였던 황경철(24) 씨는 군복무중 지뢰를 밟아 좌측 발목 아래를 절단당했지만, 본인과실에 따른 사고로 처리돼 아무런 치료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디 윌리엄스 일행은 4일 파주군 금파리의 지뢰피해자 거주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비롯해, 5일 국회환경포럼 초청 간담회를 갖는 등 이후 캠페인 일정을 마친 뒤 5일 출국할 예정이다. 조디 윌리엄스의 방한을 계기로 국내 대인지뢰금지운동과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 및 군축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자못 기대가 크다.

대인지뢰 피해 접수

·접수처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전화: 708-4181-3

*92-97년 지뢰로 인한 사상자 현황

	사망	부상	계
민간인	**15(국방부 미집계 1인 포함)	***16(국방부 미집계 1인 추가)	31
군인	22	33	55
계	37	49	86

*국방부가 97년 10월 2일 정동영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

**93년 강원도 양구에서 민간인 2명 사망했으나 1명 누락

***95년 4월 20일 경남 양산 원효산에서 발생한 민간인 1명 지뢰사고 누락

영광주민, 60일째 침묵시위

원전 5·6호기 건설 문제 마찰

영광핵폐기물의 안전과 보관상태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영광핵발전소 측과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몇 해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광주민들의 침묵시위가 60일째 전개되고 있다.

주민들은 "김봉열 영광군수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이미 설치된 핵폐기물 임시저장창고에 또다시 핵폐기물 제2영구저장창고 건설을 허가해 주었다"며 연일 영광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있다. 또한 "은·배수 처리방안 마련후 5·6호기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어기고 5·6호기 건설, 핵폐기물 제2영구저장창고 건설, 도수로 설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영광군수의 퇴진까지 촉구하고 있다.

현재 주민들은 매일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은수의 방출 및 저·중·고준위의 핵폐기물로 인한 바다환경의 오염, 어획량 감소등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핵발전소는 현재 1-4호기가 가동중에 있으며, 이때 발전기를 식히는 바닷물이 매일 2백80여톤씩 그대로 바다로 배출되고 있다.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고문방지기구는 △진관스님, 서준식 씨를 비롯한 인권활동가들의 육체적·정신적 안전보장 △상당한 범죄 증거가 없을시 무조건적인 석방 △인권 및 인권활동가에 대한 억압행위 즉각 중지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 △민간인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수행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강구 등을 요구하여 한국정부에 항의편지를 보내는 운동을 벌이자고 요청했다.

진관스님은 96년 10월 1일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국가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지난해 12월 26일 대법원에서 3년 6월형을 확정받았다.

'자본' 대 '반자본'

각각 국제 행사 가져

'자본의 세계화'와 '이에 대한 반대'를 각각 기치로 내건 국제행사가 잇따라 열려 관심을 끈다.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스위스의 다보스에서는 세계최대의 경제정상회담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이 열렸다.

"대인지뢰금지,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조디 윌리엄스·스티븐 구스 발언요지

◎ 대인지뢰의 군사적 유용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유용성이 있다고 해서 정당한 것은 아니다. 한 번 묻힌 대인지뢰는 전투가 끝나고 군인이 철수해도 그 자리에 남아서 수세대에 걸쳐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 대인지뢰금지를 반대하는 한국정부의 입장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다. 92년 지뢰금지운동을 시작할 때 전 세계 모든 정부가 한국과 똑같은 입장이었지만, 우리는 짧은 시간에 각국의 군부와 정부의 생각을 바꿔냈다. 이로 인해 97년 오타와 협약에 1백22개국 정부가 서명을 했고, 내전 또는 전쟁의 위협에 직면한 나라들까지도 지뢰금지조약에 서명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 미국과 한국정부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내세워 대인지뢰의 불가피성을 주장하지만, 전 세계 대다수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가 예외적 상황이라 해도 불법적 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선 단호하게 'NO'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 미국은 91년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철수한 바 있다. 한반도의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였다. 북한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처럼 여겼던 핵무기를 철거한 것처럼 적극적 노력만 기울인다면 대인지뢰금지라는 보편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대인지뢰제거 역시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가 될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2월 5일(목)

제 105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25년전 지뢰사고, 조만선씨의 비극

'지뢰마을' 금파리, 조디 윌리엄스 방문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금파리2리는 일명 '지뢰마을'로 유명(?)해진 곳이다. 20여 년전 마을주민 7명이 잇따라 지뢰피해를 당한 전례 때문이다. 현재 마을에는 피해자 가운데 다섯 명이 생존해 있으며, 이들은 의족에 의지한 채 근근이 생활을 유지해가고 있다.

의족을 찬 모습만 빼면 시골의 여느 촌로와 다를 바 없는 조만선(66) 씨는 이 마을 최초의 지뢰피해자다. 조 씨는 자신이 사고를 당한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주변 사람들은 조 씨가 대략 25년전 쯤 사고를 당했다고 말한다.

사고를 당하던 순간, 조 씨는 산에서 사계청소작업중이었다. 당시 군부대에 선 간첩의 침투를 감시하기 위해 주변의 장애물들을 청소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이 작업을 맡아 처리한 것은 민간업주였다고 한다. 조 씨는 민간업주에게 고용돼 일하는 대가로 산의 나무를 베어 팔았고,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도 풀과 나무를 베기 위해 산에 올랐다가 지뢰를 밟았던 것이다.

아이들 주먹만 플라스틱 지뢰

조 씨를 비롯해 마을의 지뢰피해자들은 모두 비슷한 경로로 사고를 당했다. 이들이 밟은 것은 아이들 주먹만 한 크기의 플라스틱 대인지뢰였다. 주민들은 이 지뢰가 당시 미군 비행기에서 뿌려낸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장마때엔 비에 씻겨 흘러내리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 묻혀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고 한다.

사고가 발생한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뢰피해자들이 받은 보상은 아무

것도 없었다. 조 씨는 말한다. "보상이요? 그런 건 방법도 모르고 신청도 안 했어요." 다만 사고 당시 업주가 치료비를 대 준 것이 그가 받은 보상의 전부였다. 조 씨는 또 "나라에서 시킨 일도 아니었고, 벌어먹기 위해 들어갔던 건데 어떻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냐"고 되묻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보상을 받을 길이 있다면 보상을 받고 싶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생각이다.

일기예보가 따로 없다
조 씨는 오른쪽 무릎 아래에 의족을 받치고 있다. 그러나, 목발을 짚지 않고는 걸을 수가 없어 방안에서는 엉금 엉금 기어다녀야 하는 처지다. 특히 여름이면 절단 부위가 까지고 짓무르는 통에 고통이 더 심하다고 한다. 아

내 김정숙(60) 씨는 "우리 집엔 일기예보가 있다"고 우스개로 말한다. 날이 흐리고 비가 올라치면 영락없이 가려움과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이다. 아내 김 씨의 고통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젊은 나이에 불구가 된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어린 자식들과 함께 가족의 생계를 이어갔던 김 씨의 회고는 한 마디로 "고생만 실컷했다"는 것이었다.

윌리엄스 방문으로 관심 고조

4일 금파리엔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방한중인 조디 윌리엄스(국제지뢰금지운동 대표) 씨가 이 마을을 방문한 것이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라는 설명에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주민들은 이 금파리의 여성이 지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다는 말엔 솔깃함을 감추지 않았다. 대인지뢰의 파괴력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들로써, 이들의 소망은 보상문제 만큼이라도 제대로 해결 되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만
화
사
랑
방

이동수



민주노총 지도부 국민회의 농성 돌입

사회단체, 정리해고 반대 한 목소리

민주노총 임원 및 산하 연맹 대표 10여명은 재벌개혁 등 제반 개혁조치와 고용보장, 보다 분명한 실업대책을 요구하며 4일 오후 4시부터 재정치국민회의 당사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단은 "마치 정리해고제 도입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이고, 다른 개혁조치가 추진되는데 정리해고제만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국민여론을 호도하고 노동계에 무리한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주)기산, 대전성모병원, 덕부진흥,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한국능률협회, 금야교통 등 민주노총 산하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노조대표 10여명도 대통령 당선자측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오전 11시부터 여의도 국민회의 중앙당사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엄연히 노사정위원회에서 선행조치로서 그 근절조치에 합의하고 노동부장관의 담화 발표, 국회와 김대중선지족의 적극적 노력을 약속했음에도 지금 산업현장에서는 악덕기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급기야 택시노조 위원장의 분신까지 유발하고 있는 실정에 합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리해고제 폐지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노동계를 넘어 시민·사회단체로 확산되고 있어 그 파장이 주목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23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4일 프레스센터에서 재벌개혁과 고용안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중배)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재벌개혁과 고용보장이 없는 일방적 정리해고제 도입은 중지되어야 한다"며 6일 12시 국회 앞에서 재벌개혁추진과 정리해고제 감행처리 반대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도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정 합의 없이 정리해고제, 파견법안을 국회에 상정한다면, 이를 제2의 노동법 날치기로 규정하고 노사정 위원회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6일 시한부 총파업투쟁에 돌입하겠다"며 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전면적인 총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사회단체 등의 정리해고 반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5일 박태준 자민련 총재가 민주노총을 방문하기로 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팔레스타인 구속자, 감옥서 하루만에 사망

이스라엘에선 법원이 고문 합법화하기도

경찰에 연행된 팔레스타인 구금자가 감옥 안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오전 8시 30분 팔레스타인 경찰당국은 지난 2일 연행된 나지르 알 휴럽(25) 씨가 헤브론 근방의 듀리에 있는 팔레스타인 감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의 사체는 베들레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현재 검사가 진행중이다.

팔레스타인 민간단체인 LAW(인권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팔레스타인 사회)측에 따르면, 휴럽 씨의 죽음으로 팔레스타인 감옥에서 죽은 사람의 수는 모두 16명이 된다. 그 가운데 12명은 고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LAW는 "짧은 투옥기간으로 봐서 고문이 휴럽씨가 사망한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팔레스타인 공안당국의 임의적인 구속과 고문의 사용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편, 팔레스타인과 적대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지난달 11일 법원에서 경찰의 고문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이스라엘 공안기구(셈벳)에 의해 구속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은 심문관이 시끄러운 음악을 강제로 듣게 하면서 자신들의 머리를 자루에 쳐박게 했으며, 장시간 잠을 재우지 않았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수사관행이 합법하다고 결정했다.

행사와 동정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인권, 사회단체 캠페인 일정>

- 구속학생 석방 촉구 목요집회
 - 때: 2월 5일 (목) 오후2시
 - 곳: 탑골공원
 - 주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763-2606)
- 양심수전원 석방을 위한 거리캠페인
 - 때: 2월 6일 (금)부터 매일 오후2시~3시 (일요일제외)
 - 곳: 서울역광장의 1곳
 - 주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921-4090)
- 구속학생 석방과 대서면 촉구대회
 - 때: 2월 7일 (토) 오후 2시
 - 곳: 종로공원
 -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구속학생과 장기수 석방을 위한 기도회
 - 때: 2월 9일 (월) 저녁7시
 - 곳: 명동 가톨릭회관 7층
 - 내용: 1부 문화공연/2부 기도회
 - 주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 3672-0251)
- 양심수 전원석방 목요기도회
 - 때: 2월 12일 오후 5시
 - 곳: 기독교회관 2층 강당
 - 주최: 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 (☎ 744-3717)
- 구속문인의 밤
 - 때: 2월 13일 (금) 오후 7시
 -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주최: 민족문화자각회의 자유실천위원회 (☎ 313-1486)
- 김형찬고문수사 안기부원처벌과 안기부개혁을 위한 기도회
 - 때: 2월 5일 (목) 오후 5시
 - 곳: 기독교회관 2층 강당
 - 주최: 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 (☎ 744-3717)
- 총파업결의대회
 - 때: 2월 7일 (토) 오후2시
 - 곳: 종로공원
 -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765-2010)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2월 6일(금)

제 105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기획연재①>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한총련 구속자 3백여명 달해

양심수 사면 문제가 표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제 관심은 그 대상과 폭에 쏠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민간단체에서 집계하는 양심수 범위엔 상당한 격차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특히 대학생 구속자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양심수 명단은 1백여 명선이며 그 가운데 대학생 구속자는 10여 명 정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상임의장 임기관)가 파악하고 있는 양심수는 1월 17일 현재 5백여 명이며 그 가운데 대학생은 60%에 달하는 3백여 명 수준이다.

민가협 집계에 따르면, 현재 구금중인 대학생은 △한총련 간부출신과 한총련 미탈퇴자 2백여 명 △96년 연세대 통일축전 당시 구속자 50여명 △'자주대오' 등 이른바 조직사건 연루자 40여명 등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시위거담에 따른 집시법 위반자 50여명, 그리고 △이석·이종권 씨 치사사건 연루자 9명 등으로 분류된다. 그밖에 방북 관련자와 조문사건 관련자 등도 포함된다.

주한미군 헬릭스에 의한 허주연 씨 살해사건 제2차 규탄대회

- 때: 6일(금) 낮 12시
- 곳: 용산미군기지 제5정문 앞
- 주최: 주한미군법적근절운동본부

이상의 분류에 따르면, 앰네스티에서 선정한 양심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을 던지 어려워 보인다.

앰네스티 선정범위, 지나치게 좁아 조직사건의 관련자들은 대부분 뚜렷한 대의활동보다는 단순히 조직의 결성이나 강령의 내용과 관련된 구속된 경우며, 특히 한총련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된 학생도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국제앰네스티가 주장하는 양심수 즉,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사상·표현행위만을 이유로 구속된 양심수의 범주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들은 이번 사면대상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화염병이나 쇠파이프 등을 사용한 이른바 '폭력' 시위자들인데, 국내 인권단체쪽은 이들에 대해서도 새 정권 출범과 함께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가협의 남규선 총무는 "정부가 학생들의 집회·시위 등을 원천봉쇄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한 데도 책임이 있다"며 "앞으로 새 정부는 학생운동세력을 포용하면서 국민대통합 정치의 뜻에 맞게 학생들의 조속한 석방과 사면·복권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권오현 민가협 공동의장은 "정부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단체결성의 자유를 어긴 것"이라며 이에 따른 구속자들은 당연히 사면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대학생 구속자에 대해 선별적인 일부 사면만 이뤄질 것이라는 게 우세한 관측이다. 앰네스티 기준을 강조한 김대중 차기 대통령의 발언은 물론, 한총련을 '폭력집단'으로 규정하며 사면을 극력 지지하려는 공안기구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라 예측 때문이다.

바로잡습니다

5일자 '팔레스타인...' 기사에서, 팔레스타인 휴령 씨를 구속한 것은 이스라엘 당국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경찰이며, 이스라엘은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또 KNCC에서 주최하는 '양심수 석방을 위한 목요기도회'는 19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석방

서부지원 형사1단독 금보석 결정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5일 오후 7시 40분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부지원 형사1단독(담당판사 최정열)은 이날 서준식 씨에 대해 1천만 원의 금보석을 결정했다.

서 씨는 마중나온 가족과 사회단체 회원들에게 "날씨가 너무 추워 고생했다"는 말로 출소 소감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금보석)으로 나오게 된 것이 너무 착잡하다. 법원은 인권운동을 부자인양 착각하고 있다"며 "1천만 원에 달하는 몸값에 맞게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조재국 목사(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국제연대 담당)

조디 윌리엄스 방한이 남긴 것

대인지뢰금지 한국캠페인을 위해 방한했던 조디 윌리엄스(9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씨가 5일 출국했다. 이번 조디 윌리엄스 씨의 방한이 남긴 과제는 무엇인지, 앞으로 한국 대인지뢰금지운동의 전망은 어떠한지, KCBL(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의 조재국 목사(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실장)를 통해 들어보았다.

-윌리엄스 방한이 남긴 성과가 있다면
-군사적 긴장상태인 한국에서도 대인지뢰금지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낸 점, 국내 대인지뢰 피해자들의 모습을 알릴 수 있었다는 점 등이다.

-노벨평화상을 탄 '거물'의 방문임에도 일부 언론은 이를 '홀대'했는데
-국내 언론기관의 편파성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윌리엄스의 방한 직전 미국 국방장관인 코넬 씨가 방한한 바 있다. 언론이 코넬 장관의 비무장지대 방문 사실과 "한국엔 대인지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지의 발언내용은 자세히 보도하면서도, 그 카운터파트인 조디 윌리엄스의 캠페인에 대해서 외면했다. 한국 언론이 얼마나 정부의 견만을 대변하는지 보여준 것이다.

-또다른 아쉬움은 없었나
-국내 NGO(민간단체)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 한국의 NGO들은 정치적이고 래디컬한 문제에 대해서 열성적이지만, 장기적이면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의제들에 대해서 관심과 노력이 아직 충분치 못한 것 같다. 장기적 스케줄과 전문성을 갖고 추진해야할 의제들을 구체화하는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벌일 계획인가
-지뢰피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작업이 당장 요구된다. 국내에 몇 명의 지뢰피해자가 있는지, 어떤 경로로 피해를 입게 됐는지, 보상은 어떻게 됐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작업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대인지뢰금지운동의 장애가 되지 않았는가
-이 운동은 평화운동이며 인간생명존중운동이다. 이를 위해서 낡은 냉전논리들, 정부의 정책, 법체계, 관행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어차피 장기적인 문제이며 이 운동의 의미를 이해시키는 데 계속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대전차지뢰까지 금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방어기능도 별로 없이 피해만 남고 있는 대인지뢰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정전협정 상으로도 비무장지대에서 무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대인지뢰협약에 가입하려 하지 않고 있다.
-협약에 가입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만을 갖는다. 우선, "지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에서부터 "점점 줄이겠다"는 것으로, 그리고 마지막엔 "완전히 없애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협약이 발효되기 위해서 국회의 비준절차도 남아 있다.

그리고, 우리는 대전차지뢰까지 금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방어기능도 별로 없이 피해만 남고 있는 대인지뢰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정전협정 상으로도 비무장지대에서 무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대인지뢰협약에 가입하려 하지 않고 있다.
-협약에 가입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만을 갖는다. 우선, "지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에서부터 "점점 줄이겠다"는 것으로, 그리고 마지막엔 "완전히 없애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협약이 발효되기 위해서 국회의 비준절차도 남아 있다.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지뢰문제는 앞으로 계속 국제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군축회의가 진행될 때도 항상 이 문제는 제기된다. 그때마다 민간단체로서 이 문제를 알려내는 데 노력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지뢰피해자들에 대해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국방부에 지뢰피해 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다. 국방부 차관은 "피해를 당한 군인 중에도 반수 정도가 보상을 못받는다고 했다. 그것은 군인조차도 공식적인 임무 수행과정에서 당한 피해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대인지뢰 피해자가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니다. 단지 그들의 문제를 도와주려 왔을 뿐이다. 정부로서도 피해보상에 크게 부담이 드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96년부터 외국

의 대인지뢰피해자들을 위해 10만 달러씩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국내 피해자부터 돌보아야 하지 않겠나.
대인지뢰금지운동의 전망에 대해 조목사는 "1백%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보였다. 남북한이 통일의 염원을 가지고 있는 한 대인지뢰금지라는 목표는 달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구태 못 벗은 안기부

김형찬 씨 인권피해 증언 저지 기도

안기부가 구태를 못 벗은 채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드러냈다. 5일 오후 6시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안기부의 김형찬 고문수사 진상 규명과 안기부법 개정 촉구하는 목요기도회'에서 김형찬(28·경희대 유전공학과 90학번) 씨는 안기부가 자신의 기도회 참석을 저지하기 위해 가족에게 압력을 넣은 사실을 폭로했다.

김 씨에 따르면, 안기부측은 이날 오전 김 씨의 기도회 참석 사실을 미리 알고 가족들에게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요지의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가족들이 김 씨의 참석을 만류하기도 했으나, 김 씨는 "사건을 알리는 것이 필요해 기도회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96년 12월 5일 수배자로 오인한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연행된 뒤 가족수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분신을 기도해 중상을 입고 1년여 동안 치료를 받아 왔다. 김 씨는 이날 기도회에서 "수사관들에게 무수한 구타를 당했으며, 그들이 강제로 지문을 찍어 신원을 확인한 뒤에는 '복에 다녀오지 않았느냐'며 나를 간첩으로 만들려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기도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고문 수사관 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즉각 수사할 것 △안기부법 개정과 안기부 기능 축소·예산 공개 등 개혁조치를 즉각 단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2월 7일(토)

제 105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앰네스티, 장기수 신인영씨 석방촉구

한국 교도소 의료실태 개선도 요청

국제앰네스티는 4일 장기수 신인영(70) 씨의 석방과 한국 교도소 내 의료수준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공동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는 "신 씨가 너무나 오랜 감옥생활을 해왔고 압과 투병으로 건강이 위험하다"며 "신 씨가 감옥에서 즉각 풀려나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신 씨가 난방이 없는 좁은 독방에 격리되어 있다"며 "정치범들이 계속된 격리생활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어떤 이들은 장기간의 수감기간동안 소화기장애, 류마티즘, 고혈압 등을 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빈약한 한국 교도소의 의료시설과 관련해 앰네스티는 "대부분의 교도소에는 의사가 한명뿐이며 그나마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만 방문할 뿐이다. 병원치료조차 수감자의 가족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적절한 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도소 실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앰네스티는 국제사회의 공동행동으로 30년 동안 감옥에 수감된 신인영 씨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해줄 것 ▲신 씨의 병(골수암)과 그가 받아온 치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할 것 ▲신 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석방을 요청할 것 ▲한국 교도소 중 특히 대전교도소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정보를 요청할 것 ▲수감자들 사이의 격리와 외부세계와의 격리, 난방이 안되는 감옥과 전향을 요구하는 당국의 압력을 비판할 것 등을 촉구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의사들에게 한국 법무부와 교도소, 대통령선

자에게 위의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보낼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 에바다 비리 특감

평택시·재단간 유착의혹 초점

에바다농아원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6일부터 에바다재단과 평택시청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시작되었다.

이번 특별감사는 김선기 평택시장과 에바다재단 간의 유착의혹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있으며, 특히 김 시장이 에바다재단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감사와 관련, '에바다 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대표 김용환, 공대위)' 관계자는 "단지 김 시장·에바다 재단측의 뇌물관련 비리여부를 가려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에바다사태에 대한 본질적 해결과

지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대위는 에바다재단에 후원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 공대위측은 "재단에 후원금장부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재단측이 후원금 횡령의혹에 따른 비리혐의를 숨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의회도 김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에바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18일부터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 에바다 동성후원구좌: 국민은행 232-21-0467-997 (김주명)

양심수 전원석방 캠페인 돌입

민가협, 전국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6일부터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국민 서명운동 및 거리캠페인에 돌입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3월 5일까지 한 달 간 서울역광장 등 서울 시내에서 매일(일요일 제외)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앰네스티, "한국엔 양심수 더 있다"

김 당선자에 제출한 명단은 일부일 뿐

6일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측에 전달한 양심수 명단이 전체 양심수를 포괄한 명단이 아니라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6일자 <인권하루소식>의 "앰네스티의 양심수 명단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보도와 관련, "김 당선자측에 제공한 명단은 앰네스티가 알고 있고, 인권침해의 유형을 논증하는 사례

를 포함했을 뿐"이라며 "이것은 한국 전체의 양심수와 정치범의 완전한 명단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앰네스티의 조사직업은 대부분 장기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앰네스티 명단에 더하여 한국에는 다른 많은 정치범들이 있고 이는 앰네스티의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획연재②>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분단의 비극 '남파공작원' 초장기수 23명, 28-40년 구금

95년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45년 복역) 씨가 석방된 뒤에도 한국은 여전히 '세계 최장기수가 있는 나라'다.

2월 현재 40년째 구금중인 우용각(70) 씨를 비롯해 최저 28년 이상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초장기수'만도 23명. 이른바 '남파 공작원' 또는 '연락원'이라는 혐의로 구속된 초장기수들은 복역에서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0.75평의 독방에 바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 인권단체들은 이들 초장기수들 역시 새 정부의 사면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다.

고령에 중병 앓기도

우선, 초장기수들은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장기구금생활을 거쳤고, 이제는 고령의 나이에 건강마저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23명의 초장기수 가운데는 김인수(76·36년 구금) 씨등 70세 이상의 고령자만도 10명이나 되며, 특히 수사과정에서 당한 고문의 후유증과 오랜 감옥생활 탓에 이들은 한두가지 씩의 질병을 앓고 있다. 불치의 골수암을 앓고 있는 신인영(70·31년째 구금) 씨를 비롯해, 중풍에 따른 안면마비와 언어장애인 우용각 씨, 당뇨와 고혈압, 신경통, 수전증을 앓고 있는 김인수 씨, 위장병과 결핵으로 고생하는 장병량(65·36년 구금) 씨 등 중병으로 고생 중인 환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인간적 사상전향제도 희생자

둘째, 초장기수들의 끝도 없는 감옥살이가 '사상전향'이라는 반인간적 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진체우(처우분류)에서 제외되고 이로 인해 취업을 금지당한다. 결국 단계별 승급의 기회를 봉쇄 당해 가석

방이나 감형의 대상에서조차 제외되는 것이다.

또한 사상전향제도는 행형상의 차별과 비인도적 처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행 행형법상 독거수용의 최대기간은 2년6개월이지만, 이들은 70년대 초반 이후 지금까지 독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미전향자라는 이유 때문에 친족 외의 사람과는 면회와 서신조차 금지당하고 있다.

고문수사, 불공정 재판 받아

셋째, 이들은 공정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못함으로써 행위에 비해 과도한 형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들 대부분은 군사분계선에서, 또는 고향을 방문했다가 체포되는 등 뚜렷한 범죄 행위보다는 복역에서 내려왔다는 이유만

으로 과도하게 중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길게는 7개월씩 수사를 받아 가며 그 과정에서 물고문, 전기고문을 당했고, 변호인도 없는 상태에서 비공개재판을 받는 등 사법과정에서의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했던 것이다. 해상안내원으로 내려오다 체포당했던 김익진(69, 29년 복역) 씨는 1심 재판에 들것에 실린 채 나갔으며, 한마디 발언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을 받기도 했다.

민족화합, 인도주의 실현 위해

천주교인권위원회 오창의 사무국장은 "초장기수 문제를 '양심수나 아니냐'는 논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그는 "인생을 해친 것도 아닌데 수십년씩 감옥에 가두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이며, 민족의 화해와 대화합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도 초장기수들의 석방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말했다.

민족 화합과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대전제 아래, 이들도 밝은 햇빛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새로운 책... 『대인지뢰금지, 현실과 과제』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역음/도서출판 민중사/206쪽/ 7천원

전세계 68개국에서 1억1천만개나 묻혀있는 지뢰로 연간 2만 6천 여명이 죽거나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지구촌 이웃의 삶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련, 원장 안재웅)이 역은 『대인지뢰금지, 현실과 과제』란 단행본을 권하고 싶다.

이 책은 국내신문, 잡지에 발표된 대인지뢰와 관련된 1차 자료를 솜씨있게 엮었고 대인지뢰금지 국제협약(오타와회의) 내용과 참관기, 국제지뢰금지운동(ICBL)의 활동을 정리해 놓고 있다. 또한 국내 대인지뢰 피해자들의 실태와 사례, 대인지뢰 현황,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의 출범과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군축이 당위가 아닌 '인간안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김창수(『대인지뢰대책회의 홍보담당』) 씨는 "무엇보다 한국이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는 것이 남북 대치상황에서 한국민의 일상적이고 즉각적인 대인지뢰제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10여년동안 남북군사협상을 통해 남북한이 동시에 대인지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한국정부가 평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 불명예만 안겨다 준다는 점에서 국익에는 오히려 손해라고 지적했다.

기사련은 "이 자료집이 진정한 의미에서 한반도의 비무장과 평화를 이룩하고 지구적 평화운동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한국정부가 하루빨리 대인지뢰 국제협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다.

부록으로 국제지뢰금지운동(ICBL),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의 소속단체 연락처가 수록되어 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2월 10일(화)

제 105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법원 판결 무색, 불법검문 여전

경찰, 민노총 대회 대학생 참가봉쇄

지난해 11월 법원이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을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심검문을 통한 인권침해 행위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

9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 입구와 해와 전철역 주변에선 전두경철의 검문이 오후 내내 진행됐다. 이날 검문은 오후 2시부터 성균관대 옆 유림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대학생들의 참석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의 통행을 가로막고 신분증 제출을 요구했으며, 타대학생일 경우엔 이름과 학교 등 신분을 기록한 뒤 통행을 불허했다.

이러한 통행제한이 부당한 것이 아니냐는 항의에 대해서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노동자 집회에 참가할 이유가 없기 때문" "사전예방 차원" "수배자를 잡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이어 경찰은 유림회관측이 시설물보호를 요청했다고 말했지만, 유림회관측은 시설물보호요청을 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검문과정에서도 여전히 경찰관직무집행법이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흥철 판사는 "불심검문을 하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의 소속과 성명,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등 경찰이 불심검문 개시의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장 아무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장 씨에게 위자료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검문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경찰은 물론, 이에 항의하는 대학생도 찾아볼 수 없었다.

'양심수 기준 정한 것 없다'

김종구 법무, 인권협에 밝혀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 대표들은 9일 김종구 법무부장관을 방문해 양심수 석방 등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심수 석방 문제에 대해 법무부는 현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의 지점을 따를 뿐'이라며 '법무부에서 그 시기나 범위에 대해 어떠한 기준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양심수 석방 범위의 관련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전혀 근거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인권협 대표들은 지난 2일 김수환 추기경이 김대중 당선자에게 석방을 청원한 박노해 씨등과 구속학생들, 장기수도에 대한 석방을 거듭 청원했으며, 특히 골수암을 앓고 있으면서도 형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신인영(70) 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했다. 더불어 교도소 내의 처우개선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양심수 사면 문제는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며, 신 씨에 대해서는 관계자들과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교도소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공판 안내

▶ 10일(화)

이천재(국보법 간첩등, 범민련)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김남식(국보법 찬양·고무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 11일(수)

안중수/박관조/최상용(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안병노(국보법 회합·통신·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강신호/이소현(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2시, 합의2부, 302호, 신건
정중호(국보법 찬양·고무·회합·통신등) 오후2시, 합의2부, 302호, 신건
나현균(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오후2시, 4단독, 524호, 속행
신승우(국보법위반) 오전10시, 합의1부, 418호, 선고
조용주(국보법위반등, 쿠바측전 참가) 오전10시, 3단독, 423호, 선고

▶ 12일(목)

장혁남/정영훈(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속행
최순자(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신건
강병연(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선고
손에라(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선고
권오영(국보법 찬양·고무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 13일(금)

이춘구(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신건
신광수의 1(국보법위반) 오전10시, 합의1부, 418호, 재계
윤석진(국보법위반) 오후4시, 합의5부, 425호, 연기
고영복(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3부, 311호, 속행
심정용의 2(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이상 서울지법(고등)법원 형사국

담화·농성·집회...곳곳 '노동인권' 주장

전교조, 합법화 따른 대국민담화 발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9일 합법화에 즈음한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김귀식 위원장은 담화문에서 "전교조 합법화는 일찍이 인정되어야만 했던 교원의 기본적 권리였다"며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를 일보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교조의 합법화는 교육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덧붙이면서 △민주적인 학교운영 방안 제시 △교사의 전문적인 연구활동 강화 △교원단체들과의 협조·공유 아래 학교교육 정상화 등 교육개혁을 위한 실천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는 한국교총과 학부모단체에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실천기' 구성을 제안하며, △해고노동자 자녀 등록금 납부 유예 △국산 학용품 쓰기, 교복·교과서·참고서 물려받기 △사교육비 절감 방안, 청소년 폭력 대책, 학교환경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철도 해고노동자, 국민회의 당사 농성

9일 철도해고노동자회(의장 김운철, 철해노) 소속 해고자 11명은 철도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며 국민회의 당사에서 5일째 농성을 진행했다.

철해노 관계자는 "철도청이 철도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고 탄압·징계를 가해 88년과 92년에 해고된 노동자가 52명이며 지난해에도 2명이 해고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고된 박재원 씨는 노조지부장회의에 참석하여 철도청의 경영을 비판하는 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해 철도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또한 유재근 씨의 경우, 근무를 서지 않은 것으로 근무일지에 조작되고 근무후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한편 철해노는 국민회의가 9일 '부당노동행위 근절 대책위'(위원장 노무현)를 구성함에 따라 철도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시정 및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기로 했다.

택시노조, 권오영 씨 분신 관련 집회

이천지역택시노조 권오영 위원장의 분신과 관련, 7일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천터미널에서 '부당노동행위 척결과 폭력사업주 처벌을 위한 법 이천시민대회'가 열렸다.

'권오영 위원장 분신대책위'(위원장 강승규)는 이날 집회에서 △권 위원장 분신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치료비용 전액 회사 부담 △삼화, 이성, 신일운수 사업주와 삼화운수 상무 측각 구속 △이천택시 5개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측각 실시 △회사측 단체협약요구 전면 수용 △노동부 성남사무소 및 이천시청 택시담당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본지 1월 27일자 참조).

주간/인권/호/름

(98년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 2일(월)

평택 에비다농아원 사태 4백32일째, 에비다공대위 소속 회원 2백여 명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결의대회 개최/9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조디 윌리엄스(국제지뢰금지운동 대표) 씨 방한/서울지하철노조, 공사측에 94년 파업 뒤 제기한 51억 손해소송 취하와 해고자 복직등 요구하며 파업 결의/노동부 발표,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접수된 구직신청자 3천3백50명으로 사상 최대 달해/제3회 세계습지의 날 맞아 환경단체 대규모 간척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습지보전법 제정, 공유수면 매립법 폐지 등 정부에 촉구

◆ 3일(화)

미 하원의원들, 통화기금의 대아시아 금융지원과 아시아나라들의 노동권보장문제 연계시킬 것 촉구/프랑스 중등학교 교사들 교육부가 추진중인 교육개혁에 반대하는 전국적 시위와 파업 벌여/독일 금속노조, 크루프와 티센 두 철강그룹이 합병될 경우에도 두 회사에 고용된 18만명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장키로 합의

◆ 4일(수)

민주노총 임원등 10여명 재벌개혁 등 제반 개혁조치와 고용보장, 실업대책 요구하며 새정치국민회의 당사 농성 돌입/23개 시민·사회·종교 단체 '재벌개혁과 고용안정을 위한 공대위' 발족/대통령직인수위·노동부, 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사무소에 '여성차별해고 신고창구' 설치예정/최근 국제엠네스티가 1백여 명의 한국내 양심수 명단을 대통령직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

◆ 5일(목)

KNCC 주최로 열린 '안기부의 김형찬 고문수사 진상규명과 안기부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요기도회'에 김형찬 씨 참석해 피해증인/민주노총 인천본부 등 인천지역 7개 노동단체, '부당노동행위 고발센터' 설치운영/미국 정부 올해 식량 20만t 북한지원 결정/전후 최대 실업사태에 항의하는 독일 실업자들의 전국적 시위 벌어져

◆ 6일(금)

서준식 씨 구속 3개월만에 보석으로 석방/노사정 위원회, 정리해고 법제화와 전교조 합법화, 결합제무제표 99년부터 의무화, 중복지업 자율교환(빅딜) 추진 등을 뼈대로 하는 노사정 합의/정부 올해 문체부의 문화예술 예산 12.9% 삭감된 4491억 원으로 확정발표

◆ 8일(일)

국제노동기구 대표단, 공무원·교원의 단결권 보장등 진척상황 파악하기 위해 방한/한라중공업 노동자 등 60여 명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노사정 재협상'과 '민주노총 지도부 총사퇴' 등 주장하며 농성돌입/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 예산운용 의혹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인천시립예술단 산하 무용단원 송아무개 씨 등 5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2월 11일(수)

제 105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사기꾼이 감정한 유서대필사건

김형영 씨, 또 허위감정으로 구속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감정을 맡았던 김형영(57, 제일문서감정원장) 씨가 또다시 허위감정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0일 서울지검 특수2부(문영호 부장검사)는 한국전쟁 도중 토지문서가 소실된 국유지 37만여 평(1백86억 원 상당)을 가로채려고 국가를 상대로 20여건의 소유권 소송을 벌여온 토지전문사기단을 적발, 김 씨를 비롯한 관련자 10명을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분석실장을 지낸 자다가 공인(?)하는 문서 감정의 국내 1인자로서 '한국판 드래퓌스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으로 유명해진 감정인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고 김기설(당시 전민련 사회부장) 씨의 유서를 강기훈(당시 전민련 총무부장) 씨가 대필하였음을 인정하여 강 씨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하면서 1년2개월만에 막을 내렸다. "공권력의 권위"와 "재야 운동권의 도덕성 문제"의 첨예한 대립으로 보도되곤 했던 그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 씨의 감정서. 그는 고 김기설 씨와 강 씨의 필적이 '동일인의 것'이라고 감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강 씨의 유서가 확정된 뒤에도 의혹은 증폭되었으며, 오히려 국과수의 공신력만 추락하고 말았다. 그 사건의 중심 역할을 맡았던 김형영 씨가 강 씨의 2심이 진행중이던 92년 2월 허위감정 혐의로 구속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김 씨는 사건 의뢰인 이세용 씨 등으로부터 1천35만원을 받은 혐의로

감찰에 구속되었다. 92년 4월 8일 법정에 선 김씨는 "비록 돈은 받았지만 15년간의 국과수 제직중 국내 문서 감정의 1인자로서 양심에 거리는 감정을 한 일은 한 차례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그해 2월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서둘러 기자회견을 하면서 "맹세컨대 감정의뢰인이나 사실감정인으로 부터 단 한푼의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그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해 7월 풀려난 바 있다. 한편, 김 씨의 구속 소식을 들은 강기훈(34) 씨는 "이번 김 씨의 구속은 내 사건에서 재판부가 오판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은 국가기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한 인간의 진실을 짓밟았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상임대표 함세웅 등)도 논평을 내고, "김형영 씨의 감정을 통해 소위 '유서대필'의 근거로 법원이 채택한 모든 문서들은 정밀 제수사를 받아야 하며, 강기훈에게 씌워진 혐의도 재심을 거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 사회단체, 교도소 농성

재소자 서신왕래 및 면회 제한

전주교도소(소장 최해룡) 측의 양심수에 대한 집권제한 처분등과 관련해 10일 전주지역 종교·사회·시민단체 소속 1백여 명이 교도소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양심수 처우개선과 집권제한 철폐를 위한 대책위(공동대표 김진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대책위)'는 농성을 통해 "교도소측이 지난해 10월부터 소내 양심수에 대한 서신 및 집견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히고 소내 처우개선 및 집견철폐 철회, 양심수 전원석방 등을 요구했다.

교도소측은 재소자들에게 가족이외의 집견을 불허해 왔으며, 재소자가 특정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금지하고 제3자를 통한 서신 전달을 막는 한편, 반입되는 편지들조차 내용을 막물로 삭제하는 등 검열을 실시했다. 또한 독방에 2년 이상 수용시킬 수 없다는 형형법상의 규정을 어기고 있으며 대여허가 도서목록에 올라있는 책조차 반입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교도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가족이외의 사람들도 재소자를 면회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농성을 풀었다.

한편,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최보경 씨등 양심수 20여 명은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단식농성을 진행했으며 현재 교도소측의 재소자 처우와 관련하여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선별 사면 수용 못한다"

대구지역, 인권·사회단체

새 정부가 3·1절 특사대상에서 장기수과 조직사건 관련자들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 대구지역 인권·사회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선별사면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 양심수후원회, KNCC 대구인권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김 당선자와 국민회의는 그 어떤 이념적 기준이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인권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장기수와 조직사건 관련자, 한총련 학생들을 모두 사면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연재③>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규명 안된 '조작' 의혹, 간첩 사건 연루자들

"내 판결은 오판이었다"

87년 당시 대법원 판사로서 '간첩' 혐의자 강희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박우동 변호사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다.

제주도가 고향인 강희철(41) 씨는 75년 아버지를 찾아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81년 밀입국자로 검거돼 다시 한국으로 송환된다. 그로부터 5년 뒤, 제주도내 신혼살림방에서 대공수사관들에게 연행된 강 씨는 장장 1백5일간의 고문수사 끝에 "일본에서 조총련에 포섭되어 국가기밀을 누설한 간첩"이라는 어마어마한 낙인을 받았고, 이후 12년째 철창에 갇혀 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이 제시한 물증이라고는 평양에서 선물로 받았다는 일제 만년필과 겨울 스웨터 한 벌뿐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고문을 통해 만들어진 '조작'이라는 의혹을 남긴 채 종결됐다. 박우동 변호사는 95년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범죄 양상에 비해 형량이 비정상적으로 무거웠다. 실형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한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범죄는 아니었다. 강 피고인은 사람을 살해한 무장 간첩도 아니었고 독침이라든가 권총 같은 증거물도 없었다"며 "이 사건은 조작 가능성이 짙은 사건이었다"고 털어놓았다. 5·6공 때 강 씨와 같이 일본체류 생활 또는 활동이 '간첩'혐의로 연계되어 구금중인 사람은 현재 7명.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박창희 교수(외국어대) 등 3명이 일본관련 간첩 혐의로 영어의 신세가 됐다.

남북여부 사건

정영(58·15년제 구금) 씨는 남북여부 출신으로서 '간첩'이 된 경우다. 강희철이 고향인 정 씨는 65년 10월 피납됐다가 20여일 뒤 귀환했다. 그로부터 18년 뒤인 83년 정 씨는 안기부로 연행된 후 변호인 선임요청조차 거부당한 채 40일간의 불법구금·수사를 받았으며, 결국 법원에서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간첩'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58년 납북됐다 돌아와 82년 구속된 김정목(64·16년제 구금) 씨, 71년 납북사건 이후 83년 구속된 이상철(49·15년제 구금) 씨도 모두 장기간의 불법구금과 그 과정에서 고문을 받은 끝에 '간첩'으로 조작되었음을 항변해 왔다.

제일동포 간첩 사건

5·6공 당시의 '제일동포 간첩' 사건에서도 조작 의혹은 계속된다. 손유형(70·17년제 구금) 씨는 일본 오사카에서 플라스틱 제조공장을 하던 사업가였다. 그러나 손 씨는 81년 여행차 방한했다가 안기부 직원에게 연행돼 80일간의 불법구금을 거쳐 '일본을 거점으로 침투한 간첩'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손 씨와 그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수사관들은 안기부 지하실로 손 씨를 연행하자마자 '너는 간첩이다'며 이를 인정할 때까지 구타했고, 검찰 역시 '이렇게 말을 하면 집

행유에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희유한 것으로 전한다. 손유형 씨를 비롯해 제일동포 간첩 사건으로 구금중인 사람은 김병주(74·15년제 구금), 김장호(58·16년제 구금), 박수관(55·15년제 구금), 서순택(70·8년제 구금) 씨 등이다.

재심 통한 의혹규명 시급

이밖에 '한국전쟁 당시 행방불명된 가족과 접선한 간첩'으로서 복역중인 석달윤(68·18년제 구금), 박동운(54·17년제 구금) 씨 사건에서도 그렇듯이, 5·6공 이래의 이른바 '간첩' 사건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장기간(수십일에서 백여일)의 불법구금과 그 과정에서의 가혹한 고문이 벌어졌다. 재판부의 판결 역시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 작성된 조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했다.

박우동 변호사는 말했다. "군사정권의 검찰과 경찰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협박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시사저널 같은 호)

이제 요청되는 것은 공정한 재심을 통해 '조작'의 의혹을 벗기는 일이다. 사면조치는 그 출발점일 뿐이다.

제일동포 및 일본관련 양심수 석방 탄원

일본 전국회의, 9일 인수위측에 전달

일본 내 [제일한국인 정치범 지원을 위한 전국회의] 소속 이시이 히로시(48) 씨가 9일 대통령직인수위에 제일동포 및 일본관련 사건 양심수들의 석방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시이 씨는 탄원서에서 "한국 옥중에 수감된 손유형 씨등 제일한국인 양심수들이 고통으로 인한 자살은 병치레로 더이상의 옥중생활이 힘들며, 한국 정부가 전·노 씨를 사면한 만큼 국민대화합차원에서 하루빨리 이들을 석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간첩혐의 관련사건으로 구속·수감되어있는 제일동포는 5명으로, 이중 손유형(70, 18년 복역) 씨는 구속 전부터 당뇨, 위암, 후두염 등을 앓아 왔으며 지난해 9월부터는 반신불수 증상까지 보이고 있다. 또한 구미유학생 사건 관련자와 박창희(외대교수), 유정식 씨 등 일본관련 양심수는 15명에 달하고 있다.

이시이 씨는 지난 7일 입국한후 민가협, 천주교인권위 등을 방문해 이들의 석방등을 논의했으며 양심수 석방환영회에 참석하고 11일 출국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회의는 제일한국인 정치범을 위한 석방활동 등을 지원하는 단체로 국내 재야단체와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한일간 인권활동을 연대, 모색해나가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2월 12일(목)

제 106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전주 교도소 면회약속 파기

비전향장기수 이유, 사회단체 교도소 무기한 농성

전주교도소 최해룡 소장이 10일밤 양심수 면회를 약속한 후 또다시 면회를 거절해 전주지역 인권단체들이 교도소에서 농성에 돌입했다(본지 2월 11일자 참조).

'전주교도소 양심수 차별대우 및 면회금지 철폐를 위한 대책위'(공동대표 김진화 신부의 3인, 대책위) 관계자는 "11일 오전 10시 오경숙 민가협회장등 3인이 손병선, 신광수, 최호경 씨등을 면회간 후 교도소측에 의해 면회를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 면회단이 교도소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으며 소내 서무과장실에서 40여명의 교도대에 의해 교도소 밖으로 끌려나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도소 관계자는 "손병선 씨등은 비전향장기수이며 이들을 면회한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 관례에 비추어 면회를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유를 밝히고 "교도소측이 검찰청, 안기부등 유관기관과 연락하여 재소자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면회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소장이 10일 손 씨등에 대한 면회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교도소장이 새로 부임한 지 1달밖에 안돼 손병선 씨등이 비전향장기수인지를 몰랐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10일 교도소측이 약속한 손 씨등에 대한 면회를 어긴 것과 관련해 교도소의 도덕성 실추뿐만 아니라, 재소자의 접견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도소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행형법18조)는 면회규정을, 안기부등의 유관기관과 논의하여 재소자의 면회 여부를 결정할

으로 인해 사회단체 등의 큰 반향을 불러올 것으로 보여진다.

대책위는 오후 8시 교도소 앞에서 기도회를 갖고 △교도소장의 10일 약속 이행 △11일 양심수 면회불허와 관련한 교도소장의 사과 △양심수에 대한 차별대우 철폐를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시민·종교·사회단체 50여명이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갔으며 12일 오전 10시30분에 종교·사회단체 등 비상연석회의를 갖고 이후 대책을 세워나갈 예정이다.

한편, 전주교도소측은 면회내규와 관련하여 재소자를 1급-4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관규상 그들이 작업, 소내 질서 등을 어느 정도 지키는지 여부에 따라 급수를 달리하고, 일반수를 포함하여 전향자일 경우에는 가족이외의

사람들도 면회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조성봉 <레드헌트> 감독 체포돼 베를린영화제 참가 불투명

제주 4·3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의 제작자 조성봉 감독이 10일 부산시경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부산시경은 지난 1월 8일 조 감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높은 상환이었으며, 조 감독은 여권발급을 위한 신원조회 의뢰자 경찰서에 들렀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조감독이 <레드 헌트>를 제작한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 감독은 오는 14일 독일로 출국, 베를린영화제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베를린영화제는 오는 15일 <레드 헌트>를 상영한다. 조 감독이 구속될 경우 영화제 참석은 불가능해진다.

만화사랑방

이동수



'유서대필 사건' 언론도 재수사, 재심 요구 김형영씨, 신호수씨 필적감정도 맡아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 씨가 토지사기단 사건에 연루, 구속된 것과 관련하여 김기훈 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주요 일간지와 방송들은 토지 사기단 사건을 다루면서 김기훈 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 문제를 공통적으로 제기하였다. 특히 국민일보는 11일자 사설에서 "이번 사건으로 미루어 김씨는 국과수에 몸담고 있을 때도 상습적으로 허위감정을 해왔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이 사건은 격동의 한 시대를 상징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진상을 낱낱이 가려내는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사회단체들은 이번 김씨의 구속을 계기로 김기훈 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재심을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상임대표 함세웅 신부등)가 10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한국판 드레퓀스 사건에 다른 아님 소위 김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군사독재가 민주세력에게 가한 모욕과 도덕성을 훼손한 것에 대한 원상복구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고 김기설 씨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른 김기훈 씨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정의의 실현의 출발점"이라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재수사, 재심 요구 높아져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는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김씨의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행각이 드러난 지금, 김씨에 대한 '김기훈씨 무죄선방 대책위'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증혐의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95년 6월 검찰은 김형영 씨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렸으나, 뇌물수수에 이어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행각까지 자행한 김씨의 감정능력을 지금까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 이어서 재수사와 아울러 "김기훈 씨 유서대필사건의 판결이 김씨의 필적감정결과를 유일한 증거자료로 삼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재심을 통하여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호수 사건 필적감정도 문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배은심)는 김기훈 씨의 필적 감정을 맡았던 김씨가 86년 의문사한 신호수 씨의 사건에도 개입했다면서 "경찰서에서 신씨가 작성하였다는 자술서와 평소 신씨의 필적을 감정하여 동일인의 것이라고 판정을 내렸으나, 이후 가족들이 사실 감정소 두 곳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서로 다른 필적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신씨의 가족은 이를 기초로 검찰에 고소, 고발했으나 그때마다 김씨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시절 감정결과를 들어 기각했다는 것이다. 유가족은 "이번 김씨의 구속으로 김기훈 씨 사건뿐만 아니라 신호수 씨의 사건에 대한 엄밀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김씨의 허위감정으로 인해 피해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져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사회단체들은 허위감정으로 인한 피해사건들을 수집하고, 김기훈 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재심을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가 이후 행동이 주목된다.

행사와 동정

- 재일동포 우토지역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항의시위
 - 때: 2월 12일(목) 오후 2시
 - 곳: 일본대사관 정문 앞
 - 주최: 한국 우토지역 동포후원회 (☎744-3717)
- 투옥문인의 밤
 - 때: 2월 13일(금) 오후 7시

- 곳: 명동성당 카톨릭회관 3층 강당
- 내용: 시, 신문 낭송/ 슬라이드 상영/ 투옥자가 육성/ 노래공연/ 석방건의문 채택
- 주최: 민족문화자각회의 자유실천위원회 (☎313-1486)
-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5차 정기총회
 - 때: 2월 14일(토) 오후 6시
 - 곳: 연대 학생회관 3층 푸른샘
 - 주최: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742-3180)
-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토론회
 - 때: 2월 16일(월) 오후 2-5시
 - 곳: 종로성당 강당3층
 - 내용: 현시기 시민사회의 역할과 발전방향,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제도개혁 과제
 - 주최: 민변, 전총 등 19개 단체 (☎522-7284)
- 씨네21영화상 시상식
 - 때: 2월 17일(화) 오후 6시
 - 곳: 허리우드극장 블루관
 - 내용: 서준식 씨, 영화 <접속> 씨네21상 수상
- 수요일 300차 기념집회
 - 때: 2월 18일(수) 오전 11시30분-1시30분
 - 곳: 일본대사관 정문앞(300차 기념집회), 탑골공원(사건전, 유품전, 문화행사)
 - 주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365-4016)
- 열린희망-한국여성단체연합 10년사 출판기념회
 - 때: 2월 18일(수) 오후 6시30분
 - 곳: 서울클럽 2층 아트리움
 -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273-9535),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940-4254)
- 양심수 석방을 위한 기도회
 - 때: 2월 19일(목) 오후 6시
 - 곳: 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
 - 주최: 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 (☎744-3717)
- '98 시민사회단체 정책협의회
 - 때: 20일(금) 오전 10시-오후6시
 - 곳: 한국여성개발원 대회의실 등
 - 내용: IMF체제와 시민운동의 방향
 - 주최: 한국시민단체협의회 (☎763-6347)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2월 13일(금)

제 106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불법적으로 계구를 사용하는 등 재소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영등포구치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은 "영등포구치소장이 수감자에게 계구를 남용한 여러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는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진술서에 근거해 이영화 영등포구치소장을 폭행 및 가혹행위(형법 제125조)죄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발했다.

서준식 씨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해 2월 5일까지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으며, 이번 진술서에서 "구치소 당국은 징벌을 받은 수감자들에게 24시간 내내 수갑을 채우고 있으며, 이들은 보통 2개월 정도씩 수갑을 찬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씨에 따르면, 올해 2월초 현재 영등포구치소에선 약 20명의 수감자가 징벌을 받고 수갑을 찬 상태로 생활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약 15명이 제1동 징벌방에 수용되어 있다고 한다. 서 씨는 "이러한 사실은 교도관들의 증언에서 일치하는 부분"이라며, 박정규(수번 1169·징벌방 수용 2개월, 1월 15일경부터 수갑 착용) 씨등 5명의 피해자를 자신이 직접 목격했다고 밝혔다. 또 서 씨는 영등포구치소장이 '떡방'에 일부 징벌자를 가둬두고 있으며, 2월초 현재 1명의 재소자가 '떡방'에서 징벌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고발장에서 "징벌목적 계구사용의 불법성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의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준법의무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부담하는 공무원이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계속 징벌목적으로 수갑 등을 이용한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20일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교도소장이 소란 행위를 중요한 재소자에게 징벌을 목적으로 수갑·포승 등 계구를 사용했다면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박 씨에게 국가가 5백 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베를린' 영화인, 항의 움직임 조성봉 감독 오늘 영장심사

제주 4.3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 제작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혐의로 체포된 부산 하늬영상 대표 조성봉 감독에 대해, 12일 오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밤 부산지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하늬영상 사무실과 조 씨의 집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 씨는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했으며, 이에 따라 1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게 됐다.

한편,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출국한 김동원 감독(푸른영상 대표)에 따르면, 베를린 국제영화제 사무국에서는 조 씨의 체포에 대해 분노를 표시했으며, 영장실질심사 전 담당사에게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한다. 또한, 김 씨는 "만약 조 감독이 구속되어 영화제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베를린에 모인 영화인들이 한국정

부에 항의하며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교도소, 목사·신부등 폭행

양심수 면회제한 항의시위 도중

양심수 면회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전주지역 종교·사회단체 회원들이 교도소측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전주교도소 양심수 차별대우 및 면회금지 철폐를 위한 대책위(공동대표 김진희 신부등)' 관계자는 "사회단체 회원, 학생 등 80여 명이 재소자 면회 및 차별대우 즉각 철폐를 요구하며 항의집회를 하던 중, 고인영(60) 목사가 교도대원들에 의해 팔뚝이 찍여 넘어지고 김봉술 신부도 코피가 터지는 등 여러 명이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한편, 12일 최호경 씨를 면회하고 나온 가족은 "현재 최 씨는 단식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폭력사범 수용방에 수용되어 있으며 이가 부러지고 허리를 다친 상태"라고 밝혔다.

헌병대 가혹수사 인정

2천여만원 국가배상 판결

93년 12월 제대한 후 다음해 4월 총기도난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헌병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던 김 아무개(26) 씨가 국가로부터 2천여 만원을 배상받게 됐다(본지 94년 6월 9일자 참조).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형태 부장판사)는 11일 재판에서 "김모 씨가 육군 헌병대 수사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우울증 및 신경과민증상 등을 보인다"며 "국가는 김 씨에게 2천2백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사정 재협상 해야한다"

노동계, 학계 진보인사들 잠정합의안 문제 지적

범국민적 대타협이라는 평가 속에 지난 6일 노사정위원회의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 그러나, 9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합의안을 부결시키고 재협상을 촉구하면서 분위기가 긴장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잠정합의안이 30대 재벌총수의 퇴진 및 사재헌납, 노동자 경영참가법 제정을 거부하는 등 형식적 재벌개혁안을 담고 있고,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 등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며, 재협상 요구가 거부될 경우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는 민주노총의 파업에 공권력 투입 등 초강수로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고, 언론도 일제히 '국민적 합의를 뒤엎은 행위'라며 비난의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이같은 상황에서 노사정 재협상과 관련한 노동계, 학계 내 진보적 인사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청취해 보았다<편집자주>.

▶ 김삼조 교수(한성대 무역학과)
노조의 정치참여와 전교조 합법화는 고용안정 포기, 대가로 충분하지 않다. 노조의 경영참가 문제 등은 제기하는 수준에 그쳤고 민주노총이 처음부터 요구수준을 너무 낮게 잡은 느낌이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합의가 됐다고 선포한 상황에서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경제위기의 정부와 재벌책임론이 노동자책임론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재협상을 한다면,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 법제화의 무효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경영참가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

▶ 조희연 교수(성공회대 사회학과)
2월 6일 노사정합의는 잠정합의였을 뿐이다. 그러나 잠정합의안은 경제과정에 책임이 있는 재벌측에 대한 정당한 개혁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희생쪽으로 치우쳐 있다. 따라서 현장 노동자들의 비판 여론 속에, 대의원대회에서 합의안이 부결된 것은 정당했다. 이제 정부와 기

업 등 다른 파트너들이 재협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파업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노사정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은 있게 마련이다.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해가며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파업을 끝장 국가적 위기로 동일시해서 기득권을 고수하려 하는 수구세력에 문제가 있다.

▶ 박석운 소장(한국노동정책연구소)
협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잠정합의안 부결은 불가피했다. 절차상으로도 중앙위원회와 대의원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 대표단에게 전권을 위임한 바 없으며, 따라서 부결과 파업은 당연하다.

▶ 하종감 소장(한울노동상담소)
총파업을 통해 정리해고를 저지하는 것 뿐 아니라, 올바른 노동유연화정책을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노동자 스스로도 깨닫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노사정 합의과정에서 지도부는 좀더 신중하고 민주적인 의사수렴을 거쳐야 했다.

당선자에 '인권개혁 제안서' 전달

민변, 양심수 전원 석방 주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양심수 석방,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등 새 정부에서 실현해야 할 인권과제와 관련, 11일 김대중 당선자측과 인수위원회, 새정치, 사회의에 <인권관련 개혁 제안서>를 전달했다.

민변은 <제안서>에서 국민화해와 통합,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법·제도의 개혁, 정부와 인권단체 사이의 협력관계 구축 등을 새 정부의 인권정책 기조로 설정할 것을 요청하며, △양심수 석방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검찰제도 개혁 △안기부 개혁 △인권관련기구의 인적청산과 개혁 △전자주민카드 폐지 등 6개 분야에 대한 각계 전문가

들의 의견을 당선자측에 전달했다.

특히 양심수 석방 문제와 관련, 민변은 "양심수 개념에는 테러조직을 만들거나 폭력혁명을 공개적으로 추구한 폭력신봉자를 제외하곤, 공산주의를 자신의 사상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은 물론, 독재나 악법체제에 항거하기 위해 물리적 충동을 불사한 사람도 포함된다"며 "비전향장기수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전원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더불어 △미복권자에 대한 복권조치 △조작간첩 사건에 대한 재심 △서준식·권영길 씨 등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등의 조치도 촉구했다. <관련내용 내일자에 소개>

우토로후원회 일대사관 항의시위

유엔인권위 제소 검토

'한국 우토로지역 동포후원회(공동대표 김승훈 신부등, 우토로후원회)'가 12일 오후 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우토로지역 제일동포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한승헌 변호사는 "일본재판부가 전후보상의 책임을 언급없이 국제인권규약의 국제주거권도 인정하지 않고 우토로지역 주민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이호승 회장도 "일본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반인륜적·반문명적 판결"이라며 "일본정부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토로후원회는 UN인권위에 일본정부의 주거권침해 문제를 제소할 예정이다.

전농동 철거민 전원 연행

기거하던 천막도 철거

전농동 재개발지구에서 천막생활을 하는 주민들이 12일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경기지역철거민연합 고천만 조직국장은 "이날 오후 전경들이 천막을 철거하고 그 안에 있던 철거민 20여 명을 전원 연행했다"고 밝혔다.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③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관계

곽노현(운영위원, 방송대 법학과 교수)

국민인권기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로부터 독립해 있을 것과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

국민인권기구의 주요 업무는 인권의 관점에서 국가기관들의 정책이나 행위를 문제삼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정부 독립성은 국민인권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다. 인권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임기 보장, 해임 제한등 강력한 신분보장책이 주어져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물론 국민인권기구도 정부의 조직 및 예산 통제를 받는 국가기구의 하나인 만큼 정부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인권기구의 진가는 역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때, 즉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직언할 때 드러나는 법이다. 국민인권기구는 이런 경우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된다. 실제로 민감한 인권문제에 대해 직언하지 못하는 국민인권기구란 정부의 하수인이나 대변인으로 전락한 또 하나의 관료적 국가기구일 뿐이다.

대정부 독립성 필수적

법령으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어도 그 실효성은 위법 개개의 독립성 수호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나아가서 국가의 전반적 통치구조가 얼마나 민주주의에 충실한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를 가능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척도는 국민인권기구와 인권관련 민간단체와의 관계다. 즉, 국민인권기구가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면 일단 위법 개개의 독립성 수호 의지가 강하고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가 민주적이라 보아 무방할 것이다. 민간단체들은 인권 관련 현장 정보와 교육의 통로이자 원천이다. 국민인권기구가 이들 단체를 통하지 않고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경

민감한 인권문제에 대해 직언하지 못하는 국민인권기구란 정부의 하수인이나 대변인으로 전락한 또 하나의 관료적 국가기구일 뿐이다.

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는 이들이 바로 국민인 것이다. 따라서 일반대중이나 공동체에 뿌리내리고자 하는 국민인권기구는 일차적으로 민간단체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들의 강력한 지지와 성원이 없이는 어떤 국민인권기구도 정부의 부담한 압력과 요구를 이겨낼 정치력을 가질 수 없다. 또한 민간단체들의 강력한 비판과 감시가 없이는 국민인권기구 역시 타락하기 쉬운 국가기구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간단체와의 관계가 가능자

호주 국민인권기구도 민간단체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민간단체들에 대한 홍보와 대화를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민간단체들도 인권 위원회를 쉽사리 접근할 수 있는 기구로 여기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호주의 경우 민간단체와의 협의는 비공식적으로 이뤄질 뿐 법적으로 강제되거나 일정한 방식으로 제도화된 것은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민간단체들이 아쉬워했다. 정례화,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서 호주의 민간단체들은 인권위원 임명에 대해서도 아무런 공식 권한이 없었다. 추천권도, 비토권도, 청문권도 없었다. 이러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민간단체와 위원회가 너무 밀착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간단체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후보 추천권이나 청문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독립성이 손상되거나 양자의 역할에 혼동이 초래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예산의 독립성 확보도 관건

예산의 독립성 확보도 독립성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다. 호주에서는 지난 96년 3월에 출범한 보수연립정부가 자신들의 집권기간중(3년간) 무려 42%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방침 아래 국민인권기구의 조직과 인원을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중이다. 원주민 인권이나 반차별정책을 '무책임할 정도로 지나치게' 옹호해온 죄값이란단다.

반면 노동당 정부가 집권했던 지난 13년간 호주의 국민인권기구는 예산과 조직 면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국민인권기구가 행정부에 속해있는 이상, 정권의 성격에 따라 가용예산과 조직이 어느 정도 바뀔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에 국민인권기구의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독자성을 인정할 것이 요구된다는 취지의 문언을 넣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의 긴장관계 불가피

요컨대 제대로 기능하는 국민인권기구는 정부와 어느 정도 긴장과 갈등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는 국민인권기구는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민간단체의 지지를 통해 국가기구도 정부와의 긴장관계를 감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민간단체들은 국민인권기구의 성과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점에서 국민인권기구는 민간단체들과도 일정한 정도의 긴장관계를 면할 수 없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2월 14일(토)

제 106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경찰·건설회사 손발 척척

전농동 철거민 무더기 연행...숙소 강제철거

재개발지역 내 철거민들을 몰아내기 위한 경찰과 건설회사측의 공조작전이 또 한번 연출됐다.

12일 전농동 재개발지역에서는 천막 생활중이던 주민과 철거민연합 회원 등 3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청량리경찰서측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철거민과 건설회사(선경건설) 직원 간에 마찰이 발생하자 이를 빌미로 현장에 있던 철거민들을 전원 연행했으며, 뒤늦게 자녀들을 데리고 면회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연행·구금했다. 연행자 중에는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도 포함되어 있으며, 경찰은 이 가운데 기소증지 상태였던 김태영(전농동), 나만형(전농동) 씨와 폭행의자로 지목된 박기호(행당동), 신권식(청량1동)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철거민들이 전원 연행된 동안, 선경건설측은 주민들이 숙식하던 천막 4개 동 가운데 3개 동을 철거해 버렸고, 남게된 자녀 10명은 천막집 등으로 숙소를 옮겼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날 시비가 선경건설 직원들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행과정에서 빠져나왔다는 손미화(35·전농동) 씨는 "술 먹은 선경 직원이 천막으로 내려와 시비가 벌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신권식 씨가 선경건설 안전과장이 휘두른 망치에 머리를 맞아 네 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민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선경 직원들은 단 한 명도 연행되지 않았으며, 영장이 청구된 4명 외에 뚜렷한 혐의가 없는 나머지 철거민들도 여전히 조사를 이유로 잠시간 구금중이다. 신권

식 씨를 폭행했다는 선경건설 안전과장은 현재 폭행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를 끊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철거민연합은 "청량리경찰서에 구금중인 이희재, 남경남 씨 등 연행자들이 청량리경찰서 소속 마아무개 전경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행자들은 청량리경찰서 외에 노원·중랑·북부·도봉경찰서 등에 분산 구금되어 있다.

전농동은 지난해 7월 철거민 박순덕 씨의 사망을 통해 알려진 재개발지역으로 현재까지 주민들의 가수용시설이주 문제 때문에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월 재개발조합과 건설회사측은 동대문구청(구청장 박훈)의 중재로 철거민들의 가수용시설 입주를 약속했으나, 약속기한이었던 2월 5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조성봉 감독 구속영장 기각

베를린영화제 참석은 불투명

<레드 헌트> 제작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1일 체포됐던 조성봉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방법원 우성만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본인이 이적성을 부인하고, 제출된 자료 이적성 여부를 담당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기각이 결정됐다.

이로써 <레드 헌트>를 이유로 지난 1월 9일 경찰에 연행되었던 김동원 감독(푸른영상 대표)이 풀려난 데 이어

다시 작품 제작자마저도 영장심사 단계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이는 검찰이 주장하는 이적성 여부가 실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조 감독은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 발급이 어려워 실제 베를린 영화제에 참가할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고 항의 분신사망

대우조선 노조 최대림 씨

정리해고제 도입에 반대하는 노동자가 분신, 사망했다.

13일 오후 12시 30분경 거제 대우조선 노동조합 최대림(42, 수리선 선거팀) 씨는 건조중인 선체에서 분신한 뒤 25미터 아래로 투신해 사망했다.

최 씨는 유서에서 "전국 수백만 노동자가 하나되어 민주노총의 지점을 따를 때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법은 저지된다"며 "민주노총의 총과업 투쟁에 적극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성명을 내고 "고 최대림 노동형제의 죽음은 경제위기 속에서 끝없이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1천만 노동형제의 극단적 처지를 웅변하는 사건"이라며 "노사정 간의 합의는 현 경제위기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분명한 판단과 불합리한 사회체제를 고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 씨의 사망으로, 대우조선에서는 87년 노조설립 당시 직적취투탄에 맞아 이석규 씨가 사망한 이래, 89년 회사측이 구사대를 구성한 것에 항의해 박진석·이상모 씨가 분신하고, 95년에는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현장탄압에 항거해 박삼훈 씨가 분신하는 등 다섯명이 목숨을 잃게 됐다.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1일 새 정부에서 실현해야 할 인권과제와 관련, 11일 김대중 당선자측과 인수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에 <인권관련 개혁제안서>를 전달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본다<편집자주>.

▶ 국가기구와 제도 개혁

- (1) 대통령 직속 인권정책자문위원회 구성
- (2) 국회에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인권정책연구모임을 결성. 그 활동을 토대로 인권위원회 설치나 법사위원회를 인권법사위원회로 개편
- (3)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 (4) 국민의 국가권력 참여확대

▶ 국민적 동질성 형성과 국민적 화해 작업

- (1) 미군정 및 한국전쟁기의 화살 사건에 대한 조사, 명예회복, 보상
- (2) 광주항쟁의 진상공개. 수사기록과 각종 자료 공개
- (3) 고문과 조작간첩 사건 등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조사, 보상
- (4) 이근안 체포
- (5)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와 같은 한시적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 (6)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 확대
- (7) 인권유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시효이익을 원용하지 않겠다는 선언

▶ 시민사회의 자율성 확대와 인권교육의 제도화

- (1) 기부금품모집규제법 폐지
- (2) 인권교육 제도화
- (3) 학교 및 학생의 자율성 강화

▶ 국가와 국민 관계의 민주적 개혁

- (1) 양심과 사상, 표현의 자유, 결사 집회의 자유 보장, 정경유착과 경제적 독점 방지 제도 개혁
- (2) 정치참여권, 정치활동과 선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폐지

(3) 경찰권 행사의 절차와 한계 엄격히 제한: 무자위 불심검문 폐지/무기사용의 절차와 한계 엄격 규정

(4) 형사소송법 개정 등 수사의 투명성과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강화: 묵비권 보장/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권/ 기소때 수사기록 사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무적 제공/ 형사법정 구조변경(당사자 대등주의 실현)/ 청소년 등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보호자 참여 의무화/ 국선변호제도 확대/ 영장실질심사제도 전면 도입/ 국가보안법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조항 폐지

(5) 행정법 개정: 재소자의 처우 보장/ 재소자 징계시 변호권 및 이의권 인정/ 유치장 및 구치소의 재소자 관련 기록에 대한 수감자 및 변호인, 가족의 공개청구권 인정/ 법정 출정시 사복착용허용/ 무죄, 집행유예, 선고유예 선고시 즉시 석방/ 피의자, 피고인 유치시설과 수사기관의 분리

(6) 도청과 검열제도 전면 폐지, 당사자의 권리보호(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법 개정): 통신위원회 사전검열 폐지/ 통신 감청, 우편물 검열의 경우 당사자에게 사실 통보

(7) 전자주민증 도입 철회, 주민등록법 개정: 주민등록번호 폐지/ 지방자치단체 별 주민신분확인제도로 변경/ 민관 공동으로 주민등록제도 연구위원회 설치

(8) 최근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조사

(9) 사형제도 폐지

(10)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찰 산하 과학수사연구소 등 중립성 및 공정성, 전문성 강화

▶ 사상·양심과 표현의 자유

- (1) 전향제도 폐지
- (2) 보안관찰법 개정: / 보안관찰처분 사유 엄격히 제한 / 피보안관찰자의 보고 의무 폐지 / 보안관찰기간 제한 / 사법심사 확대 / 보안관찰처분 법원 판결 통해 부과
- (3) 사전검열제도 철폐

- (4) 집회와 시위의 자유 확대
- (5) 정보공개법위 확대
- (6) 수용시설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사회경제적 권리 확대

- (1) 노동자와 노조의 권리 국제수준으로 보장
- (2)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자치, 교육권 보장
- (3) 교과서 집필 자유화
- (4) 의식주, 건강권의 국민적 최저선 제정
- (5)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수혜자의 시설 선택권 보장
- (6) 직접, 재산, 증여, 상속세 강화, 간접세 부담 축소
- (7) 재개발 관련 세입자 대책 보완, 철거폭력 근절
- (8) 외국인노동자의 권리 보장

▶ 남녀평등실현

- (1) 호주제도 폐지
- (2) 공직 할당제 등 잠정적 여성우대제도
- (3) 고용차별 철폐

▶ 국제적 인권기준에 따른 인권보호

- (1)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B규약), 여성차별 철폐조약, 고문방지조약 유보철회
- (2) ILO 87호, 98호, 151호 조약 비준
- (3)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권이사회 등 조약감독기구에 대한 보고서 제출과 회의참가과정에 인권단체와 협의
- (4) B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인권이사회가 결정한 손종규 씨 사건 성실 이행
- (5) B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

▶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질서 마련에 참여

- (1) 국제인권 조약 비준, ILO 기본조약 비준, 비준조약의 유보철회
- (2) 아시아의 민주화 기여를 외교목표의 하나로 삼을 것
- (3) WTO, APEC, ASEM에 인권 및 노동자문위원회 설치 노력
- (4) 아시아지역 인권현장 채택 및 인권기구 설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2월 17일(화)

제 106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잘난 '법'·'명분' 덕에

현저동 주민 길거리 나앉을 판

팔순 할아버지를 포함한 가이주단지 주민들이 어찌구무 없는 법규정과 관청의 '명분'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에 몰려 있다.

지난 94년부터 서대문구 현저동 내 가이주단지(새누리마을)에서 살아온 주민 43가구는 오는 3월이면 '그리던' 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0가구가 '미해당자'라는 이유 때문에 입주하기를 못하고 있다.

1인가구, 임대주택 입주 안돼

10가구 가운데 염만순(48) 씨 등 다섯 가구는 1인 가구(단독세대)라는 이유로 '미해당자'가 된 경우다. 현행 건설법 상으로 1인 가구라 하더라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나, 서울시 조례는 1인 가구를 미해당자로 분류해 입주권을 주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조례를 개정해 1인 가구에 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장하기로 했지만, 현저동 주민들에게까지 소급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저동 철거민대책위 위원장 한희중(43·해당자 분류) 씨는 "이러한 방침에 따르면, 부부간에 이혼하거나 자식을 출가시켜 혼자된 사람도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며 바뀐 조례와 건설법에 정해진 대로 1인 가구의 입주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준식 대표 2차공판 인기

오는 20일로 예정되어 있던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2차공판이 인기였습니다. 공판일정은 추후 지정.

또한, 김영수 씨 가족 등 다섯 가구는 '거주기간'이 문제가 돼 미해당자로 분류됐다. 현행 재개발법은 재개발을 노린 위장전입자를 구분하기 위해 재개발결정고시 3개월 이전에 입주한 세입자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가구들은 재개발 시행령이 떨어진 이후 이주를 해왔거나 재개발결정고시 3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미해당자'로 분류되고 말았다. 현재 주민들은 이미 미해당자도 입주할 바 있는 타지역의 사례를 제시하며 구청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구청측은 '명분'이 없어서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은 남어도 법 때문에 안돼

한희중 위원장은 "전임오는 세입자들에게 법과 조례에 대해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았던 것부터가 문제"라며 "오랜 기간 꾸준히 그 지역에 살아온 주민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6백 가구를 수용하는 현저동 임대아파트엔 현재 2백 가구 분량이 남는다"며 "세입자를 위해 임대아파트는 근근이 이상, 법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입장에서 주민들을 최대한 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86) 씨는 재개발 시행령이 떨어진 이후 이사를 왔다는 이유와 혼자 살고 있다는 이유 모두에 해당된다. 서대문구청에서 취로사업을 하며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는 지 할아버지는 "그동안 새누리마을의 따뜻한 사람들이 안부도 묻고 말벗도 되어주었는데 이제는 갈 곳도 없이

이곳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 것'이 제일 막막하더라 한다.

노사정 합의, 정치권이 됐다

민변·전국연합 노동법통과 규탄

14일 밤 국회가 기존의 노사정 합의 사항마저 무시하며 노동관계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전국연합 등은 16일 성명을 통해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국회는 14일 노사정 잠정합의안 가운데 '실직자의 조합원 인정'등을 삭제한 채 정리해고제 등을 강행처리했다.

이에 대해 민변과 전국연합은 "잠정합의안을 부결했던 민주노총의 결정에 대해 온갖 비난과 공격을 퍼부었던 정치권이 합의안을 대폭 후퇴시킨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하며,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양심수 석방·안기부 해체"

전국연합 탑골공원 집회

14일 오후 12시30분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소속 회원 및 학생 등 3백여 명이 탑골공원에서 '양심수 전원석방, 안기부 해체 촉구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전·노와 많은 비리주범들이 사면·복권된 상태에서 선별적인 양심수 석방은 민주화합과 형평성에서 옳바르지 않다"며 "장기수와 한총련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안기부, 보안사 등 공안폭압기구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악법을 동원하여 민주인사를 간첩으로 조작하고, 잔인한 고문으로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해 왔다"고 밝히고 안기부, 보안사의 해체를 요구했다.

교도소장 공식사과·장기수면회 재약속 13일 전주교도소비대위 농성 풀어

13일 밤10시경 '전주교도소 양심수 차별대우 및 면회금지 철폐를 위한 대책위'(공동대표 김진화 신부등, 대책위)가 교도소측과의 면담을 통해 손병선(남한조선노동당사건 연루) 씨등을 면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속을 다시 받아내고 철야농성을 풀었다.

대책위 관계자는 "백남운 목사 등 3명의 대표가 오후 7시경 교도소장과의 면담 후 손 씨등에 대해 성직자로서만 제한한다는 조건으로 면회약속을 받아내고 철야농성을 풀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남운·한상열 목사, 김봉술 신부 3인에 한해서만 손 씨 등에 대해 23일부터 3일간 한 명씩 면회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11일 대책위가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3명의 대표에게 교도소장의 사과, 보안과장이 1백여 명에게 공식 사과 △소내 양심수 처우개선 시정조치 구두 약속 △천막 파손 등에 대한 배상으로 일단락되었다(본지 2월 12일자 참조).

한편, 이날 오전 9시경 전주경찰서측은 농성중이던 학생 3명을 연행한 후, 이에 항의하던 전주인권선교협 최재훈 씨를 비롯해 4명을 연행했다가 오후 5시경 모두 풀려났다.

현재 전주교도소에는 12명의 양심수가 있으며 손 씨등 3명의 장기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가족이외의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다.

.....주요 공판 안내

▶17일(화)

- 조현재(국보법 찬양·교무등) 오전10시, 서울고법 합의3부, 303호, 선고
- 유병서(국보법 찬양·교무등) 오후2시, 서울고법 합의3부, 303호, 속결
- 김현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등) 오전10시, 서울고법 합의10부, 403호, 선고
- 한승희(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한총련) 오전10시, 서울고법 합의5부, 404호, 선고
- 유대상(업무방해등) 오후2시, 서울지법 3단독, 423호, 속결

▶18일(수)

- 양창훈(특공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서울고법 합의2부, 302호, 선고
- 양은영(국보법 찬양·교무등) 오전10시, 서울고법 합의2부, 302호, 선고
- 박성철(특공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서울고법 합의4부, 403호, 선고

▶19일(목)

- 윤부식 외1(특공치상등, 한총련) 오후2시, 서울고법 합의5부, 404호, 속결

▶20일(금)

- 심정웅 외2(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서울지법 합의22부, 319호, 속결
- 함윤경(국보법) 오전10시, 서울지법 합의7부, 423호, 선고

주간/인권/호/름

(98년 2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

◆ 9일(월)

철도해고노동자회 소속 해고자 11명 철도해고자 원직복직 등 요구하며 국민회의 당사에서 5일째 농성/민주노총 임시대의원회의 열어 고용조정(정리해고) 법제화 저지를 위해 총파업 결의/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학부모단체에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실천기구' 구성제안/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등 교육관련 12개 단체 63빌딩에서 '교원노동권 허용반대 결의대회'

◆ 10일(화)

민주노총,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대해 제협상 촉구/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등,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 씨가 사기범들과 짜고 토지문서를 허위감정해준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김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 재심" 주장/대법원 민사1부(주심 최종영 대법관), 전 서울대 조교 우아무게 씨가 '성희롱'과 관련해 같은 과 신아무게 교수등을 상대로 낸 손해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 내린 원심파기 환송/전주교도소(최해룡 소장) 측의 양심수에 대한 점진적 처분 등과 관련해 전주지역 사회단체 소속 1백여 명 교도소 앞 농성/프랑스 하원, 주 35시간 노동법안 채택

◆ 11일(수)

정부, 불법·부당노동행위 사례 3백3건을 적발/서울지하철공사 노조, 지하철공소속이 노조를 상대로한 5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12일로 예정된 파업철폐/북한 어린이살리기 의약품 지원본부, 국가를 상대로 기부금품모집허가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 서울고법에 제출/국제노동기구, 아시아의 경제위기에 따른 해고 예방 전략과 실직자들에 대한 보호책 마련을 위해 오는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특별회담 개최

◆ 12일(목)

'한국 우토로지여 동포후원회' 일본대사관 앞에서 우토로지여 재일동포 주거권 보장 촉구 항의시위/대통령직인수위, 안기부의 국내 공안관련 수사기능을 검찰에 이관하고 검경의 공안관련 기능을 재정비하기로 하는 등 '새 정부 100대 과제' 확정발표/통계청 발표, 실업자 70만 명 추정/민변, 영등포구치소장을 공무원의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

◆ 13일(금)

대우중공업육포조선소 노동자 최대립(42) 씨 정리해고 반대하며 분신자살/민주노총 총파업 철폐/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조성봉(〈레드헌트〉 제작)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청량리경찰서, 전농동 재개발지역 철거민 31명 연행, 이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 15일(일)

북한 〈중앙방송〉 보도, 북한은 3월1일부터 경찰기구인 사회안전부에 '주소안내소'를 설치해 주민들의 이산가족 찾기를 우선 추진 예정/민주노총 산하 금속 3조직 통합체인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위원장 단병호) 공식 출범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2월 18일(수)

제 106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동아대 간첩단, 물증없이 선고”

간첩혐의 3년6월 실형, 가혹행위 언급없어

부산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16일 동아대 자주대우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5명의 선고공판에서 도경훈 씨를 제외한 4명에 대해 간첩혐의를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은주(29) 씨 등이 안기부, 경찰수사 당시 협박 및 회유·가혹행위를 당해 거짓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검찰조사때의 자백, 공판과정에서의 심리등을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담당변호사는 "서봉만(29) 씨등 3명이 처음 검찰조사때 일부자백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임의성 자백이 부정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과 관련, '동아대 간첩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배다지 부산연합회장 등, 대책위)는 "재판부가 경찰조사과정의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물증도 없이 단지 검찰조서 기록만을 증거물로 채택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반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은주 씨등이 3-4년전에 일본어학연수를 가서 번 아르바이트 비용을 한총련에 보낸 것이 공

서준식 대표 2차공판 연기

오는 20일로 예정되어 있던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2차공판이 연기되었습니다. 공판일정은 추후 지정.

작금으로 조작됐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관은 배운주(29) 씨가 아르바이트할 때 식당 주방장의 친구를 만나 는 과정에서 공작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작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임주영(29), 서봉만 씨가 같은 날 입당했다고 수사기관이 밝히고 있지만 입당원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같은 날 입당했다고 하는 두 사람의 입당원서의 양식이 다르고 내용이 서로 불리게 작성되었다"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본지 97년 10월 1일자 참조).

대책위는 이후 동아대 간첩단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증거자료에 대한 추가조사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가 적용된 도경훈(26, 97년 총학생회장) 씨는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비리 철저수사 촉구

민변·참여연대, 위원회 구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 참여연대)는 17일 '법조비리 진상규명과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변 회의실에서 의정부지원 판사비리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3백차 수요시위

· 때: 오늘 오전 11시30분 · 곳: 일본대사관 정문 앞

· 주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365-4016)

회견을 가졌다.

위원회는 "이번 비리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이며 이로인해 모든 사법작용에 대해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원과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서울지검 특수부나 대검찰청으로의 수사 이관 △법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앞으로 대법원장·검찰총장 공식면담과 진상규명·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검찰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발등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오늘 낮 12시 서울 지방법원 앞에서 '의정부지원 법관수뢰사건 진상조사 및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서준식 씨, 씨네21대상 수상

인권영화제 개최 공로

17일 오후 6시 허리우드극장에서 <씨네21> 영화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번 시상에서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과 영화 '접속'의 제작사인 명필름이 씨네21 대상을 공동수상했다.

서준식 씨는 수상수감을 통해 "인권영화제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일하는 인권운동가와 영화인들의 행복한 만남을 기대했고 보람을 얻었다"며 "올해도 열심히 인권영화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① - 해아래집 식구들(에바다농아원 농성단)

‘굴리앗’에 맞선 ‘다윗’들

평택과 오산을 잇는 국도변. 줄지어 늘어선 토종음식점 사이로 ‘해아래집’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외지인들이 가끔 음식점으로 착각해 ‘오리탕’을 주문하려 들어온다는 이 집은 96년 이래 4백50일 가까이 투쟁해온 청각장애인들의 보금자리 노릇을 하고 있다.

해아래집의 주인은 ‘에바다농아학교’ 학생들이다. 막내 미에(16)에서부터 큰오빠 성희(25·97년 졸업) 씨까지 분주히 오가는 손발(수화)을 통해 자신들을 드러내 보인다. 그지없이 순한 인상이지만 장기간의 테모와 농성을 버티낸 ‘싸움꾼들’이기도 하다.

올해 전문대학에 합격한 경훈(21) 씨는 “농아원에서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고 매일 일만 시켰다”며 대화를 시작했다. “세끼 밥을 다 주긴 했지만, 낡은 쌀로 지은 밥이었어요. 원장은 재분소에서 일 시키고 월급을 착취했어요.” 필담으로 나누는 대화지만, 재단비리에 대한 분노는 절절하다. 기나긴 싸움 속에서 어린 동생들은 포기할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서운 농아원 생활을 돌이키면 다시 해아래집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너무 억울해요”

아들 동식(21·중2과정)을 농아학교에 보내는 정용해(49) 씨에게 최실자, 최성창 전 원장은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랬기에 재단과 정면으로 맞붙기까진 나름의 고심과 노력이 있었다. 사태발생 후 학부모에게서 ‘무관심’을 질타 받은 그는 직접 학생들의 생활을 체험해 보기로 한다. 재단측을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였다. 한 달동안 밤마다 농아원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정 씨는 진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도둑질을 한 것은 배가 고파서였고, 항상 찬물로 목욕하는 것은 겨울에도 온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정 씨의 ‘운동’은 시작되었다. 정 씨는 자동차정비공장을 경영하는

지역의 ‘유지’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유지’로서의 특권과 대접을 누리지 못한다. 알고 지내던 유지들로부터 ‘손 때라’는 ‘권유’도 받고 있지만, 정 씨는 그만둘 생각이 없다. 처음엔 자식 때문에 시작했는데, 하다보니 전국의 장애인을 대신하는 싸움이라는 걸 깨달았던 것이다.

정 씨는 최근 감사원의 특감에 실망을 감추지 못한다. 법, 행정상으로 재단측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는 말이 들리고 있는 것이다. 정 씨는 “당연하다”고 한다. 벌써 1년 이상 지난 문제인데 재단이 ‘준비’를 안했겠리 없다는 것이다. 정 씨는 말한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를 버티게 한 건 재단의 악랄함이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해아래집의 또 한 식구는 에바다농아학교의 교사들이다.

제자들이 먼저 나선 데 부끄러움을 느낀 11명의 교사들은 지금껏 한 사람의 이달자 없이 학생들 편을 지키고 있다. 재학시절 테모 참가 한 번 안해왔다는 신연실(34) 교사 등 세 명의 여교사는 아예 해아래 집에서 숙식을 하고 있다. 박창숙(36) 교사는 “우리를 지금까지 버티게 한 것은 다름아닌 재단의 악랄함이었다”고 말한다.

권오일(38) 교사 부부는 유일하게 징계를 받았다. 권 교사는 농성사주, 폭행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파면당했고, 부인(김정임 교사)은 직위해제 상태다. 당연히 수입도 1/4로 줄었다. 하지만 권 교사는 “누군가 당해야 할 일을 우리 부부가 감당하게 된 것은 차라리 잘 된 일”이라며 동료애를 드러낸다.

끓는 물을 뒤집어쓰고, 사흘에 한 번 꼴로 폭행을 당하며 보낸 지난 1년에

대해 교사들은 “한 마디로 악몽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교사들은 소중한 것을 많이 배웠다. 신연실 교사는 “학부모들과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와 관심”을 주고받았고, 박창숙 교사는 “늘 아이들 위에 군림해오다 비로소 자세를 낮추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이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김선옥(34) 교사는 말한다. “싸움을 시작한 후 단 한 번도 잘될 것이라는 확신을 버린 적이 없다.”

장애인 인권의 미래를 짊어지고

지난 5일 개학과 함께 학생들은 다시 등교했다. 감사원의 특별감사 때문인지 분위기는 그저 고요하다. 그러나, 학생들은 ‘원’(수용시설)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성현(19)이는 “농성 전보다 지금이 많이 좋아졌다”면서도 ‘원’으로 들어가기 싫다. 무섭기도 하고, 해아래집에서 받았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다.

지난 4백여 일 동안 해아래집 식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한 셈이다. 유명한 시사프로그램마다 시간을 다했고, 일간지 기사만도 2백 건이 넘는다. 국정감사도 있었고, 이번엔 감사원의 특별감사도 벌어졌다. 그럼에도 에바다 재단의 위치는 굳건하기만 하다. 지역 내 세마음교회의 최창우 목사는 “중년 주민들은 다 아는데, 관청만 모르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한다. 해아래집 식구들은 묻는다. “장애인을 위해 법이 있는 겁니까? 법을 위해 장애인이 있는 겁니까?”

지금 해아래집은 밝다. 웃음과 장난이 있다. 굴리앗 같은 재단과 관청을 상대로 한관승부를 벌이는 이들의 어깨에는 4백만 장애인 인권의 미래와 희망이 걸려 있다.

해아래집 연락처: 0333-63-0825
농성단 구좌번호(예금주 김주명)
농협 205031-52-099833
국민은행 232-21-0467-997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2월 19일(목)

제 106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3백회 수요집회, 일 정부 태도 여전

한국·필리핀·일본 민간단체, 위안부 배상 촉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정대협)가 18일 오전11시30분 여성·사회단체 및 시민·학생 4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 300차 기념집회’를 갖고 평화행진을 벌였다.

김윤옥 정대협 공동대표는 “수요집회가 92년 1월 8일 처음 진행된 후 현재 3백회째를 맞이했다”며 “일본정부는 아직도 반성과 사과는 커녕 발뺌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 박원순 변호사는 “일본정부의 위안부 책임문제는 국제법 조항에도 확정·발표되었다”며 “이러한 범죄가 인간성을 심각히 유린하는 비인도적 성범죄로 단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전범인 독일이 전쟁후 국내·외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을 했지만 일본은 민간기금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하는데 이것은 이중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안부 책임자 나카소네 향한 반대 한나라당 이미경 의원은 “일본정부가 위안부문제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97년 12월 일제시기 전범의 출입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또 “현재 국회의원 28명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는 위원회’를 대표 이미

서준식 대표 2차공판 연기

오는 20일로 예정되어 있던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2차공판이 연기되었습니다. 공판일정은 추후 지정.

3백회 수요집회, 일 정부 태도 여전

경 의원)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일본의 대표적 전범자로 위안소 책임자였던 나카소네 전총리가 25일 대통령 출범식 때 축하 방문을 할 예정인 것과 관련, 이에 대해 입국을 불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대협은 이날 별도로 탑골공원에서 유물전 및 유물전, 사진전, 문화공연을 가졌다.

필리핀, 일본서도 연대집회

한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필리핀에서는 일본 황태자부부의 방문과 때를 같이해 18일 필리핀 주재 일본대사관 앞에서 무용시위를 전개했다. 같은 날 일본에서도 ‘전후보상 실현 국제캠페인’과 ‘구 일본군에 대한 성적 피해를 받드는 회’ 회원들이 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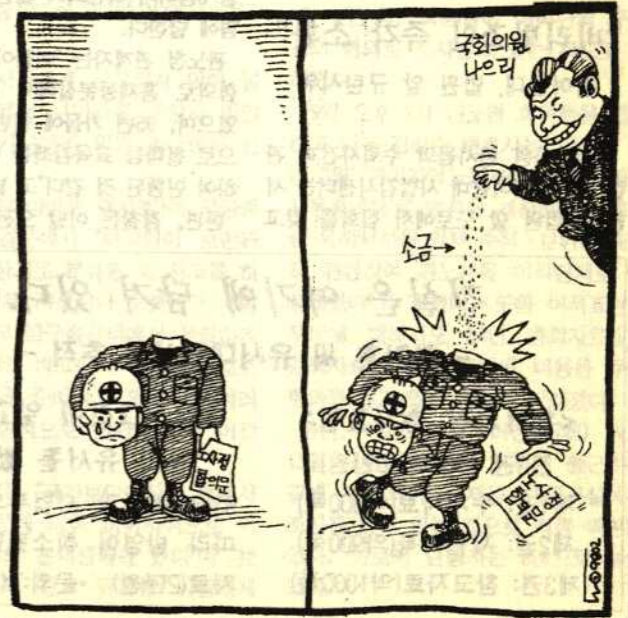
카 나고야에서 집회를 갖고 “한국인들이 진행하는 수요시위에 대해 일본 국민들은 적절하게 생각해야 된다”며 “법적 책임없이 국민기금으로 배상하려는 일본 정부는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위안부 할머니 155명 생존

일본은 1932년 상해사변을 전후로 일본군대를 위한 위안소를 설치하고 1943년 1월 현재 중국에 280개 위안소, 동남아 1백 개소, 사할린 10개소 등 모두 4백여 개에 달하는 위안소를 두었으며 1945년 8월까지 규모와 지리적 범위를 계속 확대했다. 이 당시 일제에 끌려간 여성은 모두 20여만 명으로 추정, 이중 7만여 명이 군위안부로 대다수가 한국여성이었다고 한다.

현재 일본군위안부 관련자는 1백55명이 생존, 이들중 8명이 나눔의 집에서 기거하고 대부분이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지내고있으며 생활안정지원법에 따라 50만원의 생활비 보조금과 서울중앙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고 있다.

만화사랑방



이동수

목숨까지 앓아간 노점단속

강남역 붕어빵 청각장애인 급사

구청의 과잉단속에 항의하던 노점상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오후 3시40분경 서울 강남역 1번출구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던 청각장애인 김재훈(59) 씨는 구청직원과 용역회사 직원의 단속을 받던 도중 쓰러져 사망했다. 김 씨의 부인에 따르면, 단속반원들이 김 씨의 가스통과 차(다마스) 열쇠를 뺏아갔으며, 이에 항의하던 김 씨에게 단속반원이 차 열쇠를 던지는 순간 김 씨가 열쇠를 받다가 쓰러졌다고 한다. 김 씨는 쓰러진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현재까지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김 씨의 시신은 노원구 을지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다.

전국노점상연합회 관계자는 "이날 단속에는 구청직원 1명과 용역직원 10명이 동원됐으며, 용역직원들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족측은 구청측의 배상과 사과를 요구하며 구청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리법조인 즉각 소환"

참여연대, 법원 앞 규탄시위

의정부지원 판사들의 수뢰사건과 관련, 18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서울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집회를 갖고

법조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이자 할 사법부의 부패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지체없는 수사작수를 요청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법원과 검찰이 대충대충 국면을 모면하려 한다면 이 나라 사법정의와 법치의 권위는 땅 끝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판사와 변호사는 물론, 관련자 전원에게 대한 즉각적인 소환조사 △서울지검 특수부나 대검찰청의 직접 수사를 촉구했다.

교육강좌 관련, 6명 연행

경찰, 관악노동청년회 압수수색

18일 오전 9시경 관악노동청년회(회장 윤순재, 관노청) 소속 6명이 집과 출근길에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연행당한 사람은 윤순재(28), 김경진(28), 홍정표(28), 최백길(26), 윤수근(31, 91-94년 회장), 조백현(노동조합기업경영분석연구소 근무) 씨 등 6명이며 확인되지 않는 사람도 3-4명에 달한다.

관노청 관계자는 "이들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홍제동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95년 가을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철학당 교육강좌를 한 것과 관련하여 연행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8시40분 관

노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1대, <새날>회지, 디스켓, 유인물, 사회과학책 등 124종을 압수해 갔으며, 또 최백길 씨의 가족에 따르면 오전 9시 30분경 경찰이 집에 들이닥쳐 유인물과 디스켓 등을 압수수색해 갔다고 한다.

관노청은 현재 회원이 10여명 안팎으로 87년 '관악지역노동자협의회'가 출범하여 노동조합 지원 및 야학을 중심으로 활동, 94년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하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 및 학습, 노래, 시사토론 등 소모임 활동을 하고 있다.

행사와 동정

전환기의 인권과 인권교육

- 25일 오후2시 · 성공회 성가수녀원
- 내용: 발제1-지구촌시대의 인권과 평화교육(오재식 선명회회장) / 발제2-신정부하의 인권과 인권교육(조용환 변호사) / 기조연설-성서적 입장에서 본 인권과 평화(성공회대 이재정 총장) / 종합토론-한국대학에서의 인권 및 평화교육의 방향
- 주최: 성공회대학교 인권과 평화위원회 (☎ 610-4143)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하는 목요기도회

- 19일 오후5시 · 기독교회관 2층
- 주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 (☎ 744-3717)

경제파탄 책임자 처벌과 민주생존권 쟁취를 위한 98 전국민대회

- 20일(금) 낮12시 · 종묘공원
- 주최: 전국철거민연합, 전국노점상연합 (☎ 725-5025)

서대문구청의 철거민세입자대책을 촉구하는 집회

- 20일(금) 오후1시 · 서대문구청 앞
- 주최: 현저동 새누리마을 주민회 (☎ 392-1631)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약칭: 추모단체연대회의)는 2월 14일 제5차 총회를 열어 단체명에서 '전국'을 삭제하고, 이창복 의장과 문호근 집행위원장을 선임했다. (☎ 742-3180)

진실은 여기에 담겨 있다.

-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 추적 -

<유서사건 총자료집>

- 전3권 2700쪽(10만원)
- 제1권: 수사자료(약800쪽)
- 제2권: 재판기록(약900쪽)
- 제3권: 참고자료(약1000쪽)

SBS <그것이 알고싶다>

'누가 유서를 썼는가'

93년 검찰과 사법부의 압력에 따라 방영이 취소됐던 비디오 자료(2만원) *문의:741-5363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2월 20일(금)

제 106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선별석방 반대, 전원석방 촉구

민가협 거리서명 1만명, KNCC 목요기도회 열어

김대중 정권 출범 직후 비전향 장기수를 비롯한 양심수들의 선별 석방이 예상되는 속에, 국내외에서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캠페인이 한창이다.

일본의 [제일한국인정치범을 구원하는 회] 전국회의와 한국인권기금국제센터 등 두 단체는 17일 도쿄 내 넛포리 역전에서 한국의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거리선전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오는 24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거리선전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6일부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민가협)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주관으로 매일 오후 1시 서울역광장에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캠페인에는 양심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직접 나와 시민들에게 간절한 호소를 보내고 있다. 또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진행해, 열흘만에 1만 명 가량의 호응을 얻어내기도 했다. 서명에 참여한 윤경애(화원강사) 씨는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감옥에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아직도 이러한 상황이 남아있는 게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위원장 이명남 목사)는 19일 오후5시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기도회에 참석한 민가협 어머니들, 박형규, 김동완 목사 등 150여명은 "새 정부 출범을 1주일 남겨 놓은 지금, 양심수 석방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리라는 언론보도에 실망스럽다"면서 △ 한총련 학생들의 전원 석방 △ 장기수의 전원 석방 △ 전면적인 사면복권 및 수배해제 단행

을 주장했다.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은 "우리 가족들은 인שו위 6번, 법무부 5번 등 갈 수 있는 곳은 모두 찾아다니며 전원석방을 호소하는 등 할 짓은 다했다"며 "그럼에도 양심수들의 선별 석방을 주장하는 언론도 있어 슬프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일보 19일자 사설 내용을 인용하면서 "조선일보를 저주한다. 전향제도가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 반인권적인 제도인지 생각이나 해보았나."고 되물었다.

민가협은 특별사면이 이뤄지는 날까지 매일 오후1시에 서울역광장에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방양군 씨 1백만원 벌금형 선고 보안관찰법 신고 불이행 이유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던 보안관찰 대상자 방양군(44) 씨가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국상종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분류된 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오랫동안 수형 생활을 하고 불구속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 피고인이 여울함을 호소하고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방양군 씨는 "국가보안법상의 혐의사실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억울하게 7년의 징역생활을 했다"며 "보안관찰법상의 신고 규정을 이행하게

되면 국가보안법 자체를 어긴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 씨는 96년 7월 9일 만기출소후 7일내 광주서부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보안관찰법 제6조)하지 않았으며 9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97년 11월 25일 검찰에 기소당해 98년 1월 17일 1년 6월의 구형을 받은 바 있다.

현재 방 씨는 지난 89년 서경원의원 방북사건으로 구속된 뒤 안기부와 검찰에 의해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것과 관련, 제정신청이 기각당해 피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본지 97년 12월 10일자 참조).

관노청, 이적단체 구성 조사

홍제동 대공분실서, 총 8명

18일 서울시경 소속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된 관악노동청년회(회장 윤순재, 관노청) 회원들이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오후 2시 관노청 회원들을 집견하고 나온 김진수 변호사는 "이들이 94년 3월 '관악지역노동자협의회'를 '관악노동청년회'로 명칭을 개칭하면서 회칙 중 목적부분을 일부 수정·보완한 내용과 관련하여 관노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적표현물 부분에 대해서도 94년 총회자료집과 강좌자료집 등에 포함된 내용을 두고 혐의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은희(29), 나정현(26) 씨가 18일 오전8시30분경 회사로 출근하는 길에 연행되어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이로써 연행자는 8명으로 늘어났다.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④

호주인권위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

곽노현(운영위원, 방송대 법학과 교수)

호주 인권 및 기하균등위원회는 모범적인 국민인권기구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호주 인권위에는 국민인권기구에 관심있는 세계 각국 방문조사단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호주 정부도 호주 인권위를 자랑거리로 알고 인권의 교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민인권기구 포럼"의 결성을 주도하고 그 운영비를 대고 있을 정도다. 호주 인권단체들의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가장 비판적인 이들조차 "인권위는 유엔이 그렇듯이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평가를 내리곤 했다. 호주 인권위는 특히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법원까지 가기에는 사소해 그냥 지나치곤 했던 각종 차별사건과 까다로운 재판절차로 말미암아 포기하곤 했던 차별사건들이 인권위를 통해 다뤄지면서 차별금지법제가 실효성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인권위의 주도 아래 차별금지법제 자체가 대폭 정비, 강화되었다. 나아가서 호주 인권위는 인권관련 소송에 선별적으로 참가함으로써 국제인권법에 대한 호주 법원의 관심과 수용 태세를 현저히 높여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규모 조사사업과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인권실태와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인 점도 호주 인권위의 성과로 꼽힌다.

차별금지법제 실효성 갖는 성과 한편 호주 인권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첫째, 호주 인권위의 준사법적 권한은 현재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조약 사안, 즉, 시민정치적 권리 위반 사안과 각종 차별금지법 위반 사안에만 미친다. 즉, 호주 인권위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조약 위반 사안에 대한 심결권을 갖고 있지 않다. 경제사회적 인권 침해 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출이나 정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

다. 이렇게 되면 일개 위원회의 결정에 정부가 휘둘리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인 듯하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인권을 인권의 구성요소로 파악하는 이상 이러한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한 경제사회적 권리를 인권으로 파악하는 이상 그 보장과 실현에 타협이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권리관정을 이행하는 데 반드시 정부의 특별한 예산지출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 보수연립정부의
위원회 개편안에
따르면 위원회의 조정
노력이 실패할 경우
사건은 위원회의 손을
떠나도록 되어있다.
그나마 위원회의
심결권마저 박탈될
위기상황인 것이다.**

사회경제적 인권을 인권위원회의 관찰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는 우리나라와 같이 오랫동안 성장 일변도의 경제제일주의에 매달려온 나라들에서 더욱 절실하다.

사회경제적 인권을 관찰대상으로 둘째, 호주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93년의 브랜디 판결에서 호주 대법원은 행정부의 일원인 위원회의 심결에 구속력을 부여한 당시의 위원회법을 위헌으로 판시하였다. 그 결과 위원회에서의 심결과정은 법적으로 볼 때 전적으로 낭비다. 피진정인이 불복할 경우 진정인은 법원에서 1심 절차부터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위

원회는 여전히 연간 수백건씩 배상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피진정인들 역시 대부분의 경우 심결 내용을 이행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 보수연립정부의 위원회 개편안에 따르면 위원회의 조정 노력이 실패할 경우 사건은 위원회의 손을 떠나도록 되어있다. 그나마 위원회의 심결권마저 박탈될 위기상황인 것이다.

셋째, 호주 인권위는 민간단체와 의견을 나누고 협력을 이끌어낼 공식적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인권위를 구성하는 6인의 커미셔너 임명과정에서 민간단체들이 공식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 또한 인권위와 민간단체들간의 협의도 임의적일 뿐, 정례화, 제도화된 것이 아니다.

인권위와 민간단체 협의의 일익 넷째, 호주 인권위는 예산을 전적으로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예산상의 독립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정부여당에 밀보일 경우 인원과 조직이 대폭 감소될 수 있다. 실제로 호주 인권위는 현재 대폭적인 예산감축으로 인해 대대적인 인원 및 조직 축소 작업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끝으로 위원회의 커미셔너 체제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호주 인권위원회 를 구성하는 6인 커미셔너 각자는 각각 근거법령을 달리하는 독립관청으로 독자적 관찰 영역을 갖는다. 예컨대, 장애차별 관련 사건이나 정책은 장애차별금지법에 의해 독립관청으로 임명되는 장애차별담당 커미셔너의 관찰에 속한다. 실제로 호주 인권위원회는 공동사무국을 두고있는 독립관청 6개가 가끔 공동 관심을 협의하는 구조로 보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 장점이 있지만 전체의 응집력이나 기魄력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다.

(다음주 마지막 회)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2월 21일(토)

제 106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균

교육부, '순진한 신입생' 포섭

각 대학 신입생에 유인물 배포 말짱

최근 교육부가 '대학 신입생들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제작, 이를 전국의 각 대학에서 배포하도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관련자료 2면>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실에서 작성한 문제의 유인물은 △운동권 학생이 되는 과정 △한총련의 실제 △좌익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형사처벌 △신입생들이 해야 할 일 등을 제시하면서, 한총련을 북한의 전위조직으로 주장하는 등 공안세력의 입장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다. 심지어 이 유인물은 대학사회의 전통적 문화인 MT, 동창회, 동아리 모임 등도 운동권 선배들이 신입

생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치밀한 사전 전략의 하나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신입생들에게 "폭넓은 공부와 사회견문을 주면하면서 '자본주의체제의 유지'만이 유일한 가치임을 선전하는 등 신입생들의 다양한 사상적 접근 노력을 불순시하는 모순된 논리를 드러내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공부만 하던 순진한 신입생들이 대학에 들어와 생활지도도 받지 못하다 보니 운동권 선배들에게 포섭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유인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부의 유인물에

대해 학생들이 반발하는 것은 물론, 교수와 대학당국에서도 탐탁치않게 여기는 모습이다. 서울대학교 대학본부 측은 유인물 처리에 난감을 표해오다 이를 단과대 행정실로 넘겼으며, 교수들 사이에도 유인물 배포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도 "교육부가 대학문화와 학생운동 전체를 일방적으로 왜곡·매도하고 있다"며 20일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총학생회는 성명서에서 "교육부의 주장을 비판하기 전에 그 반박과 비판의 무게보다 갑질이나 엄중히 저지의 잘못을 되새기고 반성한다"고 전제하면서, "모든 것을 파시즘적 흑백논리로 억압하려는 것은 분명 반지성적 죄악"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좌익합동수사본부와 함께 '96년 연세대 사태'를 들어 학생운동을 비난하는 비슷한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바 있다.

한권의 책... <'97 정보통신검열 백서>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엮음/ 1997

통신검열의 실태를 폭로하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통신인들의) 노력이 한 권의 자료집으로 묶였다. 이를하여 <'97 정보통신검열 백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행된 이 자료집에는 종종 검열의 논리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음란물'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백서팀은 일부 시민단체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성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에 대해 "음란물과 청소년 탈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음란물 규제를 명목으로 하는 일관적인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 뿐이며, 이러한 방법으로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등급제도 짚어보고 있다. 인터넷등급제는 크게 '민간에 의한 검열'과 '기술에 의한 검열'로 요약할 수 있는데, 넷스케이프사나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거대자본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인터넷등급제가 결국 기술에 의한 획일적인 검열로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사례를 들어 밝혀주고 있다.

'이용자 자기검열 인식 및 자기검열 현황 설문조사'는 '국가'와 '거대자본'이나 '민간단체'에 의해서 다양하게 주도되고 있는 검열이 결국 통신이용자들의 자기검열까지 불러오게 되는 실태를 고발한다.

오늘 오후 중요공원 집회

안기부 해체,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오늘 오후 2시 중요공원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주최로 '고용안정 쟁취, 안기부 해체,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대회'가 열린다.

민주노총, 민가협 등도 참가하는 이날 집회에선 정리하고 도입 등으로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는 생존권사수와 경제민주화 문제 등이 거론되며, '양심수 선별석방 방침'에 대한 규탄도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최근 안기부의 전신인 과거 중앙정보부가 대통령선거의 납치사건에 개입한 사실과 지난 대선에서 안기부내 북풍팀이 운영된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 안기부의 정치사찰과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안기부 해체 및 새로운 정보전담기구 구성이 촉구될 예정이다.

노점상·철거민 생존권투쟁 결의 다져

'98빈민대회... '빈민연합' 예고

경제파탄의 고통을 그대로 떠안고 있는 빈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노점상연합(의장 이필두)과 전국 철거민연합(의장 남경남)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공원에서 '98 전국빈민대회

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집회엔 약 1천명의 노점상과 철거민들이 모여 최근 경제난 속에 가장 되는 빈민들의 고통을 토로했으며, 앞으로 노점상과 철거민의 연대 속에 생존권쟁취투쟁을 벌여나갈 '빈민연합'의 출현을 예고했다.

연사로 참석한 오세철 연세대 교수는 "지금은 20을 살리고 80을 죽이는 세상"이라며 "80이 살기 위해선 민중생존권투쟁을 통해 이를 뒤엎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정리해 고시대에 빈민연합은 가장 큰 민중조직이 될 것"이라며 "빈민연합을 중심으로 강력한 연대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신입생들에게 보내는 글(교육부)

◎ 운동권 학생이 되는 과정
입학식을 전후하여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집회(새내기 배움터, OT, MT 등)나 고등학교 또는 동아리 선배들을 통해 대학생활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운동권 선배들은 사전에 계획된 치밀한 각본에 따라 은연중 우리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하여 소개함으로써 반미, 반정부 의식을 주입시킵니다. 또한 이들은 과모임, 학회, 동아리, 동창회, 향우회 등에 조직적으로 참가하여 신입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면서 식사, 술 등을 사주거나 야유회, MT 등을 함께 가는 방법으로 인간적인 친밀감을 쌓은 뒤 집회, 시위가 있을 때면 집회, 시위에 참가하는 것은 대학생의 특권이며, 국가와 민족을 위한 당연한 의무라고 부추기거나 신입생 여러분의 인정과 의리에 호소하며 여러분을 불법, 폭력시위의 현장으로 끌고 갑니다.

◎ 한총련의 실제

한총련은 사실상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핵심구성원 20-30여 명이 조직 지도부를 장악, 투쟁방향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조직운영을 좌지우지하는 '좌익혁명'의 전위조직입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의 이념 위에 반미 자주화, 고려연방제 통일 등을 정치투쟁 노선전략으로 삼아 학생운동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 바로 한총련입니다.

◎보람찬 대학생활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

대한민국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주권재민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적인 통치체제, 그리고 자본주의 제도와 시장경제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비록 빈부의 차로 인한 계층간의 갈등은 있을 수 있으나, 누구든지 노력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계층의 상승이 가능한 기회균등의 사회입니다. 자유민주주의제도와 자본주의제도에도 단점은 있지만 인류가 만들어낸 현존하는 제도 중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제도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도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소중히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대학 1, 2학년 때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폭넓게 공부하고 사회실상에 대한 견문을 넓히도록 합시다.

서울대 총학생회 반박 성명서

◎ 선배님들께 사죄드립니다. 못한 후배들의 잘못으로 이제는 민중과 함께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렸던 그 자랑스러운 역사의 훈장도 박탈당한 채, 은룡 북한의 사주를 받은 소수의 폭력, 좌경 분자들의 광란으로 한국 학생운동 전체가 매도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비판하기 이전에 그 반박과 비판의 무게보다 감질이나 엄중히 저희의 잘못을 되새기고 반성합니다. 비록 프락치이었을 망정 이석 씨를 구금, 구타하여 사망하게 하였던 비도덕적, 반인권적 행위를 저질렀음을 다시 무릎꿇고 반성합니다.

◎ 교육부는 현상을 자신들의 의도에 맞춰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터, MT, 동창회, 과모임, 동아리 모임, 이 모든 것이 교육부의 해석에 의하면 운동권들의 치밀한 사전 전략과 목표 속에서 철저하게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이러한 발언은 대학 문화 전체에 대한 몰이해이거나 대학문화 전체를 운동권들만의 것으로 매도하며 이를 매장하려는 의도의 발호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님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 교육부는 한총련을 '좌익혁명'의 전위조직'이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의 주장처럼 그 내부에 실제 집행에서의 비민주적인 요소와 과도한 시대인식 및 정세인식 등의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총련이 마치 북한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북한의 꼭두각시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한국 학생운동의 자성적인 자기 정정과 반성의 현재적인 움직임마저 이전에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며 자행했던 공안탄압의 논리로 짓밟는다면 그것은 명백히 한국 학생운동 전체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 교육부의 논리는 철저한 흑백논리를 전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북한 또는 공산주의를 흑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또는 자본주의를 백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한총련 및 학생운동의 주장을 그 표면만 가져오면서 이것이 백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흑의 주장과 동일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파시즘적 흑백논리로 억압하려는 것은 분명 반지성적 죄악입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2월 24일(화)

제 106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절절한 사연 이해한다”

앰네스티 대표단, 양심수 가족 만나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23일 국내 양심수 가족들과 자리를 같이 했다. 지난 21일 방한한 로리 문고벤(Rory Mungoven) 앰네스티 아태국장과 클레어 맥베이(Claire Mcvey) 한국담당관은 23일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간 가량 명동 향린교회에서 민가협 회원 6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앞서 문고벤 아태국장은 “어느 때보다도 양심수 문제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시기에 한국을 방문한 것이 뜻깊다”면서도 “인도네시아, 중국, 미얀마 등 아시아에서 부당한 구속이 이뤄지는 나라 가운데 한국이 포함돼 나쁜 인상을 주는 것이 무척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양심수 가운데 선별처방이 이뤄지더라도 민가협 회원끼리의 단결을 계속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기수 신인영, 박동운, 조상록 씨 등의 가족과 사노맹, 사민청, 범민련 등 조직사건 관련자 가족, 그리고 대학생 구속자의 가족들이 참석했으며, 양심수의 석방 외에 고문, 연좌제, 열악한 의료실태 개선을 위해서도 앰네스티가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동운(18년 구금) 씨의 동생 근홍 씨는 “두 달간 안기부에서 받은 고문은 죄의 유무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력을 시험하는 것이었다”며 “인간 자체를 파괴하는 고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장창호(중부지역담 사건, 6년 구금)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국보법 위반자라는 이유 때문에 머느리가 교사임용에서 탈락했다”는 사연을 전했고, 강순정(범민련, 96년 구속) 씨의 부인은

“70이 다 된 나이에 겨울이면 피를 쏟기도 하지만, 보석요청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밖에 일본에서 숙부를 만났다가 기밀누설(간첩) 혐의로 구속돼 수감중인 이화춘(7년 구금) 씨, 전향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20년째 구금중인 조상록 씨의 사연 등도 전달했다.

한편, 대선이 끝난지 열흘만인 지난해 12월 28일 ‘미래통신’이라는 발행물이 이적표현물이라는 이유로 구속된 백성기(35) 씨의 부인은 “수십 년씩 구금중인 장기수 분들 앞에서 남편의 석방을 감히 바라기가 어렵지만, 다만 남편이 이 땅의 마지막 양심수가 되도록 애써달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와 국내 양심수 가족들 간의 대규모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으로, 양측은 이날 만남이 국내 양심수 가족들의 절절한 사연을 전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국제앰네스티 방한

양심수 석방 촉구활동

김대중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 내 양심수 석방 및 인권문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앰네스티 대표단이 21일 내한했다.

앰네스티 아태국장 로리 문고벤 씨와 한국담당관 클레어 맥베이 씨로 구성된 대표단은 오는 26일까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진영과 정부 관계자, 양심수 가족 및 인권단체 관계자 등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대표단은 일정 첫날인 23일 조세영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과 민가협 양심수 가족, 외무부 관계자를 만났으며, 24일엔 통일원과 인권단체대표단, 한 국가자협회를 방문하고, 25일엔 민주노총 방문에 이어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소장과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와의 면담을 갖는다.

앰네스티 대표단은 또 24일 오전 10시 세실레스토랑에서 한국 내 양심수 석방 및 인권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노동자 경영참가 법제화 촉구

각계 지식인 123명 선언

유초하 교수, 최영도 변호사, 김승훈 신부, 이창복 전국연합 의장 등 각계 지식인 1백23명이 제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제차 촉구하고 나섰다.

학자, 변호사, 종교인, 사회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1백23명은 23일 ‘제벌 개혁을 촉구하는 123인 선언’을 통해 “제벌개혁은 제벌해제의 방향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단순한 소유·경영의 분리만이 아니라 공공적 소유의 확대와 노동자 경영참가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제벌총수의 재산출연과 경영책임, 상호지급보증제한, 빅딜이나 한계기업 정리를 통한 구조조정 등은 개혁의 핵심을 피하는 것”이라며 정치권과 정부 관료층을 비판하는 한편,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지 못하겠다는 제벌들의 오만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벌개혁에 대한 단호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주 인권시평은 쉽니다.

3월부터는 새로운 필진이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성희롱 승소판결이 남긴 과제 대법원, 성희롱 개념규정 회피 아쉬움

우리나라 최초의 '성희롱 소송'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서울대 우조교 사건에 대해 지난 10일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결론은 우조교의 성희롱 피해를 인정하는 것이었고, 이는 남성적 편견에 대한 건전한 상식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번 판결을 통해 직장내 성희롱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됐고, 성희롱의 범위도 신체접촉 뿐 아니라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까지 법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은 커다란 의의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 역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여성·법조계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서울대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는 23일 우조교 사건에 대한 승소촉박연과 함께 판결 평석회를 가짐으로써 이번 판결의 미비점들을 짚어냈다.

이은영 외국어대 교수는 △성희롱을 노동문제로 인식하지 않은 점 △성희롱의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성희롱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점 △성희롱에서 누가 입증 책임을 지는 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국가와 서울대 총장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다.

심영희 한양대 교수도 "성희롱은 권력관계가 지속되는 거의 모든 곳에서 발견되므로 고용관계에서 발견되는 직장내 성희롱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또 "대법원이 구체적인 개념규정을 피하고 고용관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빈발할 성희롱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성희롱 방지를 위해 직장내 성희롱을 남녀고용평등법에 포함시키는 문제와 사법적 감시, 장기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분류를 깨나가는 것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주요 공판 안내

- ▶ 24일 (화)
 - 홍성이 (국보법 찬양·고무등) 서울고법 404호, 오전 10시, 합의5부, 선고
 - 안중수 외9/최한욱/이준구 (국보법 찬양·고무등) 서울고법 403호, 오전 10시, 합의4부, 선고
 - 박종대 (국보법 간첩등) 서울고법 403호, 오전 11시, 합의4부, 속결
 - 유병서 (국보법 찬양·고무등) 서울고법 303호, 오전 10시, 합의3부, 선고
- ▶ 25일 (수)
 - 신승우 (국보법) 서울지법 418호, 오전 10시, 합의1부, 선고
- ▶ 26일 (목)
 - 김정훈 (국보법 찬양·고무등) 서울고법 404호, 오전 10시, 합의5부, 선고
 - 김남식 (국보법 찬양·고무등) 서울지법 319호, 오전 10시, 합의23부, 선고

주/간/인/권/호/름

(98년 2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 16일 (월)
〈레드헌트〉, 베를린영화제에서 상영/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의료체제에 관한 회의'에서 국제 의료·보건 전문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아시아 경제위기로 보건 의료 체계가 악화"

◆ 17일 (화)
울산 공단지역 초등학생들이 다른 지역 학생들에 비해 납 소비등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을 체내 축적하고 있어/김대중 당선자 진영, 사면·복권 대상자에 96년 한총련 사건관련 대학생 1백50명, 15년 이상 복역한 미전향 장기수 30명 사면 검토중/군축운동단체인 '살기좋은 세계를 위한 회의' 보고서, 미국이 콜롬비아·우간다·이집트·터키 등 인권침해국에 무기수출하고 있다고 밝혀

◆ 18일 (수)
정대협 수요집회 3백회/노동부, 1백 명 이상을 정리해고할 경우 사전신고 의무화 추진/서울지검 형사1부, 〈천국의 신화〉 작가 이현세 씨를 미성년자보호법 위반혐의 (불량판화 제작)로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대법원,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때 최소 2년 동안 자신의 근무지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은 맡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참여연대, 서초구 법원 앞에서 '의정부 수뢰법관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촉구를 위한 집회' 개최

◆ 19일 (목)
국민회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 조항 폐지 방침/김대중 당선자, 73년 발생한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한국노총, '노동자후보단'을 만들어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참여하기로 공식결의

◆ 20일 (금)
베를린영화제 관계자들, 한국정부측에 〈레드헌트〉 등 중요한 시대적 주제를 다룬 영화들에 대한 검열을 중지하라고 촉구/대법원, 의정부지원 판사와 변호사간의 급품수수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현직 판사 9명이 변호사한테서 최고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거나 명절 떡값조로 40-3백만 원을 받은 사실 확인했다며 징계 방침/청주여자고교도소 재소자 박성미 씨,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분신자살하려다 얼굴과 손 등에 2도 화상 입고 입원치료중/교육부, 좌경의식화를 막는다는 취지로 각 대학 신입생들에게 재학생들과의 모임에 참석하지 말하는 편지 30만 여부를 일선대학에 배포한 사실 드러나/대한변호사협회, 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원주지방국도관리청등, 영월 동강댐 예정지 골재채취 공사를 다시 추진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 반발

◆ 22일 (일)
전교조, 시·군·구 교육청의 통폐합 및 폐지추진등 올해 사업계획 확정/노동부 발표, 1월 한 달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한 2만714명 중 정리해고로 인한 실직자는 18.7%인 3천8백78명 (지난해 비교 7.9배 증가)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2월 25일(수)

제 106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인권개혁, 초기부터 단호하게"

AI, 양심수 석방·국보법 개정 최우선

한국을 방문중인 국제엠네스티(AI) 대표단이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수 석방을 비롯한 인권개혁조치를 김대중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24일 오전 10시 세실레스토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로리 먼고벤 AI 아태국장 "인권옹호 입장을 밝힌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지만, 초기부터 단호하게 인권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기대권세력의 저항으로 개혁의지가 희석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심각한 경제위기가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인권보장계획이 국가재건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AI가 김대중 신임 대통령에게 요청한 인권과제는 △양심수 석방 및 국가보안법 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사형제도 폐지 △안기부 개혁 △과거 및 현재의 인권침해사건 조사 △인권교육 증진 △고문 및 가혹행위 근절 △수형환경 개선 △노동조합의 권리 보장 △국제인권조약의 준수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등이며, 특히 양심수 석방 및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기했다.

먼고벤 아태국장은 "양심수 석방문제는 새 정부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척도"라며 "선별석방이 아니라 모든 양심수를 예외없이 전원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폭력을 사용한 정치범이라 하더라도 공정한 사법절차를 거쳐야 하며,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구금중인 정치범들은 전원 석방 후 책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수와 사상전향제도에 관련해, "양심 때문에 구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은 기본이고, 사상을 바꿀 것을 강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장기수들의 석방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관련해, AI는 △'국가기밀'과 '국가안보' 조항 △제7조의 고무찬양 조항 등을 예로들어, 모호한 개념규정으로 인해 자의적인 구속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고벤 아태국장은 "국가안보 문제는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했느냐'에 관계되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은 전폭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한총련 전원석방 촉구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양심수 석방·사면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24일 경실련 등 시민·사회·종교단체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새정부에 학생운동 관련자들의 전원석방 및 수배해제를 촉구했다.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등 시민

민사회단체들은 '대학가능회복과 학생운동 활성화를 위한 공동성명'에서 "학생운동이 때로는 과격분자로 매도되기도 했지만 대체로 사회에 꼭 필요한 문제제기를 하는 선각자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며 "새정부가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을 철회하고 투옥학생을 전원 석방하며 수배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한총련의 학생대표채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한총련 가입탈퇴 여부에 따라 중형과 석방을 가리는 등 중세종교재판식 판결을 시행시키고 있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복권과의 형평성을 생각할 때도 석방, 사면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학생운동이 정부의 감청일변도의 공권력 행사로 서서히 질식해 가고 있다"며 "각종 사회참여 활동 및 자치활동 위축으로 오늘의 대학현실에 심각한 위기위식을 느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최명아 씨 운명

지난 11일 과로로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졌던 민주노총 조지1부장 최명아 씨가 24일 운명했다. 장례는 오는 26일 민주노총장으로 치러진다.

고 최대림 씨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13일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분신·사망한 대우조선 노동자 최대림 씨의 장례가 오늘 거행됩니다.

발인식: 오전 7시 40분 거제 옥포조선소
영결식: 오전 8시 30분 사내 종합운동장
하관식: 오후 양산 솔밭산공원
연락처: 대우조선 노조-(0558)-680-6602

<기획연재④>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사상 전향 강요는 반인권

남파간첩 등 공산주의 수형자들도 그런 은사를 받고 싶으면 '나는 공산주의 사상을 버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전향서 하나쯤은 최소한 써내야만 국가로서도 그들의 사면 여부를 검토할 명분과 체면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 2월 19일자 사설

양심 때문에 구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기본이고, 사상을 바꿀 것을 강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국제엠네스티 2월 24일 기자회견

김대중 씨가 오늘 15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그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그의 의지를 곧 있을 양심수 석방으로 표현하게 될 것이다. 국내의 인권단체들은 이번에 그가 단행할 양심수 특사의 폭과 내용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부터 인권단체와 양심수 가족들은 '양심수의 전원 석방'을 절박하게 외쳐왔다. 하지만, 최근 소폭의 선별적인 양심수 석방이 접쳐지고 있고, 그와 반대의 입장도 위에 든 조선일보 사설처럼 공공연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번 양심수의 석방이 전향서를 쓴 일부의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이는 다시 우리의 인권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우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구태여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조약들의 조항들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인간의 사상을 포함하는 양심은 국가권력도 간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권력보다 앞서서 인권 그 양심의 문제를 구속된 이들 중에 92년 14대 대선 직전 터졌던 남한 최대의 지하간첩단이라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관련자들이 있다. 당시 북한 당의 권력서열 22위라는 이선실 할머니 간첩의 지도 하에 민중당의 대표였던

김낙중 씨와 중심간부였던 손병선 씨를 포섭하고, 황인오 씨 형제를 중심으로 중부지역당을 만들었다는 사건, 관련자만도 수백 명이고, 구속자만도 60명이 넘었던 그 대규모 사건으로 인해 김대중 씨는 다시금 대통령 선거에서 북풍의 고개를 넘지 못하고 좌절을 맞보아야 했다.

이 사건의 대표적인 인물인 김낙중(67) 씨에 대해 국제엠네스티는 "북한 사람과 만났다거나, 통일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이 그의 구속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고, 그와 비슷한 이유로 손병선(59), 황인오(41), 황인옥(31) 씨 등을 양심수로 선정했다.

동비박산남 손병선 씨 가정 이 거대한 간첩단 사건에 대해 당시 안기부는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하지 못한 채 불법수사로 일관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영장제시나 피의사실을

일지 못한 채 강제연행되었고, 잠안제 우기와 집단구타 등의 고문을 당했으며, 변호인 접견과 가족의 면회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안기부는 가족들마저 연행해 위협하고, 압수수색영장없이 가택수사를 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대선을 앞두고 급속도로 부풀려졌다는 인상을 남기게 되며, 주요 인물들은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손 씨의 경우는 이 사건으로 가정이 붕괴되자고 말했다. 그의 장녀는 구속되었고, 처는 수배 중에 담도암을 얻어 93년 8월 사망했으며, 그의 부모는 연이어 사망했고, 뇌성마비장애인인 장남은 장애인 수용시설에 수용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런 경우는 94년에 조직을 제 만들기도 전에 구속된 구국전위 사건에도 그대로 재연되었다. 또한, 김영삼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조직 사건의 대부분도 구체적인 물증없이 조직되었다는 의혹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건의 연루자들도 이번 새 정부의 양심수 석방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인권의 요구인 것이다. 이 요구에 새 대통령이 얼마나 충실할지 주목된다.

한권의 책... 『외로운 저항』

천주교 제주교구 젊은사제 모임 지음/ 빛두레 펴냄 /190쪽/6천원(1백권 이상 주문시 4천8백 원)

'조작간첩'과 한 사제의 진실을 향한 투쟁! 분단과 냉전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처참하게 망가져버린 한 인생의 이야기가 소설의 형식을 빌어 다시 우리 앞에 찾아왔다.

천주교 제주교구의 젊은 신부들이 정리한 소설 『외로운 저항』은 지난 84년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된 이래 67일간의 불법 구금과 고문 끝에 간첩으로 조작된 이장형 씨와 그의 무죄석방운동을 이끌어낸 남승택 신부의 이야기를 그린 실명소설이다.

90년 남 신부와 이장형 씨의 만남으로부터 이장형 씨 석방모임의 결성,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이장형 씨 석방운동을 둘러싼 일련의 역사적 사실들과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간적 고뇌가 이 한편의 소설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책을 펴낸 제주교구의 임문철 신부는 이렇게 말한다. "이장형은 정의를 가장한 부당한 법체계가 한 인간과 그 가정을 얼마나 철저히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시대의 표징이다. 여기에 기록이 있다. 모두가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해 버린 간첩을 피와 살이 있는 한 인간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한 목자의 고뇌와 노고가 있다"고.

문의:064-33-5525(임문철 신부), 02-3672-0253(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2월 26일(목) 제 107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경제·사회적 권리 후퇴 예상”

인권활동가들, 새 정부 인권개혁 전망

과거 인권피해자였던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취임함에 따라, 그동안 인권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인권단체들이 '새 정부와 어떠한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5일 <인권하루소식>이 11개 인권·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새 정부의 인권개혁에 대한 전망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최우선의 인권개혁과제 등에 대해 응답을 벌인 결과에 따르면, 인권단체들 내에선 새 정부의 인권개혁을 전망하는 입장에 따라 '협력' 또는 '비판'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르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김형태 변호사 등 새 정부의 인권개선에 기대를 건다고 답변한 사람들은 "통치자가 과거 인권피해자였고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안에 따라 협력과 견제를 적절히 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성은 목사는 "새 정부가 인권문제를 풀어나가는 전제 아래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종서 교수(배제대)는 "경제문제와 IMF체제로 인해 인권이 소홀히 취급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새 정부에서의 인권개선은 희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김학철 추모사업연대회의 사무국장 등도 "노동자와 민중에 대해 고통이 일반적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민중생존권 등 경제사회적 인권이 오히려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러한 입장 속에 김종서 교수는 "과거 정부와의 관계에서 민간단체들의 투쟁이 잘못된 것이 아닌 한 선회할 필요가 없으며, 협력을

앞세우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처장은 "대안단체는 초기부터 비판적 개입을, 대중조직은 실업대책과 사회보장권 수호를 위한 저항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상·표현의 자유 등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해선 응답자들 모두가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폐조치는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뤘고, 이 또한 민간단체와 국민들이 얼마나 싸우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었다.

한편 응답자들은 각기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최우선적 인권과제를 제시했

는데, 그중 다수는 악법 폐쇄와 인권침해 기구 개혁 등 법·제도적 과제를 첫손에 꼽았다. 더불어 과거 인권침해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대훈 씨는 "경제사회적 인권의 후퇴가 예상되는 속에, 노동자·서민들이 경제개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설문에는 강인영 인권지기 사무국장, 김성은 목사(교남반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총무), 김용현 목사(KNCC 인권사회국 간사), 김종서 교수(배제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학철 추모사업연대회의 사무국장, 김해성 목사(성남 외국인노동자의집 회장), 김형태 변호사(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혜준 한국영화연구소 기획실장, 이기욱 변호사(전국연합 인권위원장),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처장, 이석태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참여했다.

만화 사랑방



이동수

<기획연재⑤-끝>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창살없는 감옥생활, 수배·미복권자'

양심수는 감옥에만 있는 게 아니다. 수사기관의 검거망을 피해 이곳 저곳을 옮겨다니는 수배자들. 이미 사회로 복귀한 뒤에도 장기간 시민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미복권자들. 그들 역시 '창살없는 감옥'에 살고 있는 양심수들이다.

국민 아닌 국민, 미복권자

미복권자는 형 선고시 병과된 자격정지로 인해 출소 뒤에도 시민권을 제한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만기출소 또는 사면조치로 석방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선거에 참여할 수 없고, 각종 국가자격시험을 치를 수도 없다. 해외여행은 물론, 국가기관에 봉직할 기회 역시 박탈당한다.

지난 1월 24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이 1천6백여 명의 미복권자 명단을 법무부에 제출했지만, 이는 신고받은 숫자에 불과할 뿐, 현재 전체적인 미복권자의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올해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한 고원(35) 씨는 오는 99년 10월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92년 사노맹 호남위원장이란 이유로 구속된 뒤 95년 10월 만기출소했지만, 출소와 동시에 자격정지 기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고 씨는 '미복권자가 겪는 고통은 사회적 운신의 폭이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현재 학업에 전념하고는 있지만, 자격정지가 끝날 때까지 이렇다할 공공연구소에서 일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또한 고 씨는 학교 안에서도 '미복권자'라는 꼬리표를 실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에겐 조교가 될 자격이 없다. 실력이 모자라서, 성품이 모나서가 아니라, 단지 미복권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해당하는 서울대 조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른바 '남민전' 사건에 연루됐던 이수일(46) 씨도 미복권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88년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93년 잔형면제 조치를 받았다. 그

러나, 그에게 부과되었던 자격정지 기간은 무려 15년. 앞으로도 10년간 그는 시민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전직 교사였던 이수일 씨는 복직은커녕, 정상적인 사회활동과 취업마저 어렵다고 한다.

나아가 고원 씨는 "자격정지가 풀린다 해도 실질적인 권리침해는 계속된다"고 말한다. 보안관찰대상자라는 또 하나의 꼬리표 때문이다. 실제 석방된 양심수 가운데 다수가 보안관찰대상자로서 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는

데, 그 규모는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양심의 대가로 시작된 수배생활 수배자들이 겪는 고통은 미복권자보다 더할 수밖에 없다. "영안실에서 잘 때가 제일 편안했다"는 박응용(한국타이어 해고자) 씨의 말은 그 고통을 단적으로 표현해준다.

최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접수한 수배자 명단 가운데 대다수는 한총련 대학생들이었다. 그들이 수배중인 것은 다름아니라 "한총련을 미탈퇴한 죄" 때문이다. 지난해 한총련에 대한 대대적 검거선봉 속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한총련을 탈퇴했지만, 이들은 "양심을 버릴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스런 수배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행사와 동정

■ 민주노총 고 최명아 씨 발인 및 장례

- 때: 26일(목) 오전 5시30분
- 장례미사: 중랑구 천주교 목동교회 오전 7시
- 하관식: 마석 모란공원 오전 10시
-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765-2010)

■ 양심수의 자녀들과 함께 하는 목요집회 - "아빠, 보고 싶어요!"

- 때: 26일(목) 오후 2시-3시 · 곳: 탑골공원 앞
- 순서: 노래-가극단(금강)/ 양심수 자녀들의 소원 나누기/ 이회춘, 김하기, 장장호 씨 자녀들의 편지 낭송/ 양심수 자녀들의 합창
- 주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763-2606)

■ 영광원전 핵폐기물 저장고 관련 영광군민 의식조사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 때: 27일(금) 오전 9시30분 · 곳: 가톨릭센터 7층 703호
- 주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문의: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227-6008)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제4차 정기총회 및 토론회

- 때: 28일(토) 오후 2시-7시 · 곳: 연세대 상경관 B120
- 내용: 1부-정기총회/ 2부-IMF관리체제와 DJ정권하에서의 노동운동 방향(김세균 소장), 민주노총 1기평가 및 2기 전망과 과제(명가팀)
- 주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874-2933)

■ '제주 4·3 명예회복의 해' 선포식

- 때: 3월 1일(일) 오후 2시 ·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주최: 제주 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

■ 고용안정과 사회적 평등을 향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

- 때: 3월 8일(일) 오후 2시-4시 · 곳: 여의도 주택은행 강당
- 주최: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869-1347), 한국노총, 민주노총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 인천지역: 3월 4일(수) 오후 6시/ 부평구청 대회의실
- 마산지역: 3월 5일(목) 오후 6시30분/ 청소년사회복지회관
- 광주지역: 3월 10일(화) 오후 6시30분/ YMCA대강당
- 부산지역: 3월 14일(토) 오후 2시/ 부산여광장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2월 27일(금)

제 107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불법체류 단속, 노사 모두 고통 3D업종 구인난...4월 집중단속 연기해야

외국인노동자들이 갈수록 비량으로 내몰리고 있다. IMF회파가 불어닥친 이후 일자리도 없고 임금도 떼인 외국인노동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4월부터는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집중적으로 벌어질 예정이어서 외국인노동자들은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3월말까지 출국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벌금을 물리지 않되, 그 이후부터는 집중적으로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1월 1만 명 가량의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등, 3월말까지 4-5만 명 정도가 출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20만 명 이상의 불법체류자들은 출국하지 않을 전망이다.

단속에 걸릴 경우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고 강제출국 당해야 하는 위험부담을 안고서도 이들이 한국을 떠나지 않으려는 이유는 △한국에 올 때 진 빚(8백-1천만 원 가량)을 갚지 못했거나 △산재보상 또는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해성 목사(성남 외국인노동자 의집 소장)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는 출국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마지막 선처를 베푸는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산재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그나마 외국인노동자들이 맺힌 한을 풀고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불법체류자 집중단속 방침은 영세기업주들의 반발도 사고

있다. 당초 정부의 의도는 불법체류자들이 빠져나간 일자리를 국내 노동자로 채움으로써 고용문제를 해소해 보겠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이 주로 취업해 온 3D업종에서는 단속이 오히려 '구인난'만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소기업연합회의 허태곤 대표는 "내국인들은 영세기업에 오려고 하지 않아 3D업종에는 여전히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해성 목사는 "한국인들이 먹고살만 하거나 국민성이 게을러서 3D업종을

기피하는 게 아니라, 5인 이하 사업장엔 산재보상이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다치고도 손해만 보는 자리에 왜 가겠냐"며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산재보상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한국인들이 일할 수 있는 풍토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월부터 집중단속이 시작될 경우 불법체류자 뿐 아니라 이들을 고용한 기업주들 역시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기업주들은 '벌금납부'와 '인력난' 가운데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허 대표는 "영세사업주들을 위해서는 단속보다 양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미 불법체류자 합법화를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현장스케치> 민가협 목요집회

"아빠, 보고 싶어요!"

한솔(6)이는 부모(김성식, 문순덕·95년 구속)가 모두 하루아침에 감옥에 끌려간 탓에 고아아닌 고아가 되어 엄마의 후배에게 보살핌을 받고 있다. 병지(7)는 태어나기 3일전 아버지가 감옥에 끌려가 지금까지 아빠 품에 한번 안겨보지 못했으며, 한 달에 한 번 유리 칸막이로 가로막힌 면회실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있다.

26일 탑골공원에서 열린 2백18회 민가협 목요집회에는 2살에서 11살까지 20여명의 양심수 자녀들이 함께 모여 그들의 엄마, 아빠, 할아버지의 석방을 호소했다. 일간 엄마 대신 동생들을 돌보고 있는 하나(11)는 "막내 미르가 올 봄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꼭 아빠(이회춘·96년 구속) 손잡고 가게 해달라고..."가 기도한다"고 말했다. '글쓰러 갔다'는 아빠(김가희·96년 구속)를 기다리는 민주(7)는 "무슨 글을 그렇게 오래 쓰냐"며 "이젠 글 그만 쓰고 집에 왔음 좋겠다"고 말해 듣는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외할아버지(유라진, 94년 구속)가 통일하려고 일하다가 감옥에 갔다'는 체주이(12) 어린이는 "이번에는 꼭 나오신다"고 단호히 말하기도 했다.

임기관 민가협 상임의장은 "양심수의 자녀들은 결손가정 아닌 결손가정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서 "천진난만한 이 아이들의 품에 하루빨리 그들의 부모를 돌려주는 것이 김대중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빠와 함께 소풍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는 아이들이 사진으로만 만났던 아빠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들고서 '아빠와 크레파스'를 부르자, 참석자들은 "490여명 양심수를 전원석방하라"는 외침으로 화답했다.

구독료 납부 바립니다.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지로번호 7618848

구치소 노역자 폭행당해 숨져 검찰, 사인규명 조사 착수

벌금형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노역을 하던 재소자가 병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져 교도소 내 폭행에 따른 사건인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1월말 성동구치소에서 노역을 하던 박순중(49,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씨가 갑자기 쓰러져 2월 4일 강남시립병원으로 옮겨진 후 치료를 받았으나 18일 숨졌다.

23일 시신을 부검한 결과, 박 씨는 갈비뼈 3개가 부러지고 대뇌에서 출혈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CT촬영 사진에도 뇌출혈 흔적이 나타났다. 이에따라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교도관의 가혹행위나 동료 재소자들의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사인규명에 나섰다.

부검을 한 황적준(고려대 법의학) 박사는 "박 씨의 직접사인이 뇌경막하혈증에 따른 폐렴이며 뇌경막하혈증은 외상에 의해 찾아온다"고 밝혀 폭행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성동구치소 사건 은폐 기도

한편 성동구치소측이 지난 4일 전주교 서울대교구 교정사목위원회에 요청하여 박 씨의 남은 노역기간에 대해 하루 1만원씩 모두 27만원의 노역비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면서, 박 씨를 만기출소자로 꾸며 병영으로 옮긴 사실은 소속이 사건을 은폐하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려오고 있다. 또 구치소측은 24, 25일 교정사목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노역비를 온라인으로 입금한 사실을 숨겨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 씨의 유족들은 "박 씨가 구치소에 가기 전에는 걸음도 잘 걷고 언어장애만 조금 있었다"며 "부검결과로 볼 때 구치소 내에서 심하게 구타를 당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며, 구치소측에 진상규명과 보상을 요구한 채 시신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숨진 박 씨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못해 지난

해 12월 23일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노역을 하다 이같은 변을 당했다. 현재 박 씨의 시신은 강남시립병원 냉동실에 안치되어 있다.

북한 어린이에게 사랑을

청년정보문화센터(소장 임종석)는 26일 "북한어린이들의 영양식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2일 나진·선봉지구의 유치원 및 탁아소에 1차로 성금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516-1542

이달의 인권영화

스위트 컨트리

감독: 미카엘 카코아니스/ 제작: 그리스, 1986년

인권에 대해 얘기할 수 있을 때 우리 '인권'을 지켜야 한다. 사회가 불안한 나라에서 '개인의 인권'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특히 정권의 격변기에는 더욱 더 하다. 80년 쿠데타에 의한 5공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상청교육대'라는 명분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놓고, 드러내서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표면적으로 조직폭력배, 불량배들이 다 끌려가 치안이 좋아졌다고 일반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지만 그 속에는 반정부 지식인을 겨냥한 마녀사냥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회적으로 반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그들의 인권이 마구 짓밟혀도 된다는 원칙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행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이들은 무참히 정권의 폭력을 맞아야 했다.

영화 <스위트 컨트리 Sweet Country>는 이렇게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을 다룬 '인권'에 관한 영화이다. 이 영화는 70년대 칠레의 자유주의 정권이 군사 쿠데타로 무너진 후 당시 일어난 은갓 사건들과 함께 군부 세력의 포악성과 집단적 폭행을 폭로, 비판하고 있다.

자유주의 정권이 군사독재정권으로 바뀌면서 수난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핵심 못지 않게 그 정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이런 경우가 '에바'의 처지다. 당시 에바는 칠레 대통령 부인의 비서였다는 이유로 개인의 추억마저 불태워야 했고, 경찰로부터 무단 침입과 은근한 성적 모욕을 당해야 했다.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 트럭에 실려 어딘가 알 수 없는 경기장으로 끌려가 '팝시스트의 계집'이라는 멸시를 받았다. 군인들이 뺨 돌려 있는 경기장 한 가운데 발가벗겨진 채로 성적 모욕을 집단적으로 받아야 했다.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지만 그 사이에 '에바'의 불리한 입장을 이용한 경찰의 강요된 성관계는 권력의 폭력성으로 집요하게 묘사된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한 개인의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다. '에바'가 마지막 탈출을 시도한 대사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죽음뿐이었다.

독재권력 앞에서 에바는 자기변론조차 할 수 없는 나약한 민중의 모습 그 자체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혼란스런 시대일수록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남성보다는 여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캐롤라인 리치즈가 당시의 자료에 바탕을 두고 쓴 유명한 소설 <스위트 컨트리>를 그리스의 영화감독 미카엘 카코아니스가 영화로 만든 것이다. 당시의 끔찍했던 사건을 겪은 여성들이 자원하여 무료로 출연하고 있다.

자유라는 것이 어느 정도 보장받을 때 우리는 '인권'을 겨우 이야기한다. 배를 채우는 것이 이상목표일 때 '인권'은 어디에도 없다. '인권'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길들여지는 것인지 모른다.

-민주인론운동협의회 영화반 '영상세대' 전미희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2월 28일(토)

제 107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유엔, '인권운동가 선언' 채택 난항

'국내법 구속' 조항 등 쟁점 미해결

세계 각국의 인권운동가들(Human Rights Defenders)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노력이 난항을 겪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고문, 실종, 재판 없는 살인 등의 인권침해로 고통받고 있는 각국의 인권운동가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86년부터 '인권운동가 선언' 채택을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 이를 검토·논의해 왔지만, 몇몇 정부대표단의 반대에 부딪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실무그룹 내에 선 △국내법의 지위 △민간기구에 대한 해외 재정지원 △재판절차에 참여할 권리 △인권운동가의 의무와 책임 문제 등이 미타결사항으로 남아 있는데, 쿠바·중국 등 일부 강경국가들은 '인권운동가가 국내법과 규제 아래 활동해야 한다'는 조항을 선언문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등 네 가지 쟁점을 일괄타결하지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민간기구(NGO)측은 "억압체제 아래에 있는 인권운동가들은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국내법을 국제기준에 맞추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구가 해외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자'는 강경국들의 입장 역시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형편이다.

캐나다의 인권단체 [Human Rights Internet]은 "그동안 민간기구들과 함께 강력한 '선언'의 채택을 지지해왔던 정부들도 중도 포기하거나 올해 안에 선언문을 채택하기 위해 타협해 버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 단체는 "민간기구의 입력이 작을 경우, 정부들이 '선언'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늦기 전에 전세계의 민간기구들이 활발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23일부터 3월 5일까지 98년 실무그룹 회기가 진행중인데, 올해가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이라는 상징적 압력과 실무그룹의 위임기간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 속에 '선언'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핵폐기물 저장고 건설 영광주민 대다수 반대"

광주 정평위, 영광군민 의식조사

영광원전 핵폐기물 저장고 건설에 대해, 영광군민의 절반 이상이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는 전남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영광군민 4백 명을 상대로 의식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3.8%)이 영광원전의 '제2영구 저장창고' 건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반면 찬성하는 사람은 9.6%로 매우 적게 나타났고, 저장창고를 건설한다는 사실자체를 모르거나 유보적 입장인 사람도 3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2영구 저장창고' 건설이 '중·저준위 폐기물 임시저장용'이라는 영광원전측 해명에 대해서도 이를 신뢰하는 사람은 불과 8.0%인 반면, "핵폐기물을 영구저장하려는 시도로 본다"는 응답자가 55.3%, "입장유보" 또는 "모르겠다"는 응답은 36.8%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평위는 "핵연료의 생산과 에너지 생산, 폐기물 처분 등으로 이어지는 핵발전소의 전력생산과정이 인간 자신으로부터 엄격하게 격리되는 반생명적 산업"이라며 "핵발전소가 더 이상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핵폐기물 저장 때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95년 통상산업부의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06년까지 13개소, 2010년까지 6개소의 핵발전소 건설계획이 잡혀있다.

허인회 씨 유죄 확정

대법원, 불고지 사실 인정

간첩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던 허인회(34·전 고려대 총학생회장)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 대해, 허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씨는 지난 95년 11월 이른바 '부여 간첩' 김동식을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김동식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피고의 알리바이가 성립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었다.

<인권하루소식> 98년 2월분 총목차 (1053-1072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053	2/3	1	인권협 대표단, 김대중 당선자 면담에서 "인권을 국정지표로 할 것"등 요청/COBP, 3월 둘째주 경찰폭력 반대 캠페인 제안
		2	에바다 사태 4백32일 경과, 재단측 버티기·평택시 유착 시비/주간인권호름 (1월 27일-2월 1일)
		3	<인권시평> 긴 호흡의 인권운동(장호순 순천향대 교수)
1054	2/4	1	대인지뢰금지 캠페인 돌입, 조디 윌리엄스 방한/<표> 92-97년 지뢰로 인한 사상자 현황
		2	조디윌리엄스·스티븐 구스 발언요지- "대인지뢰금지,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영광주민 60일째 침묵시위, 원전 5·6호기 건설문제 마찰/세계고문방지기구, 진관 스님 석방 촉구/'자본'대 '반자본', 스위스에서 각각 국제행사
1055	2/5	1	25년전 지뢰사고, 조만선 씨의 비극/<만화사랑방> 대인지뢰
		2	민주노총 지도부 국민회의 농성 돌입- 사회단체, 정리해고 반대 한 목소리/팔레스타인 구속자, 감옥서 하루만에 사망
1056	2/6	1	<기획연재>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① 한총련 구속자 3백여 명 달해/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석방, 서부지원 행사/단독 금보석 결정
		2	<인터뷰> 조재국 목사(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조디 윌리엄스 방한이 남긴 것/구태 못 벗은 안기부, 김형찬 씨 인권피해 증언 저지 기도
1057	2/7	1	엠네스티, 장기수 신인영 씨 석방 촉구·한국 교도소 의료실태 개선도 요청/감사원, 에바다 비리 특감- 평택시·재단간 유착의혹 초점/엠네스티, "한국엔 양심수 더 있다"/민가협·전국연합, 양심수 전원석방 캠페인 돌입
		2	<기획연재>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② 분단의 비극 '납과공작원', 초장기수 23명/<새로운 책>... '대인지뢰금지, 현실과 과제'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위임/도서출판 민중사)
1058	2/10	1	법원 판결 무색, 불법검문 여전/ 김종구 법무, "양심수 기준 정한 것 없다"
		2	전교조, 합법화 따른 대국민담화 발표/철도해고노동자, 국민회의 당사 농성/택시노조, 권오영 씨 분신 관련 집회/주간인권호름 (2월 2일-2월 8일)
1059	2/11	1	'유서대필' 감정 김영영 씨, 사기 혐의로 또 구속/전주 사회단체, 재소자 인권침해 항의하며 전주 교도소 농성/대구지역 인권·사회단체, "선별 사면 수용 못한다"
		2	<기획연재>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③ 규명 안된 '조작' 의혹, 간첩 사건 연루자들/ 일본 전국회의, 재일동포 및 일본관련 양심수 석방 탄원
1060	2/12	1	전주교도소, 비전향장기수 면회약속 파기/조성봉 <레드 헌트> 감독 체포, 베를린영화제 참가 불투명/<만화사랑방> 유서대필사건과 사기꾼 감정사
		2	'유서대필 사건' 언론도 재수사·재심 요구
1061	2/13	1	영등포구치소장, 재소자 가혹행위 혐의로 고발 당해/조성봉 감독 체포 관련, 베를린영화제 참석자들 항의 움직임/전주교도소, 목사·신부 등 폭행/헌병대 가혹수사, 2천만원 배상 판결
		2	노동계·학계 진보인사들, "노사정 재협상 해야 한다"/민변, 당선자에 '인권개혁 제안서' 전달/우토로후원회 일본대사관 앞 항의시위/전농동 철거민 대거 연행
		3	<특집>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④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관계(곽노현 교수)
1062	2/14	1	경찰·건설회사 손발 최척, 전농동 철거민 무더기 연행 후 숙소감제 철거/조성봉 감독 구속영장 기각/대우조선 노동자 최대림 씨, 정리해고 항의 분신사망
		2	<요약>인권관련 개혁제안서(민변 제출)- 새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인권하루소식> 98년 2월분 총목차 (1053-1072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063	2/17	1	잡난 '법·명분' 덕에, 현저동 주민 길거리 나왔을 판/노사정 합의, 정치권이 깎다, 민변 등 노동법통과 규탄/전국연합 "양심수 석방·안기부 해체" 주장
		2	전주교도소장 공식 사과, 장기수 면회 제약속/주간인권호름 (2월9일-2월 15일)
1064	2/18	1	"동아대 간첩단, 물증없이 선고"- 간첩혐의 3년6월 선고, 가혹행위 언급 없어/민변·참여연대, 법조비리 철거수사 촉구/서준식 씨, 씨네21상 수상
		2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⑩ 해아래집 시구들(에바다농이원 농성단)- '골리앗'에 맞선 '다윗'들
1065	2/19	1	3백회 수요집회, 일 정부 태도 여전/<만화사랑방> 노사정 합의 깎 정치권
		2	목숨까지 앓아간 노점단속, 강남역 불어빵 노점상 급사/참여연대, '비리 법조인 즉각 소환'촉구/관악노동청년회 회원, 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
1066	2/20	1	선별석방 반대·전원석방 촉구, 민가협 거리서명 1만 명/방양근 씨, 보안관찰법 신고 불이행으로 벌금형 선고/관악노동청년회, 이적단체 혐의 수사
		2	<특집>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④ 호주인권위, 차별금지 영역에서 눈부신 성과(곽노현 방승대 교수)
1067	2/21	1	교육부, 각 대학 신입생에 '한총련 비난' 유인물 배포 말짱/<한 권의 책>... '97 정보통신검열백서'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위임)/안기부 해체·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집회
		2	98년민대회, 노점상·철거민 생존권투쟁 결의 다져/<요약>교육부가 대학신입생에게 보내는 글, 서울대 총학생회 반박 성명서
1068	2/24	1	방한중인 엠네스티 대표단, 양심수 가족 만나/국제엠네스티 방한, 양심수 석방촉구 활동/각계 지식인 123명 선언, 노동자 경영참가 법제화 촉구
		2	성희룡 승승판결이 남긴 과제, 성희룡 개념규정 회피 아쉬움/주간인권호름 (2월 16일-2월 22일)
1069	2/25	1	엠네스티, "인권개혁 초기부터 단호하게" 요청/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한총련 전원석방 촉구/민주노총 최명아 부장 운명
		2	<기획연재>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④ 사상전향 강요는 반인권/<한 권의 책>... '외로운 저항' (천주교 제주교구 젊은사제 모임 지음/빛두레 펴냄)
1070	2/26	1	인권활동가들, 새 정부 인권개혁 전망- "경제·사회적 권리 후퇴 예상"/<만화사랑방> 양심수
		2	<기획연재>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⑤(끝) '창살없는 감옥생활' 수배·미복권자
1071	2/27	1	불법체류 단속, 외국인노동자·기업주 모두 고통 - 3D업종 구인난, 4월 집중단속 연기해야/<현장스케치> 민가협 목요일집회, "아빠. 보고싶어요"
		2	성동구치소 노역자 폭행 당해 숨져...검찰, 사인규명 착수/<이 달의 인권영화> 스위트 컨트리/청년정보문화센터, 나진·선봉지구 탁아소에 승급
1072	2/28	1	유엔, '인권운동가 선언' 채택 난항/영광주민, 해폐기물 저장고 건설 반대
		2-3	98년 2월분 총목차 (1053호-1072호)

구독료 납부 바랍니다.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지로번호 7618848(예금주 서준식)